

2009.06

통계의 창



한국통계진흥원

CONTENTS

통계 광장

인구정책_한국교원대학 김태현 교수 • 6

현실을 투영하는 거울을 바라며_통계청 대변인실 강종환 대변인 • ?

통계와 6시그마_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김명룡 실장 • ?

특집「대한민국을 즐겨라」통계로 본 한국 60년(I) • ?

- 빨간색 우체통을 보셨나요? • ?
- 월남에는 없는 월남치마 • ?
- 어디서나 ‘여풍당당’ • ?
- 청춘은 육십부터 • ?
- 처갓집과 화장실은 가까울수록 좋다 • ?

통계 포커스

2009년 OECD 세계포럼개최 현황소개_OECD준비계획단 사무국장 김설희 • ?

건설환경 변화와 건설통계 발전방향_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백성준 교수 • ?

2008년 한국의 사회지표_통계청 김미애 사무관 • ?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충격

_부동산상권개발연구소 정승영 소장 • ?

월간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개발사례_중소기업중앙회 정육조 부장 • ?

통계 연구

사업체통계의 활용실태 및 활용방안_(주)엔아이코리아 이흥철 대표이사 • ?

가구통계의 실태 및 활용방안_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선임연구위원 • ?



외국의 통계제도 소개

일본 통계제도의 개관_통계청 일본주재관 박수윤 과장 • ?

UN&OECD 통계활동_통계청 이영미 주무관 • ?

통계 교실

조사방법론 I 강좌-마케팅조사에 대한 새로운 통찰

_밸류바인컨설팅(주) 구자룡 박사 • ?

e-나라지표 소개 및 활용_통계청 이진석 사무관 • ?

창가의 여유

도박사의 오류_국방대학원 김진우 교수 • ?

꿈의 5할타자_한국통계진흥원 김영진 팀장 • ?

나도 “미스터 주부”_윤옥수 • ?

통계 어설프게알면 독, 제대로알면 약_이호권 • ?

회원사 동정

보건복지가족부 • ?

◆알림창 • ?

◆통계정보(전산자료, 간행물) 이용안내 • ?

◆스토쿠 • ?

◆“한국표준산업분류” 판매 광고 • ?





인구정책

현실을 투영하는 거울을 바라며

통계와 6시그마

특집「대한민국을 즐겨라」통계로 본 한국 60년(Ⅰ)

- 빨간색 우체통을 보셨나요?

- 월남에는 없는 월남치마

- 어디서나 '여풍당당'

- 청춘은 육십부터

- 처갓집과 화장실은 가까울수록 좋다



A g o r a

통계광장

왜 저출산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대학 김태현 교수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1983년에 대체출산수준¹⁾인 2.1명에 도달한 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수준은 더욱 낮아졌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대책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저출산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불과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억제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주장하던 정부가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사회의 지속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출산을 늘려야 한다는 국민운동까지 벌리고 있다.

정부에서 출산장려로 정책의 기초를 정한 후부터 일부에서는 “여성이 도구인가? 언제는 너무 낳는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수를 줄였는데, 지금은 출산하지 않는 것이 여성의 탓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로 자녀수가 적은 것이 문제인가? 한 여성이 자녀를 세 명 이상 낳으면 잘 하고, 한명을 낳거나 자녀가 없으면 잘못된 것인가? 답은 “아니다.”이다. 결혼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갖는 것도 개인이 부모됨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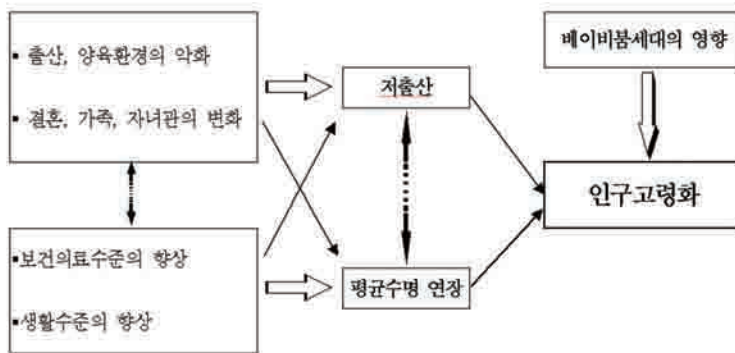
1) 어떤 시점의 연령별 출산율이 일정하게 지속될 때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한다. 이 출산율이 2.1명이 되면 장래인구는 일정하게 되므로 이 출산율을 대체출산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채택하고, 국민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국민운동에 동참하는가? 답은 “사회의 고령화가 너무 심화되어 사회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 중요 원인이 저출산”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고령화의 원인으로서의 저출산을 논의하고, 현재 저출산의 실태와 원인을 찾아본다. 다음은 저출산으로부터 오는 고령화의 사회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저출산대책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기본대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1. 고령화 원인으로서의 저출산

인구 고령화의 원인은 크게 출산율이 낮다는 것과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도 출산율이 더 낮아지거나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은 2007년 현재 남녀평균 79.6년에서 2050년에는 86.0년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이 되는 2020년경부터 고령화는 더욱 빨라진다.

〈그림 1〉 최근 인구의 저출산과 고령화의 원인



자료: 김태현(2004) 보완.

자료: 김태현(2004) 보완.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1990년에 남녀 각각 27.3세와 24.9세로 선진국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늦어져서 2008년에는 각각 31.4세와 28.3세로 4년 정도씩 늦어졌다(〈표 1〉 참조).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것은 단순히 가임기간이 줄

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만혼에 따른 불임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베이비 붐 세대가 출생한 시기는 출생아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1950년대 말경부터 출생아수의 감소경향이 뚜렷해진 1975년경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의 인구가 주위 연령층에 비하여 극히 많았으므로, 이 세대가 자라면서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1980년에는 5-24세에 해당되는 청소년 인구의 비대한 현상을 볼 수 있으며, 20년 후인 2000년에는 25-44세로 노동력의 중심연령층이 된다. 그러나 20년이 더 지난 2020년부터는 1955년생부터 노인인구로 편입되면서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가속된다.

〈표 1〉 초혼연령, 미혼인구구성비, 혼인 및 이혼건수의 추이, 1970-2008

	1970	1980	1990	2000	2005	2008
1) 평균초혼연령(년)						
남자	27.1	27.3	27.9	29.3	30.9	31.4
여자	23.3	24.5	24.9	26.5	27.7	28.3
2) 여자 미혼인구 구성비						
30-34세	1.4	2.9	5.3	10.7	19.0	-
35-39세	0.4	1.0	2.6	4.3	7.6	-
3) 혼인 및 이혼건수						
혼인건수(천)	295	403	399	334	316	328
이혼건수(천)	12	24	46	120	128	117

자료: 1) 통계청(각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

2) 통계청(각연도), 〈인구동태통계연보〉.

3) 통계청(각연도), 〈혼인·이혼통계연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이래 계속하여 감소하는 하향적 변동추이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0명에서 1983년에는 대체출산수준인 2.08명으로 낮아졌다. 1985년부터 1995년경에 이르기까지 합계출산율은 1.5~1.8 사이에서 다소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안정적 변동추이를 보였던 합계출산율은 1998년에 1.47로 처음으로 1.5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00년 이후에는 합계출산율이 더욱 감소하여 2005년 1.08까지 낮아졌으며, 그 후 약간 상승하였으나 2008년(1.19명)에 다시 낮아졌다.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수행한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효과이며, 또 하나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출산·양육환경의 어려움이 커지고, 결혼과 출산을 인생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미혼율은 더욱 높아지고 출산율은 1.08명(2005)까지 낮아졌다. 맞벌이 가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출산과 양육환경의 부담으로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곳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자녀 가정이 증가하면서 1인당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늘어났으므로 자녀가 많을 경우 교육비(특히, 사교육비)의 부담이 커졌다. 이러한 부담을 안고 자녀를 출산하면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직장에서 차별이 상존하는 한 여자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보편혼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약화되고 있다. 최근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에 의하면, 미혼남성의 71.4%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미혼여성은 49.2%만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1998년의 63.3%와 비교하면, 최근에 더욱 약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1년에 90.3%가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했으나 1997년에는 73.7%로 감소하였으며, 2005년에는 더 줄어서 23.4%만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없어도 괜찮다는 응답도 35.0%나 되었다(〈표 3〉 참조). 결혼을 해야 자녀 출산을 기대하는 우리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일지라도 출산을 꼭 하지 않아도 좋다는 가치관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출산수준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표 2〉 미혼남녀(20~44세)의 결혼관, 1998 및 2005

(단위 : %)

성별·연령	반드시 결혼해야 함	결혼하는 편이 좋음	해도 안해도 무방	하지 않는 편이 좋음	모름	계(사례수)
2005 미혼남성 ¹⁾	29.4	42.0	23.5	2.2	3.0	100.0(1,466)
2005 미혼여성 ¹⁾	12.9	36.3	44.9	3.7	2.2	100.0(1,204)
1998 미혼여성 ²⁾	20.3	43.0	32.2	1.3	3.2	100.0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5.

2)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9.

〈표 3〉 유배우부인(15~44세)의 자녀관별 분포, 1991~2005

(단위: %, 명)

년도	반드시 가져야함	반드시 가질 필요 없음			모르겠음	전체
		소계	갖는 것이 좋음	없어도 무관		
1991	90.3	8.5	—	—	1.2	100.0(7,448)
1997	73.7	26.0	16.6	9.4	0.3	100.0(5,409)
2000	58.1	41.5	31.5	10.0	0.4	100.0(6,408)
2003	54.5	44.9	32.3	12.6	0.7	100.0(6,614)
2005	23.4	76.5	41.5	35.0	—	100.0(3,588)

주: 1991년은 15~49세 기혼부인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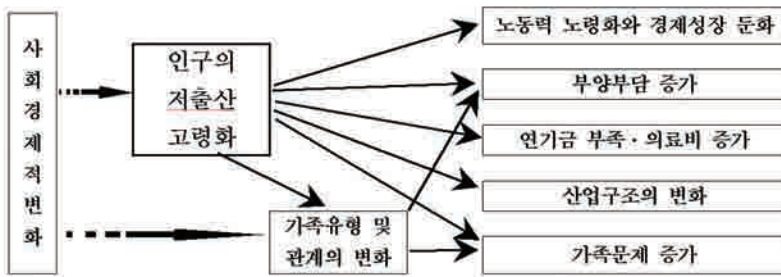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2. 고령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1970년대에 고령사회²⁾에 도달하였으며, 이탈리아와 일본도 최근에 고령사회에 도달하였으므로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정도가 훨씬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길게는 115년(프랑스)에서 짧게는 40년(독일)이 걸렸고, 가장 빨리 진행된 일본의 경우 24년이 소요되었다(통계청, 2006). 우리나라에서는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도달하는 2020년 이후의 고령화는 더욱 빨라져서 2026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사회에 도달한지 불과 8년만이며, OECD국가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일본(12년)보다 4년이나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화, 도시화, 인구억제정책 등의 결과인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 사회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중 중요한 사회경제적 영향만을 정리하면 노동력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부양부담의 급증, 연금금의 부족과 노후 불안, 의료비 증가, 산업구조의 변화, 가족문제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인구의 저출산·고령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 김태현(2004)을 보완.

적절한 출산수준이 뒷받침하지 않는 인구의 고령화는 신규노동력 공급을 감소시키고 노동력의 노령화를 빠르게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수준이 극히 낮은 상태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2)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 라고 한다.

심각하다. 노동공급의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 저축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가 그만큼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노동력과 자본 투입의 감소로 나타나게 될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하나, 노동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이것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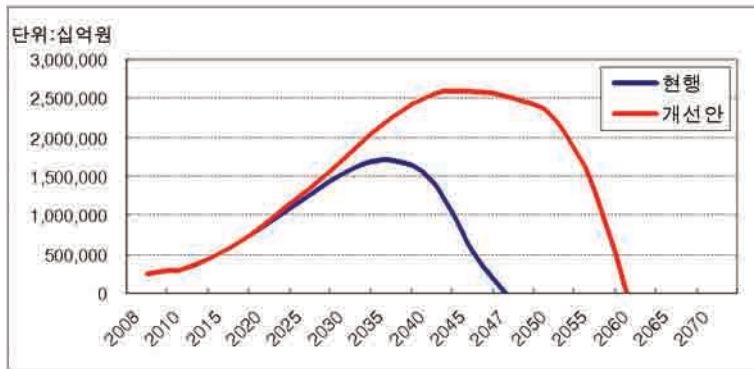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노동력 인구는 감소하게 되므로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010년부터 감소하지만 연금수급자수는 2010년에 235만 명이나 2050년에는 1,027만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국민연금 가입자수에 단순비교한 ³⁾(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68-70). 또한,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각급 학교의 통폐합, 교사수급의 조절 등을 불가피하게 하며, 입대장정 인구의 감소로 군의 구조개편을 촉구하게 된다(대한민국정부, 2008).

적절한 출산수준이 뒷받침하지 않는 인구의 고령화는 신규노동력 공급을 감소시키고 노동력의 노령화를 빠르게 한다. 노동공급의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 저축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투자가 그만큼 줄어들어 경제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노동력과 자본 투입의 감소로 나타나게 될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하나, 노동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이것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EU는 2050년까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1인당 경제성장감소분이 일본 22%, 유럽 19%로 추정(KDI경제분석팀, 2003: 140)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들 국가보다 더 빠른 출산감소와 고령화를 겪게 될 것이므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2007년 말에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고, 급여율은 현행 평균소득자 40년간가입기준 60% 급여율 수준에서 2008년부터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후 매년 0.5% 포인트씩 하향조정하여 2028년에 40% 급여율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그 결과 기금소진 시점을 현행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연기되는 재정안정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고령인구는 급증하고, 생산연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므로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0년경까지 증가하지만, 2050년경부터 약 10년간 모든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제도부양비는 2010년의 13.3에서 2050년에 88.5로 증가하고, 2060년에는 103.0으로 증가할 것이다. 제도부양비가 100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수와 노령연금 수급자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대체율을 60%라고 하고 소득수준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가입자가 소득의 60%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기재정전망



주: 금액은 2005년 불변가격 자료: 김태현 외(2008)에서 재인용.

3. 논의: 목표인구설정과 출산력회복 노력

가. 적정인구로서의 “0”성장인구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나 중국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때의 적정인구 규모는 식량생산과 국력유지에 목표를 두고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인구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적정인구에 대한 논의는 그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최근에는 최선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과 인구균형에서 적정인구의 규모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적정인구나 삶의 질의 개념을 완전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Cloud(1971: 9)는 적정인구규모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 식과 같은 인구 비 Q를 제시하였다. 적당한 1인당 자원소비량을 정할 수 있다면, Q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원공급량에 따라 인구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Q = (\text{총 가능자원}) / (\text{인구} * 1\text{인당 자원소비량})$$

Cloud의 인구 비(Q)는 총 가능자원의 양에 비례하고 인구규모와 1인당 자원소비량에 반비례한다. 생활수준(1인당 자원소비량)을 높이면서 인구 비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자면 인구 증가분보다 총 가능자원의 양의 증가가 빨라야 할 것이다. 인구규모 자체가 극소하지 않은 한 가능한 총 자원의 양을 늘려주면서 인구의 증가를 억제한다면, 인구 비(Q)가 일정하다는 조건하에서 1인당 자원소비량이 늘어나면서 평균 생활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Cloud(1971)는 적정인구의 개념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만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을 정도의 인구”라고 정의하였다. 이 적정인구의 개념과 위의 인구 비(Q)를 종합해 볼 때 인구의 성장률이 「0」에 접근할 때 적정인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장률이 「0」인 상태를 장기간 지속할 때 정지인구⁴⁾가 되는데 이 인구가 적정인구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인구라고 할 수 있다. 정지인구의 연령별 인구구조가 일정하므로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을 수립하고 수행하기 용이하므로 선진사회에서 목표인구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생명표는 출생아수와 사망자수가 동일하고, 연령별 사망률이 일정한 정지인구의 상태가 계속된다는 가정을 둔다. 2007년 우리나라 생명표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는 각각 총인구의 18.6%와 20.6%로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총인구의 약 60%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장래인구의 변화를 보면, 0-14세 인구는 2000년에 21.1%에서 2050년에 8.2%로 감소하며, 반대로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7.2%에서 2050년에 38.2%로 급증하게 된다. 15-64세 인구는 2000년에 71.7%에서 2050년에 55.1%로 급락한다. 이와 같이 장래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은 그 동안 극저수준의 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고령자의 수명이 늘어나는 결과이다. 건강한 장수는 인류의 최대 목표이므로 고령화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도모하자면 출산력 회복만이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⁵⁾

〈표 4〉 우리나라 장래인구와 정지인구의 비교

	정지인구*	우리 나라 장래인구**		
		2000	2020	205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0 - 14세	18.6	21.1	12.4	8.9
15 - 64세	60.8	71.7	72.0	52.9
64세 이상	20.6	7.2	15.6	38.2

주: * 2007년 우리나라 생명표 인구 기준 정지인구(통계청, 2008)

** 2005년 인구 기준 장래 추계인구(통계청, 2006)

나. 가치관 형성을 위한 노력과 출산력 회복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과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나면서 가정과 일의 양립의 어려움은 미혼율의

4) 정지인구는 사망률이 낮은 사회에서 출생아수와 사망자수가 동일한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여 인구증가가 멈추고, 연령별 인구구조가 동일해진 인구이다.

5) 일부에서 남북통일과 해외로부터 이민으로 고령화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한국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출산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고령자에 편입되므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상승으로 나타나고, 결혼연령이 높아졌다. 이혼이 빠르게 증가한 것도 결혼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는 대상이 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배우 부인의 이상자녀수가 2명 정도에서 크게 변하지 않지만 혼인연령이 높아지고, 미혼율이 증가하는데서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혼을 선택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이 자녀를 두는 것도 “인생의 가치”나 “기쁨/보람”을 위하여 선택하고 있다. 자녀의 출산도 개인의 경제활동이나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대상이 되었다.

가족 내 출산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미혼율을 줄이고, 늦어지는 결혼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결혼과 출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의 지원과 함께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김태현, 2004).

영유아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정부의 지원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직장가정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개인의 인식과 태도전환이나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새로운 삶의 행복으로 선택하는 가치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노력만으로 가능할 것이다. 특히, 개인의 가치가 신념으로 정착하는 20대 이후의 성인에게서는 출산과 양육환경의 개선으로 출산율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김태현, 2008). 그러므로 출산율회복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가치형성이 이루어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0~20년 후의 목표 출산율 달성을 위한 노력(교육, 홍보 등)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화문제는 장기예측 하에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의 특성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 방안』.
 김태현(2004),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충격” 제1회 고령사회포럼 발표주제, 대한노인과학단체총연합회.
 김태현(2008), “저출산·고령사회에서 학교인구교육의 방향” 『인구교육』 1: 1-20.
 김태현 외(2008), 「성과지표체계 개선·보완」저출산·고령사회정책성과평가연구(2), 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원대학교.
 대한민국정부(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보완판), 저출산및고령사회대책위원회.
 통계청(1999), 『한국의 사회지표, 1999』,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2008), 『한국인의 생명표, 2007』, 통계청(각 연도), 『혼인이혼통계연보』.
 통계청(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 통계청(각 연도), 『인구동태통계연보』.
 한국개발연구원 경제분석팀(2003), “선진국의 고령화 대처 경험과 시사점”, 『나라경제』, 2003.10월호, pp. 137-144, KDI경제정보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Cloud, Preston (1971), "Resources, Population and Quality of Life," S. Fred Singer (ed.), Is There an Optimum Level of Population? New York: McGraw Hill.



통계청이 바라본 언론 현실을 투영하는 거울을 바라며



통계청 대변인실 **강종환** 대변인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통계’ 하면 꼬리치럼 따라다니는 말이다. 소설가 출신 영국 총리 벤자민 디즈레일리(Benjamin Disraeli)가 했다고 알려진 이 말은 통계의 함정을 경고하는 문구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상대를 이해시키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때 통계수치는 종종 믿음을 주는 근거자료로 제법 쓸만한 설득의 도구가 된다. 하지만 그런 만큼 누군가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오용되거나 남용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역시 통계이다. 이러한 맹점 때문에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과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사용자의 양심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통계를 인용하는 많은 뉴스 생산자들이 통계를 보는 안목을 키우고 경제사회 현실을 통찰하는 노력과 윤리의식을 키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 현실을 반영하는가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각종 뉴스를 접한다. 쏟아져 나오는 뉴스 메시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또는 그 현실세상이 어떠한지 보여주며 우리는 그것을 안방에서 —요즘에는 지하

철안에서, 길거리에서도— 지켜볼 수 있다. 즉 내가 직접 보거나 겪지 않아도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뉴스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다면 뉴스는 정말 사실을 전달하는가?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그것이 사실의 전달이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하지만 그것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뉴스에 대한 비판 연구가들은 기존의 뉴스 연구에서 전제가 되어온 뉴스 객관주의를 부인하고 뉴스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이야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은 뉴스가 허구는 아니지만 사실 그 자체도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으며 오히려 주관이 개입되는 사회 담론¹⁾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뉴스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저널리즘에 있어 뉴스가치는 영향성, 시의성, 근접성, 신기성, 갈등성²⁾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의 경우 갈등적인 요소보다는 인간적으로 흥미롭거나 선정성이 높은 뉴스가 크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심재철, 1997) 편집국에서는 나쁜 뉴스를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고 언론은 태생적 속성상 부정적 내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띤다.(심재철, 1997) 즉, 일탈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보다 더 많이 다루어지는 저널리즘적 관행이 존재해왔다.

더불어, 뉴스 가치(News value)외에도 전문 직업관(Professionalism), 직업윤리(Ethics), 인간관계에서의 자의식(Self-Consciousness)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류창하, 1990)³⁾ 언론인으로서의 직업관과 윤리관, 언론 매체 조직의 내부 문제도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뉴스를 생산에 유효한 작용을 할 수 있다.

1) 담론이란, 어떤 하나의 주제나 소재에 대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통용되는 이야기나 사고의 전달방식을 의미한다.(J.Fiske, 1987)

2) 오택섭, 강현두, 최정호, 《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 2003, pp109~110

3) 류창하(1990)는 뉴스가치 기준을 당위성과 한국적 이데올로기 상황에 맞춰 저명성, 갈등성, 흥미성, 시의성으로, 전문적 직업관은 사회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중립적 성향, 사건 중심 보다는 심층적 해설을 중요시하는 참여적 성향으로 구분했다. 윤리적 문제의 경우 피취재 당사자 및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하는 취재원 중심성향과 수용자 및 다수를 우선에 두는 수용자 중심성향으로 나누었으며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의식적 특성을 반영하여 인간관계(학연, 지연)이 게이트 키퍼에 유용한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한국 언론은 그간 사회발전에 걸맞는 발전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면 그 첫 번째 이유를 '외부' 압력으로 꼽아 왔으나 그보다 본질적이고 주요한 문제는 기자들의 전문 직업관과 윤리관의 결여, 언론 매체가 지닌 미디어 조직의 문제에 기인했다고 보았다.

늘 최악인 경제 통계 보도, 언제 좋은 적이 있었던가.

경제뉴스의 속성 프레임(attribute frame)에는 객관적인 경제 지표나 통계가 주로 사용된다 고 할 수 있겠으나(이완수 · 김유석, 2007) 어떤 기준에서 비교를 하느냐, 어떤 수치를 부각하느냐에 따라 같은 통계 지표라도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신문을 펼쳐서 경제면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자. ‘악화’, ‘최악’, ‘붕괴’, ‘초비상’, ‘급락’, ‘급등’, ‘최고치’, ‘고공행진’ 등의 표현을 쉽게 볼 수 있다. ‘3년래 최악’, ‘16개월래 최대하락폭’ 등 비교를 통해 더 강하게 묘사하기도 한다.

문제는 언론이 그 정도의 적절성을 넘어서는 경제 뉴스를 보도한 적이 많다는 점이다. 언론은 너무 자주 부정적인 내용의 경제 의제를 설정했으며(Bennett, 1988) 경기가 좋을 때는 경제뉴스를 보도하지 않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Fogarty, 2005; Shah et al., 1999) 또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는데도 부정적인 경제뉴스는 오히려 증가했으며(Hetherington, 1996), 경제현실을 왜곡하여 보도한 경우도 있었다.(Nadeau, Niemi, & Fan, 1996)

이와 같은 경제뉴스의 부정적 편향성은 국내에서도 발견된다. 이기현과 이동훈(2004)은 KBS, MBC, SBS의 경제뉴스를 분석하여 긍정적인 논조의 뉴스는 4%인 반면에 부정적인 논조의 뉴스는 37%나 된다고 보고했다.

- 이완수 · 박재영(2008)「국내 경제뉴스 보도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52권 4호 p8

통계청이 내놓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자물가나 고용통계, 산업활동동향 등을 다루는 미디어 뉴스는 부정적인 쪽으로 편향되는 보도 프레임이 두드러진다.

비교적 경기 상황이 좋았던 지난 2007년 ‘7월~12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한 A사와 B사의 기사를 살펴보니, 기사화가 되지 않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사가 나왔더라도 기사 위치, 기사 크기 등이 경기 상황이 나쁠 때보다 그 비중이 작게 처리되었다. 헤드라인 역시 경기가 나쁠 때 나오는 ‘최악’, ‘급등’, ‘급락’ 등 최상급에 해당하는 표현보다 ‘회복세’, ‘두 자릿수 증가’ 등의 비교적 약한 논조를 보인다. 따라서 경기가 좋을 때는 독자들은 경기가 좋다는 뉴스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약되는 것이다.

■ 07~08년도 하반기 산업활동동향 기사화 수

월간 산업활동동향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07	'08
A사	o	o	o	o	o	o	o	o	x	o	x	x	7건	11건
B사	x	o	o	o	o	o	x	o	x	o	o	o		

실물경기 의외로 괜찮네

잇단 대외악재에도 경상수지등 호조...투자는 부진

유가·환율 등 대외 악재에도 9월 경상수자가 연중 최대를 기록하고 생산·소비 등 산업활동도 회복세를 이어가는 등 실물경기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자는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계절조정을 기한 9월 산업생산 지수는 103.8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3% 소폭 늘었다. 그러나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12.5% 증가한 것으로, 석달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했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반도체 장비)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부

천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나 감소했다. 2005년 4월 이후 2년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추석 연휴로 지난해 9월보다 4일 줄어든 설비 수입 통관 일수를 장악하면 실제 감소율은 1.3%로 추정됐다.

소매재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 증가했다. 이는 7월의 9.8%에는 못미쳤지만 8월의 7.2%보다는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4로 지난해보다 0.3 포인트 낮아진 반면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6.4%로 8월의 6.3%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국제수지 동향(9월 경상수지는 수출과 지출자가 크게 늘어 인 24억2천만달러의 흑다. 이로써 올 들어 9월 지출자 누계는 29억2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로 전망됐다.

[07년 산업활동동향 기사]

8월 경상적자 47억달러 사상 최대

고유가와 수출 부진 여파로 지난 달 경상수치가 월(月)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경기

(景氣)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7개월 연속 동반 하락,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0일 '8월 경상수지'가 47억1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8월 적자 폭은 198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액수다. 이에 따라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125억9000만달러로 불어났다.

이날 통계청은 '8월 산업활동동향'에서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기동행(同行)지수(순환변동치)'가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지 7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전수용 기자 jw@chosun.com

[08년 산업활동동향 기사]

경기회복세 주춤

지난 9~10월의 산업생산 증가폭이 둔화되고 설비투자가 작년보다 줄어드는 등 경기(景氣)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 통계청은 28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서 지난 10월 산업생산이 작년 10월에 비해 1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추석 연휴가 작년 10월에 있었던 반면, 올해는 9월로 넘어가 10월의 조업 일수가 2.5일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실제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10월의 하루 평균 생산지수는 작년 10월에 비해 6.3% 증가하는 데 그쳤다. 9~10월의 산업생산을 합쳐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1% 증가했다. 이는 올 7월 14.3%, 8월 11.2%에 비해 경기회복세가 둔화된 것이다.

경기, 지금도 앞으로도 '깜깜'

동행지수·선행지수 7개월째 동반하락

광공업 생산이 두 달째 감소하고, 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전년 동월비)가 1981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7개월째 동반하락하는 등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보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 포인트 떨어지 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 9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8월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9%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9월(-3.1%)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조업 일수가 줄어든 것을 고려해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4.3%에 머물렀다. 전월에 견줘서는 2.2% 감소해, 7월(-0.4%)에 이어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냈다.

생산자재용 출하는 전년 동월에 비해 2.0% 증가했지만 생산자재를 재고는 14.4%나 늘어나는 등 재고도 쌓이고 있다. 소비자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 전월에 견줘서는 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서비스업 생산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 증가하는 데 그쳐 2005년 4월(0.4%)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월에 견줘서는 1.2% 감소했다.

기업의 체감경기도 품종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이 215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심사지수(BSI)는 73으로 전월의 75에서 2 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06년 8월 7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경제 상황이 나쁘면 언론은 부정적 경제 이슈에 주목하며 부정적 경제 뉴스를 생산하지만 경제 상황일 긍정적인 때는 뉴스가치 있는 기사로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뉴스를 보는 대중의 관심도 긍정적인 논조보다는 부정적일 때 강해지기 때문에 언론 산업 구조상 관습

화된 것도 있을 것이다.

물론 경제뉴스의 부정적인 보도성향은 언론의 속성상 감시의 의무를 다한다는 점에서 꼭 비판의 잣대만 들이댈 수 없다. 하지만 그 파장을 감안했을 때 이 논리만으로 뉴스 생산자들의 책임을 덜기에는 객관적 시각으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아쉽다.

경제적 이슈에 있어 객관성을 상실한 지나친 부정적 보도는 새빨간 거짓말보다 더한 ‘사실보다 더 사실 같은’, ‘마치 수치를 통해 객관화가 입증된 것 같은’ 거짓말들을 수없이 유통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러한 보도 성향은 궁극적으로 가정과 기업의 경제 행위와 국가 정책 수립 등에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된 경제 위기론은 국민들에게 경제 현실을 왜곡하여 전달함으로써 시장을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와 불황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완수·박재영(2008)은 객관적인 통계자료에 기초하는 경우가 많은 경제 뉴스임에도 정부 시기별, 매체별로 논조가 달라짐을 증명하면서 국내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자성을 요청하고 있다.

여론 형성과 특정문제에 대한 사회집단의 동의를 이끌어가는 데 언론의 힘이 매우 강력하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우리의 인식과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권력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전달하는 이야기(담론)가 왜곡되면 우리도 왜곡된 현실의 상을 보게 되고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언론이 경제 관련 이슈 중 특정 사안을 보도하지 않거나 사실 정황은 맞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태도, 논조의 방향에 다르더라도 언론에 큰 책임을 묻지 않고 있으며 법적 규제도 없다. 따라서 보도를 접하는 수용자들도 언론의 경제 뉴스에 대한 보도 경향이 어떠한지, 우선 순위로 두는 뉴스 가치는 무엇인지,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공정한지를 검토하여 언론이 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실적 영향력 측면에서 볼 때, 언론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적기관(김연중, 1994)으로서 경제 현실을 전달하는 데 편향적 태도를 지양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 류창하(1990). Gatekeeping의 내적 통제에 관한 연구 : 기자들의 유스 가치관과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신문학보」 제25호
- 김연중(1994). 뉴스의 객관성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 : 우루과이라운드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31호
- 심재철(1997). 경제뉴스와 경제현실의 언론학적 모델, 「경제뉴스와 경제현실 : 바람직한 경제보도를 위한 논쟁」, 서울 : 삼성언론재단
- 심재철(1999). 경제보도의 현실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99' 봄철 학술발표대회
- 이완수·김유식(2007). 국내 경제뉴스 보도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07' 봄철 정기학술대회
- 이완수·박재영(2008)「국내 경제뉴스 보도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52권 4호

통계와 6시그마

한국통계진흥원 '통계의 창'
6월호 기고



우정사업본부 **김명룡** 경영기획실장

1945년 8월 일본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원자폭탄 하나로 미국에게 무릎을 꿇고 만다. 진주만을 폭격하며 기세등등하게 미국에 겨누었던 총과 칼도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하지만 이 원자폭탄은 일본이 부국강병을 강화하게 만들었고, 채 40년도 되지 않아 패전국에서 미국에 못지 않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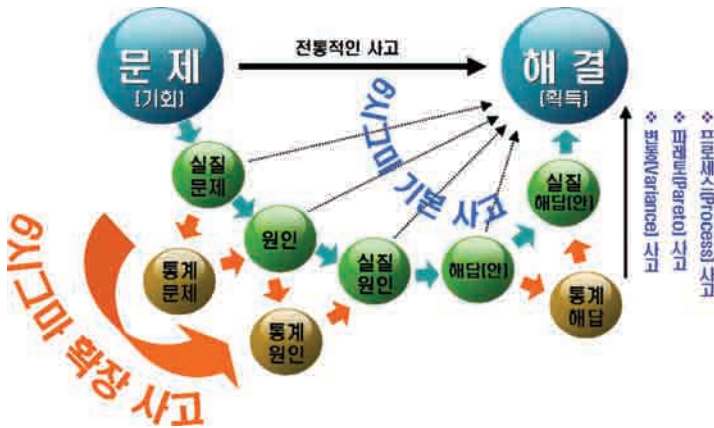
이러한 일본을 따돌리기 위해 미국이 개발한 또 하나의 원자폭탄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6시그마다. 6시그마는 '품질의 일본'을 '품질'로 상대한 강력한 경영무기였던 것이다.

6시그마는 통계다

미국 모토롤라사에서 처음 시작한 6시그마가 국내의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혁신 톨로 사용되는 것은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분석방식에 기인한다.

6시그마는 철저하게 통계적 사고를 요구한다. 하지만 6시그마를 활용하려면 통계를 잘 알아야 한다는 막연한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방법이며 사고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투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 다

음, 이를 계속 관리함으로써 통계적인 사고를 기업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돕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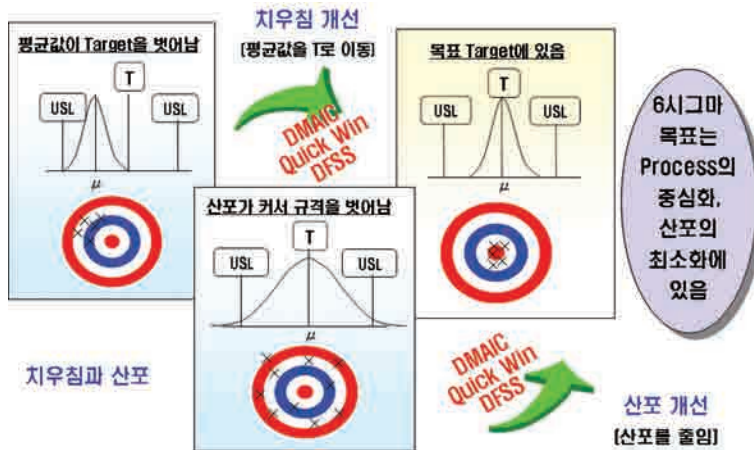


우리는 보통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해결 방안을 찾는다. 즉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고민에 빠지게 된다. 바로 해결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후에 또 문제가 재발하기도 한다. 6시그마 방법론은 이런 점을 해결해 준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통계적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하게 된다. 그중 핵심적인 원인 인자를 찾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고 최선의 해결안을 실행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산포를 줄여라

또한 6시그마는 평균과 편차를 개선해 주는 툴이다. 우리는 평균과 편차에 대하여 특별한 학문적인 지식 없이도 그 중요성을 이미 경험해 왔다. 보통 남자는 군대생활 시에 사격훈련을 받게 된다. 이때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형태, 즉 탄착점이 흩어진 경우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기합을 받곤 한다. 이러한 결과를 고치기 위하여 먼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에는 클릭을 반대로 조정하여 영점을 맞추면 대부분 과녁에 명중하게 된다. 두 번째는 탄착군이 흩어진 경우인데 이때는 고치기가 쉽지 않다. 즉 사격할 때에 호흡불량이나 격발불량 등으로 인하여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균과 편차(산포)를 줄이는 문제는 일반 경영활동의 거의 모든 곳에 산재해 있다. 매일의 의사결정이 이것과 관련된 것이며,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이 경영활동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경영활동에 존재하는 편차를 찾아내어 그 변동 요인을 제거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 6시그마의 기본 개념이다.

6시그마로 잡은 두마리 토끼

우정사업본부는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2003년부터 6시그마를 도입하여 조직의 핵심적인 혁신활동으로 추진한 결과,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11년 연속 흑자경영과 10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라는 두 마리 토끼, 즉 기업성과 공공성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각종 제도,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수행된 과제는 총 1,211개로 우정사업 전 분야에 걸쳐 산재해 있었던 문제들이 다뤄졌으며, 약 2,900여 개의 개선안이 도출됐다. 또 전문인력 양성 부문에서는 MBB 36명, BB 162명 등 1,228명의 개선전문가를 양성했다. 이에 따른 재무성과도 1,286억 원에 달한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올해를 '6시그마 자체 추진 원년'으로 선포하고 외부 컨설팅기관의 지원없이 교육원에 '6시그마 아카데미'를 열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 양성한 MBB가 직접 과제를 지도하고 있다. 재무성과도 230억 원을 목표로 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 6시그마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모든 직원들이 통계적인 마인드와 논리적인 사고를 체득하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고객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 능력 등 개개인의 역량이 향상된 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성과이다.

이제 6시그마는 기업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통계청, 특허청 등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단순히 업무 영역 뿐 아니라 ‘아이 성적 올리기’, ‘남편 몸짱 만들기’, ‘커피전문점 매출 올리기’ 등 생활 속의 6시그마로 발전하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개인이나 조직의 경쟁력은 바로 정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 분석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한 6시그마는 이 같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효과적인 수집과 분석, 그리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해결안을 제공하는 틀임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이를 활용하고 안하고는 조직이나 개개인의 선택에 달렸다.

정부수립60년 특집

대한민국을 즐거라



발간 배경

정부수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변화의 모습을 통계를 통해 널리 알리고자 「대한민국을 즐겨라」를 발간하였다.

숫자의 증감에 의한 변화를 알리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인간의 체취가 느껴지는 우리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때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통계를 실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성 : 지난 60년의 변화상을 총 9개 마당으로 구성하였다.

각 마당에는 역경과 곤란을 이겨낸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100 대주제로 나누어 통계수치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하여 우리 경제·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기술하였다.

특집 연재

본 특집란에서는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을 즐겨라, 한국기업의 힘으로 세 개의 주제를 나누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고자한다.

◇ 2008년 하반기 : 꿈은 이루어진다

- 고난을 이겨낸 대한민국

◇ 2009년 상반기 : 대한민국을 즐겨라

- 달라진 우리 시대상

◇ 2009년 하반기 : 한국기업의 힘

-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기업

「대한민국을 즐겨라」

통계로 본 한국 60년(Ⅰ)

- 빨간색 우체통을 보셨나요?
- 월남에는 없는 월남치마
- 어디서나 '여풍당당'
- 청춘은 육십부터
- 처갓집과 화장실은 가까울수록 좋다

빨간색 우체통



#장면1

여기는 월남 땅 ‘투이 · 호아’. 멀리 동쪽 하늘에 우편물을 실은 수송기가 보이면 ‘편지가 온다’는 청룡부대원의 환호성이 넓은 황야에 물결칩니다. 그러나 그리움과 반가움에 휩싸였던 몇몇 전우의 얼굴에 금세 실망의 그림자가 깃듭니다. 그렇게도 기다렸던 편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골탕 먹는 것은 체신병. 상관은 당장 ‘너라도 편지 써서 우표 붙여가지고 오라’고 고함치곤 합니다.¹⁾

장면 2

경찰청은 전국 4만여 전 · 의경 대원 전원에게 ‘○○○(대원 이름)@전의경’ 형식의 한글 이메일

1) 중앙일보, 1966년 5월 6일자 3면

일 주소를 나눠 주었습니다. 전·의경 대원은 규정상 휴대전화를 가질 수 없어 주로 편지나 공중전화로 외부와 연락합니다. 그러나 편지는 오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신세대 대원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의경 대원이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을 자주 취하지 못해 사회와 단절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손쉽게 연락할 수 있는 한글 주소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²⁾

‘장면 1’은 1966년 베트남에 파병된 청룡부대 체신병이 보낸 편지다. 우리 장병들에게 위문 편지를 많이 보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다. ‘장면 2’는 2006년 9월 경찰청이 전국 전·의경에게 이메일 주소를 배정하기로 했다는 기사의 일부다.

1966년과 2006년의 간극이 멀게만 느껴진다. ‘편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던 단어였다. 베트남 정글에서 고국 소식을 학수고대하던 병사, 서울로 돈 벌러 간 자식 생각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시골 노모,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 한 연인, 서독으로 돈 벌러 간 광부의 아내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하기 전까지 편지는 서민에게 가장 친숙한 통신수단이었다. 거기엔 통신이라는 까칠한 단어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한 자 한 자 손으로 써내려 간 편지에는 보내는 이의 마음과 숨결까지 담겼다. 편지를 보내놓고 답장을 기다리며 매일 하릴없이 우편함을 열어보던 설렘은 추억으로 남았다.

1950년 4,210만 건에 불과했던 우편물 접수 건수는 1970년 5억 7,000만 건으로 불었다. 20년 만에 14배가 됐다.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이야 기쁘고 반가웠겠지만 이를 배달해야 하는 집배원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1970년 5월 31일 ‘집배원의 날’ 기사 한 토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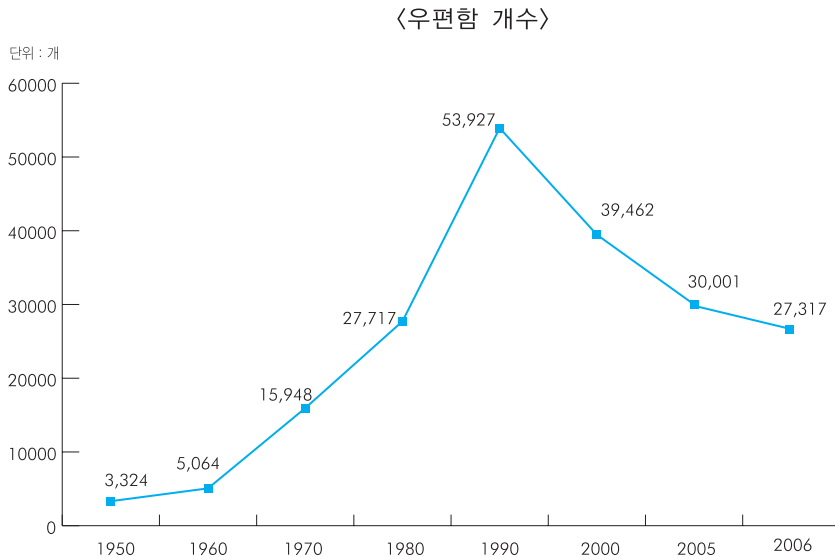
“현재 전국의 우편집배원 수는 8,382명. 전보 배달원 수는 930명으로 모두 9,312명이다. 전국의 연간 우편물은 69년 5억5,283만 367통이었다. 한 사람이 하루 평균 160여 통의 편지나 전보를 배달한 꼴이다. (중략) 일반 국민의 협조가 아쉽다. 우선 가구마다 문패가 없다. 체신부 조사로는 전국 525만 1,480가구 중 문패를 달고 있는 가구는 150만6,213가구(29%)밖에 안 된다.”³⁾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우편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짜낸 묘안은 우편번호였다. 1970년 7월 1일 다섯 자리 번호가 처음 도입됐다. 우편번호는 배달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2) 중앙일보, 2006년 9월 6일자 11면

3) 중앙일보, 1970년 5월 28일자

주소를 알아보기 어렵게 쓴 편지도 우편번호만으로 대략의 위치를 알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잘못 배달되는 우편물이 확 줄었다.



출처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1988년 2월 1일부터는 우편번호를 다섯 자리에서 여섯 자리로 바꾸고 대형 빌딩과 우체국 서함에도 우편번호를 붙였다. 편지의 전성시대는 이 무렵이었다. 전국 어느 곳을가나 빨간색 우체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1950년 3,324개에 불과했던 우체통은 1993년 5만 7,599개로 늘어났다. 우표 판매량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1965년 2억 6,900만 매였던 게 1980년 10억 2,500만 매가 됐다.

하지만 편지의 시대는 1998년 한국통신이 기존 전화선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ADSL)를 개시하면서 내리막을 탔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1999년 27만 8,000명에서 1년 만인 2000년 무려 10배가 넘는 387만 명으로 늘었다. 2008년 7월 말에는 1,509만 명으로 불었다. 9년 만에 전국 가구의 95%가 초고속 인터넷을 접하게 된 것이다. 편하고 빠른 이메일에 밀려 편지가 설 자리는 빠르게 좁아졌다.

편지가 이메일로 대체되자 우체통도 쓸모없는 시설로 전락했다. 1993년 5만 7,000여개였던 우체통은 2000년 4만 개 밑으로 떨어지더니 2006년엔 2만 7,317개로 더 줄었다. 이젠 서울에

서조차 우체통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표 판매량도 1990년대 10억 매에서 2000년 5억 매로 줄어든 뒤 2006년 2억 8,400만 매로 196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다. 모르는 사람끼리 편지를 주고받던 ‘펜팔’도 인터넷 채팅에 밀려 점차 사라졌다.

우편의 위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컴퓨터가 구해줬다. ‘광고우편(Direct Mailing)’이 활성화한 것이다. DM은 1966년 3월에 이미 도입됐지만 초기에는 유명무실했다. 그런데 배달체계가 안정되고 컴퓨터 데이터처리 기술의 발달로 수백만 명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게 되자 우편을 이용한 광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1993년을 정점으로 우편함은 빠른 속도로 줄었지만 우편물 접수 건수는 2002년까지 꾸준히 늘어난 것은 이 때문이다.

휴대전화의 대중화는 이메일조차도 촌스럽게 만들었다.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한 뒤 키보드를 두드려 써야 하는 이메일 대신 짧고 간단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신세대 아이콘으로 떠오른 것이다. 소위 ‘엄지족’의 등장이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말한 ‘생각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무선통신과 휴대전화기의 빠른 진화는 문자 메시지조차 동영상 메시지로 바뀌가고 있다. 그럴수록 서랍 속에 간직하며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던 빛바랜 편지의 향수는 더 아련해진다.

월남에는 없는 월남치마



패션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 월남치마

한국에 패션이란 개념을 처음 일깨운 옷은 ‘월남치마’다. 원래 이름은 ‘롱 플래어 스커트’다. 허리부분에 고무줄을 넣고 양쪽 선단 없이 통으로 만든 긴치마다.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오고 폭도 넓어 한복에 익숙해진 여인도 쉽게 입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에선 월남치마를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 베트남 여성은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즐겨입는다. 베트남에는 없는 옷에 월남치마란 이름이 붙은 까닭은 베트남 전쟁 때문이다. 전쟁에 참전했다 귀국길에 오른 병사들이 고향의 애인이나 어머니에게 줄 선물로 신식 치마를 많이 사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월남치마로 불리게 됐다.

월남치마가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성 패션은 한복 아니면 몸빼 바지였다. 몸빼는 원래 일본 여성의 노동복이다. 풍성한 바지에 허리와 발목 부분만 끈으로 묶어 활동성을 높인 옷이다. 1930년대 만주침략을 본격화한 일제가 조선 여성을 전시 체제에 동원하려 하자 한복이 거추장스러웠다. 그래서 착안한 게 몸빼 보급이었다. 그런데 조선의 여성은 바지를 외출복으로 입어본 적이 없었다. ‘바지=고쟁이’라는 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몸빼를 입고 외출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

그러자 일제는 강제로 몸빼를 입게 했다. 몸빼를입지 않은 여인은 관공서나 공공 집회장 출입을 금지시켰다. 전차나 버스도 타지 못하게했다. 처음엔 조선 여성들도 마지못해 몸빼를 입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한복보다 편하다는 점 때문에 작업복은 물론 외출복으로도 입게 됐다.

편하긴 했지만 몸빼는 어디까지나 작업복일 뿐이었다. 한복 아니면 몸빼밖에 없었던여인들에게 바다를 건너온 월남치마는 금세 패션 아이콘이 됐다. 색깔도 다양해졌고 모양도 여러 가지로 변형됐다. 월남치마의 등장은 패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여성들 사이에 영화와 잡지를 통해 소개된 서양 패션에 대한 동경이 싹 텄다. 높아진 국민소득도 여성의 눈높이를 끌어올렸다.

1967년 윤복희가 입고 온 미니스커트는 파격적인 변화를 갈망한 여성들에게 오랜 가뭄 끝의 소나기와 같은 시원한 충격이었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낸 미니스커트는 ‘잘 살아 보세’라는 구호 아래 희망이 넘쳤던 시대 분위기와도 맥이 통했다. 발목까지 치렁치렁했던 치맛자락은 단숨에 무릎 위로 올라갔다.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긴 재킷에 짧은 미니스커트는 젊은 여성의 패션 아이콘이었다.스커트 길이는 점점 더 짧아져 나중엔 속옷만 겨우 가릴 정도인 ‘마이크로 미니’ 까지 나왔다. ‘길에서 돈을 떨어뜨려도 절대 구부리고 줍지 말라’, ‘의자에 앉을 때는 다리를 꼬는 편이 안전하다’는 주의사항이 여성 잡지의 단골 메뉴였다. 보다 못한 정부가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고 나서자 스커트 밑단에 살색 옷감을 덧댄 눈속임 미니까지 나왔다. 미니스커트 신드롬은 남성 패션에도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 중반 비틀스와 같은 외국 스타가국내에 소개되자 젊은이들은 이들의 옷차림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패션의 르네상스 1970년대

1970년대는 패션의 르네상스 시기다. 그동안 눌러 있던 패션 욕구가 화산이 폭발하듯분출했다. 중간 길이 스커트인 ‘미디’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맥시’, 바지 아랫부분의 폭이 넓은 ‘판탈롱’과 ‘나팔바지’ 등 다양한 패션이 쏟아졌다. 미니스커트가 단속 대상이되자 핫팬츠로 유행이 옮겨가기도 했다.

1970년대 패션의 획을 긋는 또 다른 아이콘은 청바지였다. 색 바랜 청바지에 장발과통기타·생맥주로 상징되는 포크 문화가 젊은이들을 열광시켰다. 청바지 문화는 군사정부에 대한 저항의 아이콘이기도 했다. 당시 미국에선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었다. 여기에 주도적

으로 참여한 히피족의 문화가 청바지와 장발이었다. 그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청바지와 장발은 군사정부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1970년대 후반엔 남녀의 구별이 모호해진 ‘유니섹스 룩’도 나왔다. 뒷모습만으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때는 남녀 모두가 나팔바지 모양의 청바지에 와이셔츠·티셔츠 차림을 선호했고 머리 모양도 굽은 웨이브의 장발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는 캐주얼의 시대다. 교복 자율화에 따라 10대 청소년들이 패션의 새로운 소비자로 떠올랐다. 이른바 ‘뽕’으로 불린 패드가 들어간 잠바나 재킷이 인기를 끌었고, 청바지는 군데군데 하얗게 탈색시킨 ‘스노진’이 유행이었다. 바지의 아랫단 폭을 줄여 발목에 딱 붙여 입는 이른바 디스코 청바지는 교복 자율화 이후 청소년의 대표적인 패션이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은 스포츠웨어의 유행을 불러왔다. 나이키나 프로스펙스, 르까프와 같은 스포츠 전문 브랜드가 유행하기 시작한 건 이 무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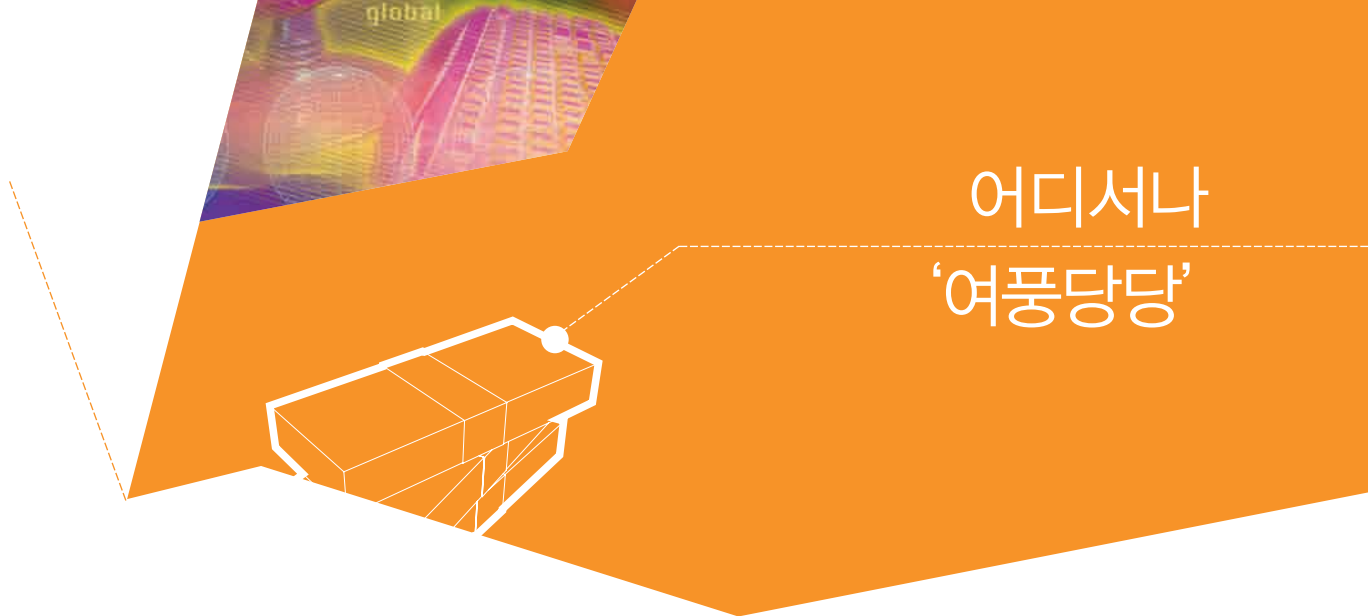
1990년대에는 연예인이 패션을 선도하기 시작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선보인 힙합패션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입고 나온 헐렁한 복장과 병거지 모자는 생소하던 미국의 힙합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계기가 됐다.

유행은 돌고 돈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처럼 2000년대 들어서자 다시 복고 바람이 거세다. 여성적인매력을 한껏 발산하는 미니스커트의 인기가 다시 뜨거워졌고, 비틀즈 룩·헵번 스타일처럼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주름잡았던 패션이 현대적인 재해석을 거쳐 다시 등장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유행한 패션이 한국에 들어오는 데는 적어도 2~3년이 걸렸다. 이에 반해 요즘은 국내외 패션의 시차가 거의 없어졌다. 외국의 유명 연예인이 입고 나와 화제가 된 옷은 일주일도 안돼 서울 동대문 의류 상가에 걸린다. 러시아·중국·일본의 보따리 장사들이 동대문시장을 즐겨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무대에서 한국은 패션의 변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옷을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독창적인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에선 밀리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한국인은 튜다. 세련된 옷차림 때문이다. 그런 감각을 패션산업으로 키워낸다면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패션 중심지로 부상할 수도 있다.



어디서나 ‘여풍당당’

수석 힙쓰는 여성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봄 서울대 법과대학은 술렁거렸다. 개교 이래 첫 여학생이 입학했기 때문이다. 설렘도 잠시. 알고 보니 네 자녀를 둔 32세의 가정주부였다. 여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길 바랬던 법대생들이야 실망이 컸겠지만 그녀의 만학열정은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이 여대생은 이후로도 이름 앞에 ‘최초’를 많이 달았다. 최초의 여성 사법시험 합격자, 최초의 여성변호사였다. 바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세운 여성운동가 고(故) 이태영 박사의 이야기다.

이태영은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남편 고(故) 정일형 전 외무부 장관의 뒷바라지로 청춘을 보냈다. 밤새워 재봉틀을 돌리면서 혼자 생계를 꾸렸다. 그러다 광복을 맞았고, “이제는 당신 차례”라는 남편의 권유에 사법고시에 도전했다.

강인했던 그녀도 평생토록 지우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 바로 여성 차별이었다.

당시 판사 임명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김병로 대법원장이 요청한 판사 임용 후보 중 이태영을 제외시켰다. “여성은 아직 이르니 가당치 않다”는 게 이승만이 밝힌 거부 이유였다. 당시 법원과 검찰에서 함께 실무 수습을 하던 남자 동기생들은 모두 판사나 검사로 임용됐으나, 그만 유독 대상에서 빠지는 바람에 그는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20대의 새파란 청년들이 모두 판사 임명을 받는 터에 38세나 된 네 아이의 엄마요, 세상 풍파를 다 겪은 첫 여자 고시합격자에게 감히 어떻게 여자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박사는 1952년 여성 최초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도 판사가 되지 못한 설움을 이렇게 회고록에 썼다.

이태영은 나중에 법전 편찬위원장이 된 김병로를 찾아가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때도 김병로는 “조그만 것이 법률 줄이나 배웠다고 벌써 꼬리를 휘젓고 다니느냐”고 호통을 쳤다. 훗날 이태영은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1950년대에는 여성 차별의 벽이 그만큼 높았다.

1970년대까지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성이 대기업이나 은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혼하면 사직하겠다’, ‘30세에 그만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야 했다. 승진·급여·연수·교육 등 모든 것을 남성에게 양보해야 했다.

남녀차별은 국가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체신부에서는 여성으로만 구성된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40세로 묶어 공공연히 여성을 차별했다. 노동청은 대한간호협회가 추천한 해외파견 공무원 후보를 기혼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합격시켜 물의를 빚기도했다.¹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은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부터다. 그 해 ‘자주 독립 국가’의 국민으로서 여성도 ‘참정권’을 처음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는 법조문에만 해당된 이야기일 뿐이었다. 대다수 여성의 사회활동은 제약됐고, 여성 차별

10) 조선일보, 1975년 3월 1일자 7면

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면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결국 의식 있는 젊은 여성의 관심은 자녀 교육으로 쏠렸다. 이것은 ‘부모 된 도리’ 라기보다는 자아 성취의 한 방법이 었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빠르게 개선됐다. 딸들은 이 때부터 어머니가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서서히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여풍(女風)의 물결도 거세졌다. 각종 국가고시의 수석은 여성의 독무대이고 취업시장·스포츠 분야 까지 여인천하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여성의 활약이 부쩍 늘었다. 남성이 독과점하다시피 했던 직업인 기관사와 토목기사 중에도 여성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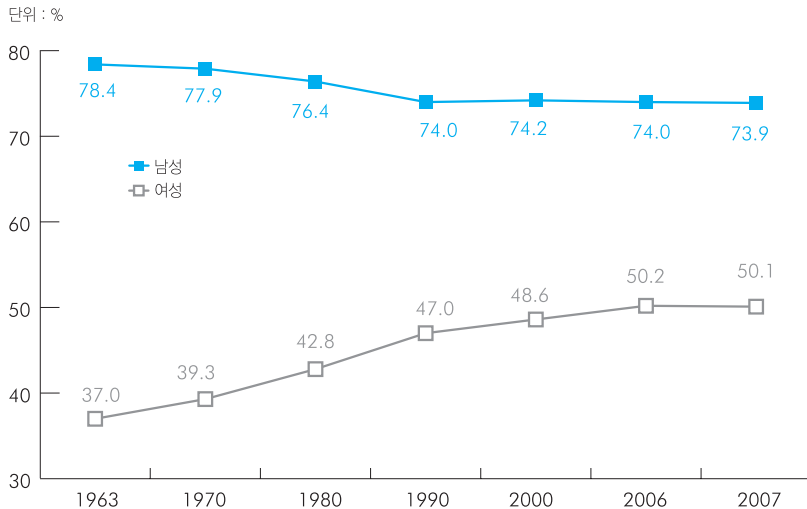
2007년 주요 고시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외무고시가 67.7%, 사법고시가 35.2%, 행정고시가 49%로 해마다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980년 3.6%에 불과하던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2007년 19.3%로 5배 가까이 불어났다.¹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활발해졌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3년 37%에서 2007년 50.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78.4%에서 73.9%로 4.5%포인트 떨어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여성의 고용률도 34.3%에서 48.9%로 높아졌다.

학교에서도 여학생의 두각이 돋보인다. 남녀공학 중·고등학교에서는 전교 10등 안에 드는 남학생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아들 공부시키기』란 책이 인기를 끌고, 남녀를 구분해서 석차를 매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을까. 대학에서도 여성 총학생회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전국 대학 신문사 편집장의 3분의2는 여성이 차지했다. 한국인 1호 우주인도 여성이다.

11) 통계청, 「통계로 본 여성의 삶」, 2008년

〈경제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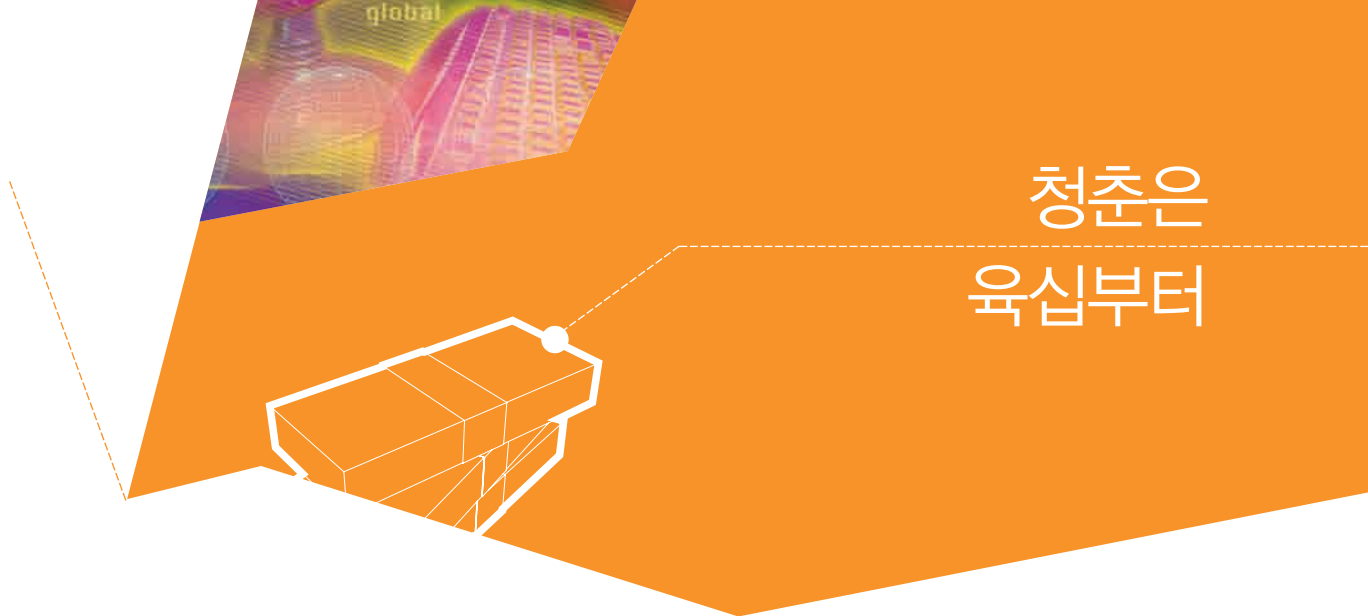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당당한 여풍은 여성의 권익을 제도적으로도 크게 신장시켰다. 여성가족부가 출범했고, 호주제가 폐지됐으며, 헌법재판소는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물론 아직 한국 여성이 성차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07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평등지수는 0.6409로 128개 국가운데 97위였다.¹²⁾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다. 다만 잠자던 여성이 깨어나기 시작한 만큼 성차별의 벽도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이다.

12) 스웨덴이 0.8146으로 1위, 노르웨이가 0.8059로 2위, 핀란드가 0.8044로 3위, 미국은 0.7002로 31위, 일본은 0.6455로 91위였다.



청춘은 육십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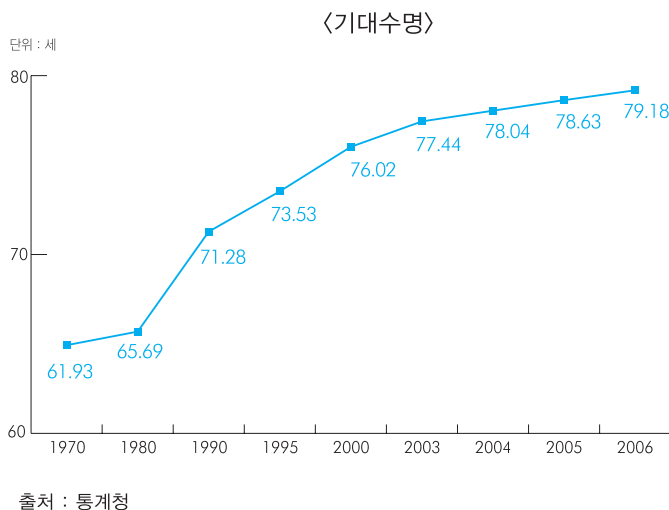
고령화로 달라진 노인 문화

1960년대 시골의 환갑잔치는 동네의 큰 경사였다. 환갑을 맞은 어른은 산해진미와 과일을 높이 괴어 올린 상 앞에서 일가와 자손들로부터 축수(祝壽)술잔을 받았다. 국수 가락처럼 오래 살라는 의미에서 손님에게 국수를 돌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초대받은 동네 사람들은 흥겹게 놀아주는 것이 예의였다. 환갑상에 오른 밤이나 대추·떡을 먹은 사람 또한 장수한다고 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손에는 떡과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다.

살림살이가 변변찮은 자식들이라도 아버지·어머니의 환갑 때는 잔치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다. 수십 리 떨어진 읍내 사진관의 사진사를 불러 기념사진을 찍었고, 광대를 불러 놀이판을 즐겼다. 모두가 흥에 겨워 잔치가 이틀씩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만 해도 50세만 넘으면 동네 어르신 대접을받을 때였으니 60세를 넘긴 것은 당연히 축하받을일이었다. 1960년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수명은 52.4세. 1970년만 해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불과했다. 의료 수준이 열악하다 보니 장수하는 사람이 귀했다.

요즘은 60세를 갓 넘긴 사람들은 노인대학에 명함도 못 내민다. 환갑잔치는커녕 고희(古稀)잔치도 쑥스럽다.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수명이 1960년 52.4세 에서 2005년 78.6세로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환갑잔치를 달가워하지 않는 노인도 적지 않다. 북망산에 가라며떠미는 것 같아 싫다는 것이다. 심지어 환갑잔치를 차려주는 자식보다 무심경하게 지나치는 자식이 더 효자라는 얘기도 나온다.

적극적이고 개성 있게 노후를 즐기려는 실버 세대가 늘면서 업그레이드된 환갑잔치도 나온다. 2008년 5월 환갑을 맞은 김청준 씨의 회갑도 그랬다. 손님들을 초대해 떠들썩한잔치를 벌이는 대신 아내와 호텔 디럭스 룸에서 오붓하게 하룻밤을 보냈다. 세련된 실버세대를 위해 만들어진 호텔 패키지 상품 초대권을 자녀들이 선물한 것이다. 낮 시간엔 개인 골프 강습을 즐겼고, 저녁에는 중국 황실 보양요리와 건강차를 대접받았다. “자식들도번거롭지 않고 아내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니 좋았다”는 것이 김씨의 소감이다.

요즘엔 한방병원 특별진료 우대권이나, 피부과 레이저 시술 진료권으로 환갑잔치를대신하기도 하고, 여유가 있는 집안은 근사한 크루즈 여행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등 예전과 색다른 환갑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배우자와 사별한 50~60대 솔로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독수공방하던 과거와 달리 장·노년층의 성(性)과 사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당당하게 이성교제를 즐기고 재혼을 결

심하는 노인이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6,202명에 불과하던 50대 이상 재혼 인구는 2007년 2만3,339명으로 3.8배가 됐다. 60대 이상 재혼 인구도 2007년에만 5,754명으로 1990년(1,763명)의 3.3배다.

자녀 눈치를 보지 않는 노년층의 인식 변화와 함께 부모가 새로운 짝을 찾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식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실버 세대의 재혼을 늘리는 데 한몫했다. 예전처럼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적어지고 재혼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생긴 변화다.

최근에는 유명 결혼정보업체에 나이나 외모·경제력 등 자신의 요구사항을 당당하게 밝히고 배우자를 찾는 장·노년층의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 60~70대 노년층을 대상으로 재혼을 알선하는 전문회사가 생기는 등 결혼정보업체도 발 빠르게 움직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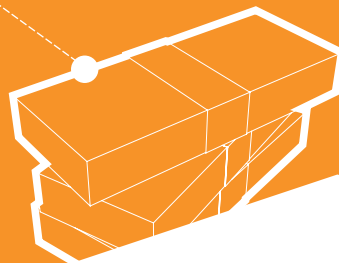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산업도 급팽창하고 있다. 수영장·사우나 시설을 갖춘 실버레지던스, 노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 실버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각종 도우미 서비스가 그런 예다.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2년 12조 8,000억 원에서 2010년에는 43조 9,000억 원, 2020년에는 148조 6,000억 원으로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0년 고령화 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2018년에는 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 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¹⁸⁾

‘청춘은 육십부터’라는 말이 현실화됐지만 우리 사회의 준비는 미흡하다. 갈수록 늘어날 노인 실업자를 일터로 흡수할 방안이 시급하다. 연금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18) 한국은행,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과제」, 2007년 5월

처갓집과 화장실은 가까울수록 좋다



전중우 한국통계

신가족의 탄생

1960년대만 해도 3대, 심지어 4대가 한 집에 사는 풍경이 익숙했다. 아직 농업 국가를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족 중심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 자연스레 3대·4대가 모여 살게 됐다. 가족 수가 10명이 넘는 대가족도 드물지 않았다.

1960년 우리나라 가구 당 평균 가구원 수는 5.6명이었다. 70년에도 5명이 넘었다. 할아버지·할머니는 교장선생님, 아버지·어머니는 담임선생님의 역할을 했다. 아이들은 이런 대가족 문화 속에서 예의를 배우고 삶의 지혜를 터득했다.

식사를 할 때도 ‘상물림’이 엄격했다. 어른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여자들과 아랫사람들이 남은 음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윗사람은 으레 음식을 남겨 다음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했다.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으면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여겼다.

대가족제도에서는 가정의 권위가 강했다. 농경사회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남자의 발언권이 여자보다쌌다. 시집온 며느리에겐 ‘출가외인’이란 딱지가 붙었다. 친정집 출입도 자주 할 수 없었다. 여자들은 농사에 집안일까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다.

197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쳐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탈바꿈하자 가족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도시의 각박한 생활은 대가족의 해체를 강요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떠난 자식들이 늘면서 도시에는 핵가족이 일반화했다.

자연히 가부장제의 권위에 눌려 있던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가족 전체보다는 개인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됐다. 혈연적 가족보다는 업무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더 중요해지기도 했다. 가구 당 평균 가구원 수도 1980년 4.6명에서 1995년 3.3명으로 줄었다. ‘4인 가족’이 보통 가정의 모델이 됐다. 정부나 언론이 생활비나 소득 통계를 낼 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요즘엔 4인 가족의 틀조차 허물어지고 있다. 2005년 가구 당 평균 식구 수는 2.9명이었다. 한 집에 사는 가족 수가 세 사람이 채 안 된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신(新)가족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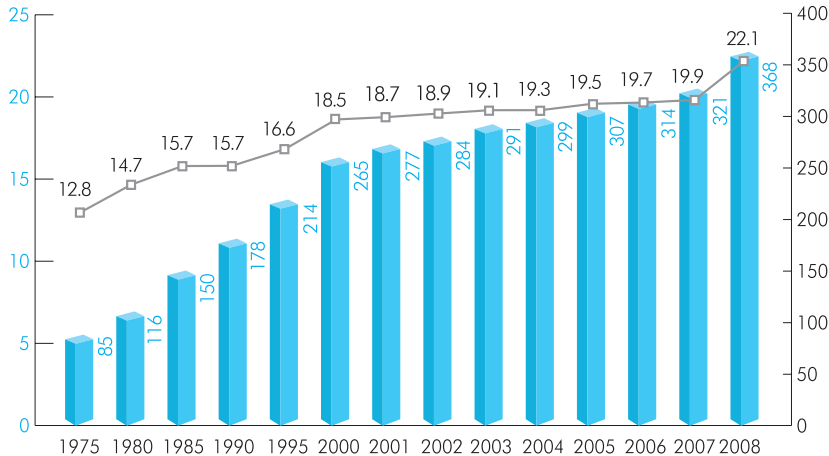
자녀 없이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자는 ‘딩크(Double Income No Kids)족’이 부쩍 늘었다. 맞벌이 부부는 늘고 있는데 육아 부담은 여전한 사회구조가 딩크족을 양산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려는 노부부를 일컫는 ‘통크(Two Only No Kids)족’도 있다. 아이는 싫고 말 잘 듣는 애완동물을 선호하는 커플인 ‘딩펫(Double Income No Kids+Pet)족’도 유행이다.²⁴⁾

이와 대조적으로 ‘듀크(Dual Employed With Kids)족’도 있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이는 꼭 갖는다는 주의다. 자녀를 적게 낳는 대신 기르는 데 투자는 많이 한다. 이들을 겨냥한 육아상품은 불황을 모른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나홀로 족(1인 가구)’도 갈수록 늘고 있다. 1975년 28만 1,007명에 불과하던 나홀로 족은 2005년 317만 675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결혼을 거부하는 독신자의 증가, 늘어나는 이혼,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가 맞물려 벌어진 결과다. 나홀로 족의 증가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양산하고 있다. 주택 시장에서는 1인 거주자를 위한 1인용 오피스텔, 원룸형 아파트·빌라 건설이 붐을 이룬지 오래다. 혼자 사는 이들을 위해 ‘1인 식탁’을 갖춘 식당들이 늘어나고, ‘셀프 빨래방’ 등 나홀로 족의 생활편의를 돕는 업종도 증가 추세다. 24시간 편의점은 이들이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해 내놓고 있다. 대형 할인점도 1~2인용 소용량 상품만 모아 파는 ‘미니미니존’을 개설해 나홀로 족을 유혹한다.

24) 경향신문, 2003년 12월 8일자 M7면

〈여성 가구주〉

여성 가구주 비율
단위 : %여성 가구주 가구 수
단위 : 만 가구

주 : 2001년 이후는 장래가구추계 자료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가구주 = 남성’이라는 등식도 깨졌다.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여성이 늘고, 이혼이 보편화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가구주가 늘었기 때문이다. 1975년 90만3,000명이었던 여성 가구주는 2008년 368만 9,000명으로 늘었다. 여성 가구주의 비율도 2008년 22.1%를 기록,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는 여성이 가장이다.

자연히 가족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남편 위주로 돌아가던 가족관계가 이젠부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2008년「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보고서에 따르면 일상생활비 지출에서 부인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가구가 전체의 65.3%인데 비해 남편이 결정한다는 비율은 5.7%에 불과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서도 부인이 주로 의사 결정을한다는 가구가 39.2%로 남편이 결정하는 가구(3.1%)를 크게 앞섰다. 나머지는 ‘공동 결정’이었다. 남성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답변이 많은 경우는 ‘주택매매·이사’ 뿐이었다.²⁵⁾

이젠 ‘겉보리 서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 옛말도 ‘처갓집과 화장실은 되도록이면 가까워야 한다’로 바뀌어야 할 정도다. 재테크나 자녀 양육을 위해 처가살이하는것도 주위에서

25)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8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자녀들도 고모보다는 이모와 더 가깝고, 친할아버지 이름은 몰라도 외할머니 이름은 한자까지 쓸 정도인 게 요즘 세태다.

‘기러기 가족’의 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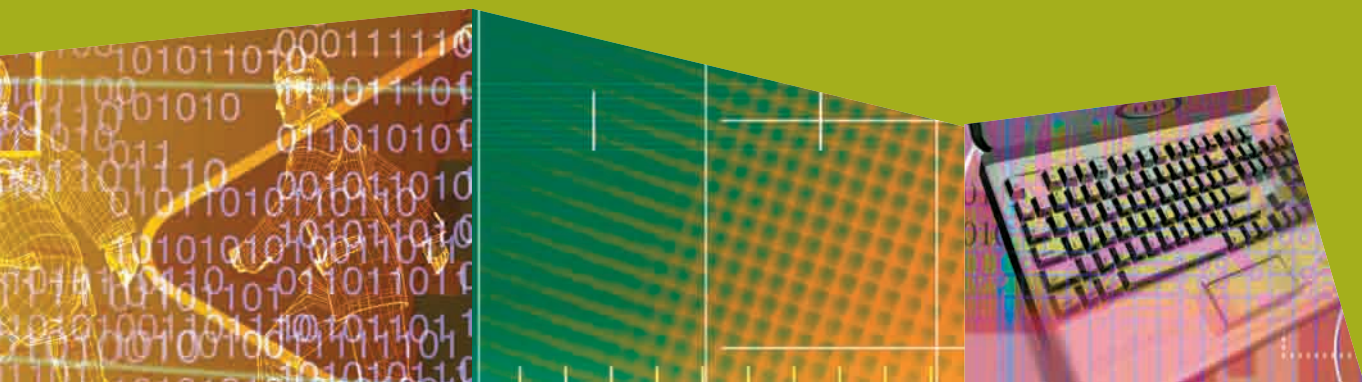
2005년 현재 직장 문제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가구 수는 36만 8,000가구다. 전체 1인가구(317만 1,000가구)의 11.6%다. 앞으로 행정기관·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면 본의 아니게 별거하는 ‘주말 부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말부부라는 가족 형태는 196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지방경제 활성화, 잦은 전근, 자녀교육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말 부부가 일반화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고용시장이 경직되면서 부부가 동일한 지역에서 직장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라면 부부가 별거도 감수할 수 있다는 의식이 보편화했다.

최근에는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남편이 도시에 사는 부인·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경우도 늘고있다. 주말부부의 21세기 확장판이 ‘기러기 아빠’다. 자녀 교육을 위해 자식과 아내를 해외로 보낸외로운 아빠들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학을 위해 출국한 초·중·고 학생 수가 2000~2006년 9만 6,000여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기러기 아빠도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²⁶⁾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는 2005년 1월 한국의 중산층 부모들이 자녀에게 더 나은 기회와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감수하는 ‘기러기 아빠’ 현상이 결국은 가정의 해체를 재촉하는 ‘뒤틀린 선택’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는 달리 기러기 가족 현상을 2000년 이후 인터넷 발달에 초점을 맞춰 ‘N(network)패밀리’,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 등으로 부르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현상으로 인정하는 시각도 있다.

26) 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 유학생 출국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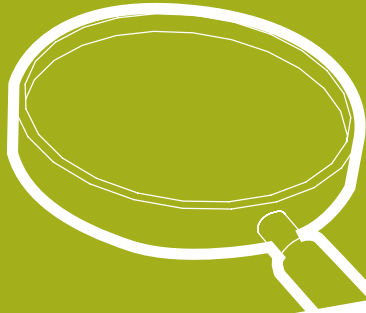
2009년 OECD 세계포럼개최 현황소개

건설환경 변화와 건설통계 발전방향

2008년 한국의 사회지표

부동산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충격

월간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개발사례



F o c u s

통계포커스

제3차 OECD

세계포럼 개최 준비현황

김설희 OECD 세계포럼 준비기획단 사무국장

1. OECD 세계포럼 개요

가.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¹⁾는 최근 OECD 통계국을 주축으로 선진국과 저개발국을 아우르는 사회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이의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사회발전측정에 관한 글로벌프로젝트(Global Project on Measu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를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동 프로젝트의 새로운 과제 발굴과 각국의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통계, 지식, 정책에 관한 세계포럼(OECD World Forum on Statistics, Knowledge, Policy)'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Beyond GDP", 즉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을 근간으로 한 경제적 풍요만으로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

1) 경제발전과 세계무역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지난 1961년 발족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하였다.

다. 따라서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개념을 벗어나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발전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자주 대두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삶의 질’, ‘행복’ 등에 대한 논의도 이와 동일한 맥락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2000년 9월 미국 뉴욕 국제연합 (United Nations, 이하 UN) 본부에서 개최된 ‘새천년정상회의 (Millennium Summit)’에서 전 세계 빈곤타파를 위한 의제로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들 수 있다. 회의에 참가한 191개 국가 대표들은 빈곤 감소, 보건 및 교육 개선, 환경보호 등에 관한 8가지 목표²⁾를 2015년까지 달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UN의 MDGs를 대체할 범세계적 차원의 사회발전지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MDGs 달성에 있어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둘째, UN의 MDGs는 저개발국의 발전상황을 평가하기에는 유용하지만 선진국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문화도 대두하고 있다. 즉 ‘통계-지식-정책’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통계와 같은 객관적 정보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결과는 투명하고 올바르게 국가정책에 반영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OECD의 글로벌프로젝트는 인간의 웰빙과 사회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발전이란 무엇인가?”, 발전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 그리고 ”사회발전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OECD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인 모임을 유도하고 각 국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여 통계역량, 국가정책 및 국제정책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고 있다. 각 국의 전문가들이 범세계적으로 개방된 대화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포럼이라는 형태의 국제회의를 주선하고 있는데 그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논의 주제도 다양한 회의가 OECD 세계포럼이다.

나. 그간의 세계포럼 연혁

제1차 OECD 세계포럼은 2004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개최되어

2) 주요 내용으로 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초등교육의 완전보급, ③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유아 사망률 감소, ⑤임산부의 건강개선, ⑥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⑦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43개국에서 540여명이 참가하였다. ‘핵심지표(Key Indicators)’를 주제로 한 이 회의는 글로벌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에 앞서 개최되어 통계, 지식, 정책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장이 되었다. 1차 포럼이후 UN,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은 글로벌프로젝트의 공식 착수를 권고하는 고위급 전략 워크숍 선언문(Mission Statement)을 발표하였다.

2006년 3월 발표된 이 선언문은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 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사회 각 부문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증거기반 정책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 문화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글로벌프로젝트의 착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포럼은 2007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사회발전 측정 및 증진(Measuring and Fostering the Progress of Societies)’이라는 주제로 발전의 개념을 공유하고 새로운 사회발전 측정방법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130여 개국에서 1,200명에 달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2차 세계포럼에서는 UN, 세계은행 등 28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이스탄불 선언(Istanbul Declaration)’을 채택함으로써 글로벌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스탄불 선언에 나타난 주요 행동 강령으로 첫째, 21세기에 부합하는 ‘발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둘째,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선진사례 및 방법론을 공유하며 셋째,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확산시키고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 제3차 OECD 세계포럼 개요 및 주요 의제

제3차 OECD 세계포럼은 오는 10월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나흘간 부산 국제컨벤션센터(이하 BEXCO)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Charting Progress, Building Visions, Improving Life)”이며 130여 개국에서 약 1,500여명(외빈 1,2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발전 개념을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새로운 발전 측정 지표와 그 개발 사례를 공유할 것이다. 또한 사회발전 증진을 위해 각 국 정부 및 사회 각 부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논의할 것이다. 세부적인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발전 측정의 새 패러다임

전 세계적으로 “Beyond GDP” 즉, GDP의 한계를 넘어 경제·사회·환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발전측정법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를 영입하여 추진하는 ‘경제 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위원회’³⁾가 오는 9월 관련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이 위원회의 발표 내용이 중요한 ‘선진사례’로 소개된다.

이 위원회는 프랑스인의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을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위원회의 연구 결과는 GDP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 으로부터 GDP를 보완하고 대체할 지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발전측정 사례로서 미국의 ‘State of the USA’가 소개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State of the USA’에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미국의 발전을 인구통계학적, 지리적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한 웹사이트다. 국가기관의 통계지표 중 발전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지표를 한 곳에 모아 서비스하며,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하고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도 제공하는 선진적인 지표 활용 사례다.

나. 행복 및 웰빙

제3차 포럼에서는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 또는 웰빙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도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과 웰빙, 도시와 웰빙, 아동의 웰빙 등이 세부적으로 다루어진다. 고용과 웰빙의 관계에서는 고용상태나 직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직장에서의 웰빙 측정 수단 등을 논의한다. 도시와 웰빙의 관계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상태 및 거주 쾌적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등을 논의한다. 또한 아동의 웰빙에 관해서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들의 웰빙은 무엇인지,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룬다.

3) 영문명칭은 Commission on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development

다.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은 현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그린정책과 맞물리는 의제로서 더욱 관심 있게 다루어 질 것이다.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기후변화를 입증하는 여러 증거에 기반 하여 향후 국제사회가 취해야 할 정책 및 태도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아울러 과거 기후변화와 관련한 증거들이 왜 간과되었는지, 앞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주관하는 부문회의의 의제다. 한국 측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저탄소 지향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시장 동향, 시장 지원정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등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나라 관련 정책에 대한 고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라. 변화를 위한 사회 각 부문의 역할

발전측정의 개념을 새롭게 하고, 행복과 웰빙을 증진하고, 녹색성장을 추구하면서 이루게 될 사회변화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 사회 각 부문(의회, 기업 및 재단, 언론, 국가통계인 등)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의회는 사회 제도를 형성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기업이나 재단은 대표적인 경제주체로서,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고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그리고 국가 통계인은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인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으로서 사회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역할을 다룬다.

마. 기타 주요 의제

이 외에도 발전측정과 관련한 세부 의제로서 평화,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 신뢰, 인적자본 양성, UN의 MDGs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평화,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 신뢰 등과 관련해서는 세계평화지수 개발 사례, 호주의 민주주의 측정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인적자본 양성에 대해서는 인적 자본을 측정하는 최신 기법과 이를 인재 양성정책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루게 된다. 끝으로 2015년 종료되는 UN의 MDGs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의 조건 및 개발 절차 등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다.

3. 제3차 OECD 세계포럼 개최 준비 현황

제3차 OECD 세계포럼은 한국 통계청과 OECD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한국 통계청이 이 회의를 유치하게 된 과정과 성공적인 포럼개최를 위하여 구성한 조직, 다른 기관과의 협조관계 및 제반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포럼 유치 및 조직구성

제3차 OECD 세계포럼의 본격적인 유치는 한국 통계청이 2007년 2월 제2차 OECD 세계포럼에 앞서 개최된 아시아지역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회의는 아시아 주요 국가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역대 지역회의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

2007년 6월 제2차 포럼에는 통계청장 등 정부 대표단이 참가하여 제3차 OECD 세계포럼의 한국개최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2007년 10월 제3차 OECD 세계포럼의 개최의사를 밝힌 공식서한을 OECD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마침내 OECD와 함께 제3차 OECD 세계포럼의 한국개최를 확정하였다.

한국의 제3차 포럼 유치는 그동안 서구 중심으로 진행된 사회발전에 대한 논의를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하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후변화 및 에너지 고갈 위기를 타파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꾀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이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시장 동향 등의 이슈를 전체회의 및 부문회의에서 논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되었다.

제3차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정부 내 ⁴⁾를 구성하고, 실무조직으로 통계청 내 'OECD 세계포럼 준비기획단' ⁵⁾을 설치하였다.

세계포럼준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 통계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및 민간위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2008년 7월 제1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최지 선정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4)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준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 20825호, 2008년 6월 20일 제정)'에 의거하여 설치함

5)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계청훈령 제169호, 2008년 7월 10일 제정)'에 의거하여 설치함

OECD 세계포럼 준비기획단을 별도 설치하고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총괄기획과, 대외협력과 등 2개 과를 두어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 관계기관과 업무약정 체결

성공적인 포럼 개최를 위해서는 관계기관들과의 역할분담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은 2009년 1월에는 OECD와, 3월에는 부산광역시와 각각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하였다.

OECD와의 약정서⁶⁾는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 기관의 책임 및 업무분장 사항 등 포함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포럼 일정 및 개최 장소, 양 당사자의 책임 사항, 로고·명의·의제 및 기타 권리의 사용, 종료·취소 또는 연기, 약정의 수정, 효력 발생, 한국 정부의 조달사항, 양 당사자 업무 분장 등이다.

부산광역시와의 약정서⁷⁾는 부산이 세계포럼 유치를 신청했을 때 제안한 약속 사항과 부산시의 담당 업무를 명문화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계획수립, 홍보, 전시 등의 업무에 대한 양 기관의 분장사항, 분쟁해결, 효력발생 등이다. 지난 3월 2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부산시와 약정서 체결식에는 당시 부산을 방문 중이었던 엔리코 지오바니니(Enrico Giovannini) OECD 통계국장도 배석하였다.

다. 국제회의 전문업체 선정

제3차 OECD 세계포럼과 같이 대규모 국제회의는 전문업체(이하 PCO⁸⁾)가 실무 준비를 담당하므로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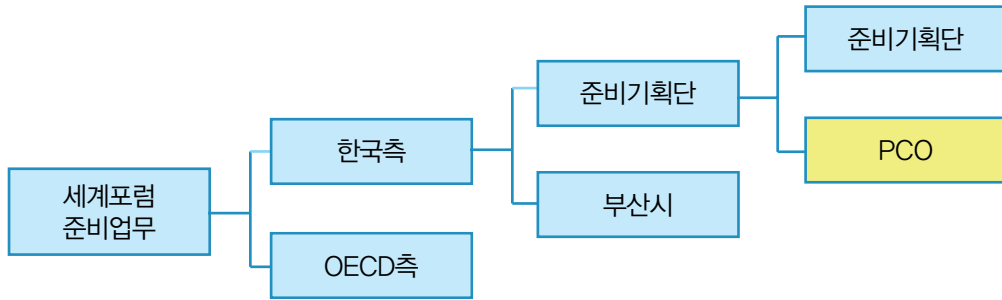
우선 PCO의 위탁대상 업무를 구분하기 위해 세계포럼을 준비하는 각 기관(준비기획단, OECD, 부산시, PCO)별 업무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6) 한국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간 “통계, 지식, 정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비전 수립”을 주제로 하는 제3차 OECD 세계포럼에 대한 약정(영문: Arrangement between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ith respect to the third OECD World Forum on Statistics, Knowledge and Policy "Charting Progress, Building Visions, Improving Life")

7)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포럼 준비에 관한 약정서

8) 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의 약자

〈 기관별 업무 구분 〉



PCO 위탁대상 업무를 구분한 후, 업체 선정기준과 계약방법 등을 결정해 2008년 11월 6일부터 40일간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였다. 12월 17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6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정부위원 5명, 민간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사업내용 등 기술영역 부분을 심사하고 조달청 가격평가를 거친 결과 공동 입찰한 SBS프로덕션과 이오컨벡스가 1차 협상자로 선정되었다. 3차례 조정 협상을 통해 인력 구성, 홍보 횟수, 전시 계획, 예산 편성 및 대금 지급, 계약 기간 등에 대해 모두 합의함에 따라 PCO선정 작업이 완료되었다.

현재, 준비기획단과 PCO는 공동으로 회의장 조성, 등록시스템 구축, 초청, 의전, 홍보, 홈페이지 관리 등의 세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라. 국내연사 섭외 및 한국측 독립세션 구성

OECD와의 기관 간 약정에 따라 제3차 세계포럼 전체 연사 180~200명 중 20명을 국내 인사로 배정하였다. 이는 좌장, 발표자, 토론자를 모두 포함한다.

세션 주제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20명을 좌장 6명, 발표자 8명, 토론자 6명으로 구분하고, 성별을 감안하여 여성을 전체의 15%(3명)이상으로 구성하되 일자별로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였다.

국내연사 선정을 위해 각종 대통령 자문기구 및 정부 부처, 국책 연구기관, 대학,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자체 후보군을 마련하였다. 이후 OECD 세계포럼 의제분과 자문위원회(2008년 12월),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 및 청와대 미래비전비서관의 자문(2009년 1~2월),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의 자문(2009년 3월)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하였다.

이들 국내연사는 삶의 질, 아동 웰빙, 기후 변화, 인적자본 형성 평화측정 등 국제사회의 관심

이 높은 세션 위주로 좌장, 발표자, 토론자 등의 역할로 세계포럼에 참여하게 된다.

마. 국제전시회 개최 준비

지난 제2차 포럼에서와 같이 금번 3차 포럼에서도 ‘국제전시회(International Exhibition)’가 포럼 기간 동안 동시에 개최된다. 포럼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 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이 전시회는 포럼과 같은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Charting Progress, Building Visions, Improving Life)”이라는 주제로 BEXCO 1층 2-A 전시장에서 열린다.

전시관은 크게 ①통계시각화 기술, ②증거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③친환경 녹색기술, ④기타 삶의 질 향상 사례 등 4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통계시각화 기술 및 증거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은 “발전 측정(Charting Progress)”이라는 주제 하에, 친환경 녹색기술과 삶의 질 향상사례는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Building Visions, Improving Life)”라는 주제에 맞게 구분된다. 전시회에는 국내외 유관기관 50~60개(국내 20~30개)가 참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홍보관도 별도로 설치하여 기업의 첨단 상품 등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세계포럼 주관기관인 통계청, 부산시, OECD도 각각 별도의 홍보관을 계획하고 있다.

바. 세계포럼 홍보

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국내외 홍보가 중요하다. 국내 홍보를 위해 세계포럼이 미래비전 수립에 관련된 정부와 국제기구 인사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회의와 차별됨을 강조하였다. 세계포럼 인지도를 제고하고 제3차 세계포럼이 경제 위기 이후 국가 미래비전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홍보 방향으로 설정했다.

포럼의 주요 의제인 사회발전 방안을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홍보하고 사회발전 논의에 앞서가는 프랑스와 미국 등의 주요 선진사례를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외빈 1,200여명이 참석하는 OECD 최대 규모 국제회의로서 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가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도 홍보의 초점을 두었다.

특히, 세계포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관심유발→관심유지→관심확산’ 등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언론매체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009년 6월까지의 ‘관심유발’ 단계로 OECD 가입 후 처음으로 OECD 각료이사회 의장국이 되는 해에 세계포럼을 개최함을 홍보하여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 7월부터 9월까지 관심유지 단계에서는 ‘D-100 기자간담회’, 시사다큐 방송 등을 통해 의제를 공론화하고 세부 주제별 연재기사를 게재하며 대학원생 기자단(블로그, UCC)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심확산 단계는 10월부터 시작되는데, 참여 연사들의 인터뷰 등으로 관심을 유발하고 라디오, KTX 영상광고, 옥외광고 등을 통해 회의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회의기간 내에는 웹캐스팅(Web-casting)을 통해 실시간으로 회의상황을 방영할 예정이다.

4. 맺음말

살펴 본 바와 같이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과 다각적인 무역·경제 체제구축 등을 주로 강조해 오던 OECD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등을 모두 아우르는 사회발전의 개념을 정립하고 전 세계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한국 통계청에서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OECD세계포럼의 개최를 유치함으로써 사회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도에 적극 동참하고 논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통계청과 OECD세계포럼 준비기획단에서는 성공적인 세계포럼이 될 수 있도록 OECD 통계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회의 개최, 초청, 전시회, 홍보, 지원, 수송 등 부문별로 치밀한 계획과 점진으로 단계별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끝으로 올해 10월 27일부터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 3차 OECD세계포럼은 주제 분야별 세계적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현 정부가 국정기치로서 내걸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한 의미와 추진방향에 대해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 국회, 학계, 연구기관 등 각 부문별 관련 전문가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계적인 사회발전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부록 : 제3차 OECD 세계포럼 프로그램 (2009.6.1. 현재)

날짜	시간	프로그램 내용
10.27 (화)	09:30~11:00	[7개 부문회의] (1) 인간 개발 측정 (2) 보이지 않는 인구 측정 (3) 혁신 측정 (4) 외부감사 시스템에 있어 핵심지표 (5) 사회 연결망 측정 (6) 시간사용과 웰빙 측정 (7) 다차원적 빈곤 측정
	11:30~12:30	[개회식 및 기조연설]
	14:00~16:00	[전체회의] 발전 측정, 비전 수립, 삶의 질 향상
	16:30~18:00	[전체회의] 인간이 만들어 가는 발전
10.28 (수)	09:00~10:30	[전체회의] 발전측정의 새 패러다임
	11:00~12:30	[7개 부문회의] (1) 웰빙, 사회발전 및 지속가능발전의 측정사례 (OECD 회원국) (2) 인적자본 및 능력 배양 (3) 빈곤에서 권력으로 (4) 싱크탱크의 역할 (5) 신뢰측정과 형성 (6) 경제사회이사회의 역할 (7)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에서의 시민참여
	14:30~16:00	[전체회의] 새로운 측정, 새로운 정책
	16:30~18:00	[7개 부문회의] (1) 국가통계인의 역할 (2) 저탄소 녹색성장 (3) 의회의 역할 (4) 거버넌스와 민주주의 측정 (5) 사회발전 측정 : 이론에서 적용까지 (6) 일다운 일과 직장에서의 웰빙 (7) 증거에 의한 행동양식 변화

날짜	시간	프로그램 내용
10.29 (목)	09:00~09:30	[연설] 증거, 인간, 행동양식 : 변화의 법칙
	09:30~11:00	[3개 부문회의] (1) 성과측정 : 보건 (2) 기후변화 (3) 삶의 질과 행복
	11:30~12:45	[6개 부문회의] (1) 웰빙, 사회발전 및 지속가능발전의 측정 사례 (OECD 비회원국) (2) 불평등 (3) 아동의 웰빙 (4) 사회의 취약성 측정 (5) MDGs (새천년 개발목표) (6) 발전측정의 실제
	14:30~16:00	[7개 부문회의] (1)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s)의 역할 (2) 기업의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 (3) 시민사회의 역할 (4) 평화 측정 가능성 및 의의 (5) 도시와 웰빙 (6) 정책입안자에 대한 책임 부여 (7) 재단의 역할
	16:30~18:00	[전체회의] 새로운 정책, 행동양식, 제도
10.30 (금)	09:00~09:30	[시상식] OECD 세계포럼 기여자 시상
	09:30~11:00	[전체회의] 발전으로 가는 길 : 리더십 모색
	11:30~13:00	[폐회식] 향후과제 : 이행약속 및 결론

건설환경 변화와 건설통계 발전 방향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백성준

1. 들어가면서

건설관련 통계는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통계가 있고 조사·발표하는 기관마다 대상과 방법에 차이가 있어 내용파악이 쉽지 않다. 건설투자액이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15%정도를 차지하는 거대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발달은 그 위상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체수가 너무 많고 발주하는 기관마다 발주방식도 상이하여 체계화된 통계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 등 시장이 제도적으로 분할되어 있고 관리 감독하는 부처도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으로 달라 통합된 통계를 생성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하지만 건설통계 발전을 위한 투자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온 점도 반성할 대목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건설통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조망하고 건설통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건설시장의 범위와 건설통계의 종류

건설통계에는 계약실적, 기성실적 등 직접적으로 건설업체들의 활동을 나타내는 통계부터 건축허가면적, 자재수급, 건설취업자 수 등 간접적으로 건설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까지 다양하다. 하드웨어 중심의 건설산업에서 점차 소프트웨어로 이행해 가면서 기존 시공 위주의 통계 구축에서 설계·감리, 엔지니어링, 유지보수 등 건설 통계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림 1〉 건설시장의 수요와 공급



주요 건설관련 통계는 건설공사 진행과 연관된 통계, 건설업체 경영과 관련된 통계, 그리고 기타 통계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건설공사 진행상 생성되는 통계는 발주 이전, 발주 단계, 엔지니어링, 계약 및 기성액, 건설투자, 완공, 유지보수로 구분된다. 건설경영 관련 통계는 건설업체 수, 건설인력, 건설자재, 건설금융, 건설기업의 채산성 지표로 구성된다. 그리고 기타 통계는 두 가지 구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건설업 분석시 유용하게 사용되는 통계를 말한다.

〈그림 2〉 국내 건설 통계 현황



자료 : 백성준 · 강민석(2002), 건설시장 규모관련 통계 현황과 새로운 통계구축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본고에서는 건설공사 진행상 생성되는 건설수주, 건설기성, 건설투자, 건축허가면적 등의 실
적 통계를 중심으로 건설시장 및 환경변화를 조망하고 건설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3. 건설시장 규모

국내 건설시장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는 건설계약액¹⁾, 건설기성액, 건설투자, 건설업 GDP 등이 있으며 해외건설 시장은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통해 파악된다. 건설계약액은 건설 관련 각종 건설관련 협회와 통계청을 통해 조사하여 월단위 및 연단위로 발표하고 있고 기성액은 연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건설투자 및 건설업 GDP는 한국은행에서 분기 단위로 추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각 지표들마다 건설업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규모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각기 한계점을 갖고 있다. 통계청과 각 협회를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분류 기준이 서로 달라 수치 간에 불일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통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의 건설업종 분류를 따르지만 협회들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른 업종 분류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건설투자와 건설업생산은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분류 체계가 단순하여 건설업체의 공종별 세부 활동 상황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시의성있는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의 종합적인 통계가 없으므로 건설산업 전체의 동향파악이나 단기 전망에는 한계가 있다. 각 협회에서 해당업계의 통계연보²⁾를 작성하고 있으며, 연 1회 통계청에서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³⁾를 발간하므로 시의성이 떨어진다. 또한 해외건설 시장 규모를 보다 정확히 포착할 필요가 있다. 해외건설협회에서 건설계약을 집계하고 있지만 플랜트수출지원센터와 중복되거나 건설업체의 플랜트 관련 수출이 해외건설 수주 실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2007년 기준으로 건설계약액을 중심으로 국내 건설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그림 1>와 같다. 대한건설협회에 신고된 건설계약액은 157.7조원이며 이중 전문건설업과 설비건설업에 각각 45.8조원, 5.6조원이 하도급으로 할당된다. 전문건설업과 설비건설업이 원도급자로서 수주한 계약액은 각각 18.0조원, 3.7조원이다. 그리고 분리발주가 이루어지는 전기, 통신, 기타 공사업

1) 건설계약액(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건설수주액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이하에서 건설계약액으로 통일함) 및 기성액 통계는 통계청과 각 협회들을 통해 발표되고 기성액은 건설업체에서 해당 연도에 시공한 공사액을 의미하며 계약액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을 의미한다.

2)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설비건설업 등도 각기 협회의 통계보고서를 통해 연 단위 또는 월단위로 발표하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의 경우 「월간건설경제동향」과 「건설업통계연보」를 통해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3)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의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연 1회 작성하며 「건설수주통계월보」는 일반건설업체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하고 있다(2002년 기준 일반건설업체 상위 290개사, 대표도 54%).

은 각각 14.3조원, 8.6조원, 1.8조원 수준이다. 그리하여 협의의 국내건설시장은 약 204.1조원 규모이며 건설서비스업을 포함한 광의의 건설시장은 214.2조원으로 파악된다.

〈그림 3〉 국내 건설시장 규모

2007년 전체 건설시장 (계약액 251.1조원)							
광의의 국내 건설시장 (214.2조원)							해외 시장 (36.9조원)
협의의 국내 건설시장 (204.1조원)						건설서비스업 (10.1조원)	해외 시장 (36.9조원)
일반건설업 (106.3조원)	일반-전문 (45.8조원)	전문건설업 (18.0조원)	전기 공사업 (14.3조원)	통신 공사업 (8.6조원)	기타 건설업 (1.8조원)	설계 (4조원)	해외수주 (36.9조원/ (397.9억달러))
	일반-설비 (5.6조원)	설비건설업 (3.7조원)				감리 (1조원)	
일반건설업 원도급	하도급자	원도급자	분리발주 (원도급자 + 하도급자)				엔지니어링 (5.1조원)
일반건설업 원도급 (157.7조원)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4. 건설통계의 문제점

1) 통계 간의 연계성 부족

(1) 건설계약액과 건설기성액

건설계약액 및 기성액 통계는 통계청과 각 협회들을 통해 발표된다. 기성액은 건설업체에서 해당 연도에 시공한 공사액을 의미하며 계약액은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을 의미한다.

〈표 1〉 통계청과 대한건설협회의 건설기성액 및 건설계약액 통계 비교

구 분		특징	작성방법	비고
통계청(건설업 총괄)				
연 간	건설업 통계조사 보고서	- 건설산업을 총괄하여 작성하므로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계약액 및 기성액의 원도급/하도급을 포함함). - 일반건설업, 전문·설비건설업, 전기·정보통신공사업, 기타 건설업을 포함함. - 연간 자료이므로 최근의 건설업 추이를 반영하지 못해 단기적인 전망 자료로는 사용이 어려움.	-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한 보고조사(전후)와 지방통계사무소 방문조사, 표본조사를 병행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자료를 분류 집계함.	조사방법 자체가 상이함.
월 간	건설수주 통계월보	- 최근의 건설업 동향 파악에 용이함. - 지역별 계약액 구분, 기성액 등 동향분석을 위한 기초 정보 제공 - 전반적 흐름 파악은 가능하나 표본조사이므로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음.	- 일반건설업체 상위 290개사(대표도 54%)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중 국내공사만을 대상으로 함.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				
연 간	건설업 통계연보	- 계약·기성 관련 세부적 분류가 가능함. - 실적신고에 기초하여 작성함. - 최근의 건설업 추이를 보여줄 수 없음.	- 회원사의 매년 3월경의 실적신고내용에 따라 통계자료를 작성·발표함. - 건설업종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른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의 건설업종 분류와는 다름	조사방법이 동일함에도 월간 합과 연간의 합 불일치
월 간	건설경제 동향	- 기성액을 작성하지 않음. - 지역별 구분 등 세부적 구분 미흡 - 월간 통계임에도 회원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함.	- 매달 회원사들의 계약실적을 취합하여 작성함. - 자체 공사는 착공일 기준, 도급공사는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신고됨.	

자료 : 백성준·강민석(2002), 건설시장 규모관련 통계 현황과 새로운 통계구축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리고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의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연 1회 작성하며 「건설수주통계월보」는 일반건설업체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하고 있다.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설비건설업 등도 각기 협회의 통계보고서를 통해 연 단위 또는 월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건설협회의 경우 「월간건설경제동향」과 「건설업통계연보」를 통해 매월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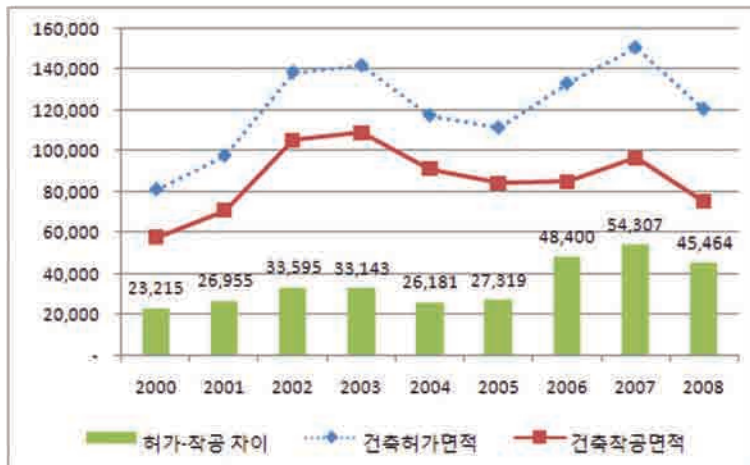
그런데 대표적인 건설통계인 건설계약액(수주)과 건설기성액 간의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건설통계 간의 연계성 및 활용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건설계약액은 업체별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집계를 하여 신고하는 반면, 건설기성액은 업체별로 해당월의 전체 기성액을 합쳐서 신고하고 있다. 수주된 개별 사업장별 공사 진척도를 파악할 수 없어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간의 시차 및 총 사업기간 등 건설산업의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건설수주와 건설기성 통계간의 자료 세분화는 매우 차이가 크다. 건설수주는 매우 상세한 공종까지 파악이 가능하지만 건설기성은 토목, 건축공종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더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 건축허가면적과 건축착공면적

건축허가면적, 건축착공면적, 건축준공면적 간의 연계도 안 되고 있어 건축부문의 건설투자 추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어느 단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언제 준공이 가능한지를 신속히 파악하여 준공 및 입주시점을 제대로 추정하면, 이를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는 통계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축준공면적의 집계가 발표되지 않아 사업승인과 준공을 연계시킨 분석이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면적과 건축착공면적 간에도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이후 건축허가면적과 건축착공면적 간의 통계적인 격차가 커지면서 건축허가면적에 기초하여 건축착공면적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당해 건축허가를 받은 면적이 건축착공면적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2005년까지는 75% 내외였으나 2006년부터는 63% 내외로 떨어졌다. 상세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허가과 착공 통계를 연계한 조사 및 통계구축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그림 4〉 건축허가면적과 건축착공면적의 차이 확대



주 : 허가-착공 차이는 당해년 건축허가면적에서 당해년 건축착공면적을 뺀 수치
 자료 : 국토해양부

(3) 주택건설실적과 주택입주통계

주택건설 부문에서도 중요한 통계인 주택건설실적(인허가 기준), 주택미분양통계, 주택입주통계 등도 잘 연계되지 않고 있다. 연간 주택건설실적 자료를 기초로 입주 추정량을 시산해 보면 실제 입주량보다 평균 20만호 가량 많이 도출된다. 준공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입주실적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미분양주택수 또는 준공후미분양 주택수를 반영하더라도 역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통계적 불일치의 원인을 첫째, 주택건설실적으로 집계된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 둘째, 미분양주택의 통계가 과소집계된 것 등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허가를 받은 이후의 사업진행 과정이 제대로 추적되지 않고 있어 현실 파악에 한계가 있다.

〈표 2〉 주택건설실적(인허가)과 입주실적 간의 괴리

년도	주택건설실적	미분양주택	입주 실적(A)	입주 추정량(B)	차이(B-A)
1993	695,319	77,488	368,703	626,477	257,774
1994	622,854	105,586	398,341	625,649	227,308
1995	619,057	152,313	429,898	650,701	220,803
1996	592,132	109,637	364,483	612,498	248,015
1997	596,435	88,867	417,762	604,193	186,431
1998	306,031	102,701	364,988	507,593	142,605
1999	404,715	70,872	337,538	451,798	114,260
2000	433,488	58,550	328,329	373,873	45,544
2001	529,854	31,512	290,561	450,889	160,328
2002	666,541	24,923	288,262	532,314	244,052
2003	585,382	38,261	266,840	587,519	320,679
2004	463,800	69,133	299,739	581,371	281,632
2005	463,641	57,215	304,114	512,385	208,271
2006	469,503	73,772	279,226	465,463	186,237
2007	555,792	112,254	286,335	493,045	206,710

주 : t년도 입주 추정량은 3년간 주택건설실적 자료를 기초로 추정($= (t-2)*0.4 + (t-1)*0.3 + t*0.3$)

자료 : 국토해양부

2) 통계 간의 불일치

통계를 작성기관이 다양하고 작성기준이 상이하여 통계에서 얻는 정보가 일치되지 못하여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우선 건설기성액과 계약액의 통계를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협회 통계와 통계청 통계 간에도 상이한 부분이 존재한다. 각 협회 통계에는 원도급과 하도급이 혼재하여 각 협회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대한건설협회 기성통계에는 하도급(외주)을 준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편 통계청 통계는 원·도급 관계를 어느 정도 구분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하고 협회들의 업종 분류기준과 상이해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여 혼선을 초래하게 된다.

통계청과 대한건설협회 양 기관 모두 연간 또는 월간 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나 연간자료와 월간 자료의 합이 일치하지 않아 통계상의 혼란을 초래하며 시계열을 별도로 유지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다.

(1) 건설계약액 통계간 불일치

연간 자료와 월간 자료의 불일치는 수주업체의 자율적 신고에 의해 통계를 취합하는 데서 발생하는 원초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장기계속 공사계약의 경우, 업체가 총공사부기금액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연차 계약비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계약액 중에서 당해 기성이 발생하지 않은 수주계약은 월별로는 신고하였지만 연간 신고시에는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건설계약액은 시계열 자료를 통해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통계 수치의 자의성이 매우 커서 건설시장 규모 통계로서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일반건설업의 경우 2000년 월별 신고 금액의 합계는 60.1조원이지만 연간 신고액은 49.9조원으로 10조원 가량의 편차가 발생하였다.

〈표 3〉 건설계약액 통계 간의 불일치(2000년 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	통계청	통계청	협회	협회	통계청
대상	전 건설업	일반건설업	일반건설업	일반건설업	상위 292개업체
발표 주기	연간	연간	연간	월간	월간
합 계	103,017	52,759	49,936	60,152	41,778
건축	51,987	27,006	26,705	37,727	27,285
토목	43,284	21,990	20,312	22,415	14,354
산업설비	6,383	3,153	2,310		139
조경	1,364	610	609		

자료 :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건설수주통계(대한건설협회)

(2) 건설기성액 통계간 불일치

건설기성액 통계도 계약액 통계처럼 건설업체의 자율적 신고에 의해 취합되지만 부실 신고시에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지므로 건설계약액보다는 자의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기성통계 월간 자료는 통계청에서만 상위 190개 업체를 발표하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월간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 월간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통계청은 매년 3월경에 실시하는 ‘연간 실적신고’ 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분석하지만 분석기준의 차이로 결과치는 상이하다. 대한건설협회의 기성액에는 일반건설업이 전문건설업 등에 주는 하도급까지를 포함하여 집계되고 있어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일반건설업의 기성액보다 과다 집계된다.

〈표 4〉 건설기성액 통계 간의 불일치(2000년 기준)

(단위 : 십억원)

발표기관	통계청	통계청	협회	통계청
대상	전 건설업	일반건설업	일반건설업	상위 190개업체
발표 주기	연간	연간	연간	월간
합 계	98,516	45,400	66,175	45,990
건 축	50,528	23,917	37,991	26,091
토 목	40,057	17,758	25,078	19,542
산업설비	6,750	3,261	2,382	356
조 경	1,180	465	723	

자료 :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건설수주통계(대한건설협회)

(3) 원도급/하도급 관계의 불명확성

원·하도급 관계를 파악하여 기성액을 구분해내는 것이 건설시장 규모 추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원도급과 하도급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이다. 2000년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 건설업의 기성액 중 하도급 비중은 29.4%이며 토목은 30.0%로 의무하도급비율(20~30%)의 상한선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한편 일반건설업의 하도급기성은 일반건설업에서 일반건설업으로 주는 하도급으로서 예외적인 사항(「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비중이 매우 작으며 여기에는 일반건설업에서 전문건설업 등에 주는 하도급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5〉 건설기성액 원도급과 하도급 비중(2000년 기준)

(단위 : 십억원, %)

구 분	전 건설업				일반건설업			
	기성총액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비중	기성총액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비중
합 계	98,516	69,571	28,944	29.4	45,400	44,320	1,081	2.4
건 축	50,528	35,997	14,532	28.8	23,917	23,356	560	2.3
토 목	40,057	28,046	12,010	30.0	17,758	17,355	403	2.3
산업설비	6,750	4,887	1,863	27.6	3,261	3,205	55	1.7
조 경	1,180	641	539	45.7	465	403	62	13.3

3) 통계 작성의 자의성 및 검증장치 미흡

통계간의 불일치를 초래한 한 이유는 통계 구축이 발주자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수주자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자의적인 신고에 의해 발생하는 원천적인 오류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수주신고의 시점이 신고업체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체 사업의 착공시점,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의 수주시점 또는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시점 등이 업체마다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 통계를 작성·신고하고 있어 검증장치와 신고시점의 일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설기성의 경우 신고업체의 사업장별 기성진도율에 따른 정확한 실적이 신고되어야 하지만 신고 업무의 부담으로 인해 정확한 진도율의 적용에 의한 기성실적 작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사업장이 아닌 회사전체의 기성금액 합계만 신고되는 한계가 있어 건설수주와의 연계성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수주통계, 기성통계에 기초한 건설투자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구축이 잘 안 되어 있다. 결국 건설투자액의 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정확한 자료에 기초한 건설투자액의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 기성액 통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보다 정확하고 시의성있는 기성액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정확한 건설투자 등 건설시장 규모 추정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5. 건설산업 환경변화와 건설통계 발전 방향

1) 건설산업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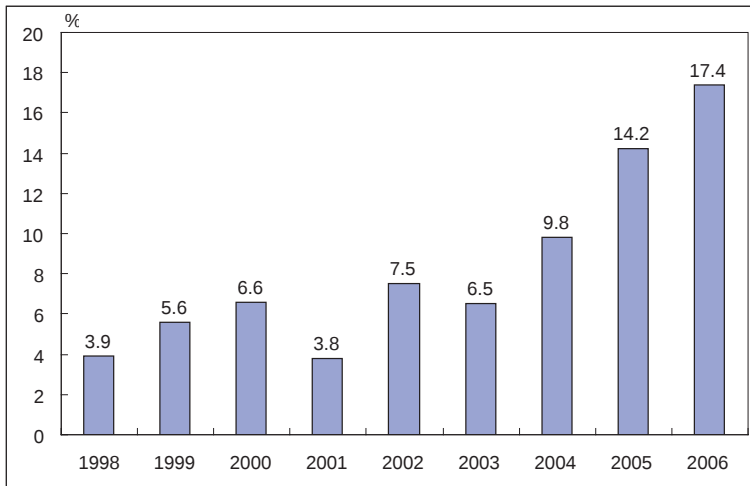
(1) 민간투자사업의 확대와 개발금융의 다양화

① 민간투자사업 확대

건설시장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데는 민간투자사업의 성장이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Social Overhead Capital)의 건설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시행된 학교, 대학교 기숙사, 병영시설, 군인아파트, 하수관거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예산 대비 민간투자사업의 예산(집행기준)의 비중을 보면 2005년 이

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2006년에는 17.4%를 기록했고 2007년과 2008년은 20%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현황을 보면 재정투자의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는 정부재정투자가 18.4조원, 민간투자비가 3.2조원으로 재정투자대비 민간투자 비중이 17.4%를 기록하였다.

〈표 6〉 재정투자대비 민간투자비중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민 간 투 자 (A)	0.5	1.0	0.6	1.2	1.2	1.7	2.6	3.2
SOC재정투자 (B)	12.7	15.2	16.0	16.0	18.4	17.4	18.3	18.4
A/B (%)	3.9	6.6	3.4	7.5	6.6	9.8	14.2	17.4

자료 :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주 : 연도별 실 집행금액 기준이며 “수송 ·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기준,

먼저 BTO(Build-Transfer-Operate) 투자규모를 보면, 집행기준 민간투자비는 2009년 5.0조원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투자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계획기간(2007~2011)동안에는 총 23.1조원, 연간 4~5조원 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연도별 BTO 민간투자계획(집행규모)

(단위 : 조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계	4.0	4.7	5.0	4.7	4.6	23.1

자료 :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BTL방식의 투자규모를 보면 고시기준 민간투자규모는 2007년 9.9조원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13년 이후에는 6조원 수준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실제 집행기준의 BTL사업 규모는 2011년 9.1조원 수준에 이르기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투자규모가 증가한 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2007~2011년 동안의 총투자규모는 고시기준으로 42.1조원, 집행기준으로는 34.1조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8〉 2007~2011년 BTL 민간투자계획(고시규모)

(단위 : 조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계	9.9	9.0	8.4	7.7	7.1	42.1

자료 : 기획재정부

〈표 9〉 2007~2011년 BTL 민간투자계획(집행규모)

(단위 : 조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집행	3.5	6.1	7.4	8.0	9.1	34.1

자료 : 기획재정부

② 다양한 부동산개발금융의 등장

부동산개발사업에 다양한 금융기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간접투자제도가 정착되면서 금융기법과의 접목을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간접투자의 유형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신탁업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자산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의 법률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한 사업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PFV(Project Finance Vehicle, 이하 PFV)사업이 등장하였고 특히 공공과 민간의 합동형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거하여 부동산펀드가 등장하였으며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개발형 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동산개발PF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이 발행되고 있고 개발사업에 일반대출과 지분참여의 중간 형태를 띠는 메자닌 금융까지 가세하고 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부동산만을 위탁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은행,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운용회사인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펀드의 운용회사인 자산운용회사는 금전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그 결과 부동산 신탁회사는 자체 신용에 의한 기업 금융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표 10〉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간접투자 유형 비교

구 분	위탁자산	운용회사	상 품	투자자 지위	환금성	근거법	시행여부
간접투자 (信託)	부동산	부동산 신탁회사	개발신탁	위탁자 (수익자)	원칙적으로 환매 불가	신탁업법	시행중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금전	은행	부동산투자 신탁				
		자산 관리회사	CR-REITs 개발전문리츠	주 주	상장 또는 등록	부동산투자 회사법	시행중
		자산 운용회사	신탁형, 회사형 합자·유한회사 조합, 익명조합	수익자 주 주	상장 또는 등록	자본시장법	시행중
간접투자/ 직접투자	부동산, 금전	부동산 개발회사, 지자체 또는 정부	Project Financing	주 주 또는 채권자	원칙적으로 환매 불가	프로젝트회사 법인세 혜택	법인세법 대체

자료 : 고성수(2007) 자료를 기초로 수정

한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부동산과 금전을 모두 위탁받을 수 있고 투자자는 주주 또는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특히 발기인 중 1인이 금융기관이며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총자본금의 5%이상을 출자할 경우, 법인세법 상의 특례조치로 PFV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을 보며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서는 대다수가 PFV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개발PF에 대해 정리해 보면, 금융권이 부동산개발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토지확보비용에 대한 사업성대출의 형태인 부동산개발PF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 자산유동화법 상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이용한 자금조달 방식인 부동산개발PF ABS(회사채 형태), 상법상 SPC를 활용한 부동산개발PF ABCP(기업어음 형태) 등 부동산개발 금융 조달 창구가 다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시행사나 시공사의 담보나 자체 신용에 기초하여 은행권으로부터 일반차입금 형태로 부동산개발자금을 조달하였다. 시행사가 자기자본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시행사가 선분양에 의한 소비자 금융이나 부동산담보대출 방식을 활용한 경우가 주종을 이루었고 부동산신탁회사의 개발신탁 방식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도 활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개발금융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오피스, 오피스텔과 레저용 시설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은행권에는 은행의 자본금과 고객 예수금을 조달재원으로 취급되는 고유계정의 일반자금대출과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특정금전신탁을 조달재원으로 하여 취급되는 부동산개발금융이 있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및 보험사 등 제2금융권 회사는 자금운용에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8년 부동산PF ABS는 7,290억원으로 2007년(1조 2,126억원)에 비해 40% 정도 급감했는데 이는 2006년(5조 8,978억원)에 비하면 1/8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부동산개발을 위한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급감한 것은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16만호이상 적체되었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부동산PF대출 부실률도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사업 자체가 위축된 것과 대출 위험성이 커지면서 ABS 발행 여건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요원하고 부실 건설업체의 정리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서 당분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 자금 조달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관의 PF 대출이 부진한데다 금융시장 경색으로 부동산 PF ABCP의 차환발행이 힘들어지면서 부동산 PF ABS 발행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장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S 발행도 감소하면서 일반기업 발행 ABS가 격감하였다.

〈표 11〉 일반기업의 ABS 발행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발행금액	발행건수	발행금액	발행건수
일반기업 ABS	34,475	35	12,590	13
(장래매출채권)	(16,659)	(11)	(2,403)	(3)
(부동산 PF ABS)	(12,126)	(17)	(7,290)	(7)
(기타)	(5,690)	(7)	(2,897)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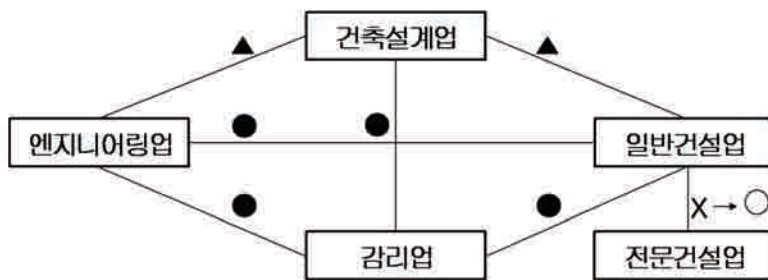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2) 건설산업 선진화와 건설산업 생산체계변화

① 건설업종별 업무범위 제한 폐지

건설산업 선진화 및 생산체계의 개선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법안인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지난 2009년 5월 21일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생산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종별 업무범위에 대한 법률상 제한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이 그것이다.

〈그림 6〉 현행 건설산업 겸업 구도



● : 겸업허용

X : 2007년까지 명시적 겸업금지, 2008년 이후 겸업제한 폐지

▲ : 명시적 겸업금지 조항은 없으나 건축사법에 의거 제한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첫째,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및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폐지(안 제16조 및 안 제25조)에 관한 사항이다. 지금까지는 법령에서 건설업종별로 영업범위를 제한하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해당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라 능력있는 업체를 선택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상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발주자 및 수급인이 공사내용·시공기술·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능력·공사실적 및 해당업종 등록여부 등을 기준으로 능력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건설업체에 관한 정보제공 확대(안 제24조제1항)에 관한 조항이다.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폐지에 따라 발주자가 시공업체를 선택하는데 보다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 내용에 건설업자의 보증 및 행정제재 처분 등을 포함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 및 자격 신설(안 제26조제1항)에 관한 조항이다.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폐지에 따라 발주자가 전문업체간 공동도급 등 다양한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종합공사에 대한 종합적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당해 업무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종합건설업체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건설시공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이다.

넷째,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개선(안 제29조)에 관한 사항이다.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폐지에 따라 건설 생산단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제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법령상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및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금지는 유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낙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섯째,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정비(안 제31조)에 관한 부분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의 일정비율 미달시 발주자가 하도급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300억 미만공사는 입찰시 하도급관리계획서제출을 통해 하도급대금 적정성을 기 평가하고 있어 업체에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면제하도록 하되,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② 다수면허 보유수요 증가에 대비한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인정

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은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업종 등록 유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 일부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등록요건으로 중복하여 인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입법예고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다수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하므로 다수 업종을 등록하려는 건설업자의 비용부담이 컸다. 건설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추가 업종 등록 시 이미 인정받은 등록기준을 중복하여 인정하는 기준을 만든 것이다. 자본금은 기 등록한 업종의 자본금 중 최대자본금의 50%를 1회에 한해 인정하고 기술능력은 기존업종의 기술자와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동일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인정하기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3) 새로운 건설수요 창출

건설산업은 국가 및 도시의 성장단계에 따라 창출되는 수요가 다를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주택, 공장 건설 등의 주요 기반시설 구축을 중심으로 건설수요가 촉발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기존 인프라시설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도시재정비, 환경 및 에너지 설비개선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급속한 산업 성장기를 거쳐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인프라 건설에 진력해 왔다. 비록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뒤지긴 하지만 교통시설특별회계 덕분에 도로 교통시설 투자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제는 친환경적인 철도, 항만 등의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위해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 공급도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져 전국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등 대형 국책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2002년 이후 건설투자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15%대에 머물고 있다. 경제성장의 속도 둔화와 포화상태에 달한 주택, 상수도 보급, 도로포장 등의 상황은 앞으로 건설투자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대변해 준다. 혹자는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건설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건설통계도 환경변화를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한편 새로운 건설수요의 창출 및 등장에도 대응해야 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버산업에 대한 투자에도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 서민층의 주거복지문제만이 아니라 농어촌의 주거복지 문제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리고 탄소저감운동의 일환으로 과학 분야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에서도 태양열 주택, 조력 및 풍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건축물에서도 에너지 절약형 설계 및 시공 등에도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한편 공간적으로도 지상 위의 건축물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지하공간의 활용, 해저공간의 활용도 눈에 띄고 있다. 대심도 도로 및 철도 건설, 해저터널, 모노레일 및 자전거 전용 고가도로 건설 등이 검토되고 있다. 나아가 우주시대를 대비한 우주관광 개발, 우주정거장 건설 등에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 건설통계의 발전방향

(1) 건설통계 간의 연계성 강화

통계는 기술통계와 추측통계로 나눌 수 있는 바, 기술통계를 통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추측통계를 통해 미래에 대한 전망과 예측을 하게 된다. 그런데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통계들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사 및 통계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건설산업 통계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투자액 추정, 건설수주액, 건축허가면적 및 건축착공면적, 건설기성액 등 건설통계의 주요 지표들 간에 연계성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동일한 사업이나 토지를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주받은 사업이 현재 어느 공정을 진행 중인지, 허가받은 면적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통계 간의 시차를 분석할 수 있고 지연요인에 대한 파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건설기성통계의 경우에는 사업단위별로 기성액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업체단위의 월간 통합 기성액으로는 어느 사업장에서 얼마만큼 진행 중인지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건설수주 통계가 사업별로 작성된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성통계도 사업단위별로 조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비록 공표는 개별사업 단위별로 하지 않더라도 기성액도 수주액과 마찬가지로 세부 공종별로 제시하고, 아울러 공종별로 수주연도별 기성액통계 등을 추가로 작성하게 된다면 공종별 분석에 매우 유용한 지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건설통계의 추계에도 매우 유용

하게 쓰일 것이며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건축허가면적과 착공면적도 착공면적 조사시 허가시점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연계통계 작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준공면적통계가 발표되고 있지 않은데 준공통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체 사업의 주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준공통계 조사 시 반드시 건축 허가시점, 건축착공시점을 표시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주택건설실적(인허가)도 미분양주택통계, 입주 및 준공통계 등을 연계성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 조사시 인허가 시점을 표시하고 입주 및 준공통계에도 인허가 시점을 나타냄으로써 통계 간의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구축해야 한다.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및 착공면적 통계와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면적과 호수로 조사 및 발표기준이 상이한 점을 극복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주택은 거래단위가 호수이므로 호수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도 혼동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건설통계 조사의 신뢰성 증대

기초조사 자료가 정확해야만 통계의 신뢰성, 통계분석의 정확성 등이 제고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조사가 가능한 통계작성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설관련 통계는 대부분 기초조사를 업체로부터 받아서 작성되고 있다. 건설계약액을 예로 들면, 발주자 입장에서는 발주액, 수주자 입장에서는 수주액이 될 수 있고 둘 간에 시점이 나 금액이 일치하여야 맞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주자인 건설업체들의 신고에 의해 자료가 작성 공표되다보니 수주액이라는 것이 더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업체들마다 적용하는 기준의 차이, 전략적 의도에서 신고시점을 달리하는 통계작성의 자의성이 존재할 수 있다. 수주업체가 작성하는 통계에 의한 검증 및 통계조사의 신뢰성 제고차원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통계도 필요하다.

수주업체에 의존하는 통계 작성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통계로 전환되면 먼저는 통계의 신뢰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인허가 및 입찰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에서 서류 작성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동으로 신고 접수되도록 하면, 굳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주업체로부터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부문의 자료에 대한 조사이다. 민간 발주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업무 대행 등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도와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3) 건설통계의 통합관리 정책

건설통계는 국토해양부와 그 산하공기업, 그리고 각종 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작성·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통계청은 각 협회의 자료를 받아서 최종 보고서 형태로 건설업통계조사를 사후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그밖에 일부 기관들이 건설업 경영관련 지표,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 등을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낮아 통계의 개선 및 정확성 제고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산발적으로 생산되는 건설통계들을 관리하고 통계 간 연계성을 높이며 자의성을 배제시키는 등의 개선노력을 어느 한 기관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건설통계를 건설관련 산하기관과 주요 협회를 관리·감독하는 국토해양부가 통합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내에는 건설통계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부서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고 충분한 인력도 보유하지 못한 실정을 감안할 때, 건설통계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두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만일 이러한 통합관리가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국가통계관리차원에서 통계청이 건설통계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가경제의 15%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에서 생성되는 통계를 보다 잘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합의를 거쳐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맺음말

날이 갈수록 통계의 중요성과 그 활용도는 커지고 있다. 야구 등 스포츠 감독도 선수 기용을 결정하는 데 각종 기록과 통계에 근거하고 있고, 소매점포를 개설하는 데도 소비자들의 선호나 기호 조사 등의 통계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다. 하물며 국가경제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산업, 개별 프로젝트 하나만 하더라도 수천억원에서 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건설산업에 통계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건설관련 정책들에 과연 통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되고 기여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미분양사태를 예로 들면, 당장 건설업체, 시행업체, 그리고 금융기관 등 사업참여자들의 과욕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로 하여금 이러한 예측을 가능하게 했던 근거와 사용된 수많은 통계들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어떤 역

할을 했을까?

가령 어느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의사결정을 하려면, 먼저 해당 지역의 주택 과부족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에 주택이 몇 호가 존재하고 인허가 받은 물량은 몇 호, 공사 중인 것은 몇 호인지가 소상히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향후 몇 년 동안의 준공주택 호수가 파악되고 멸실주택 호수 및 수요를 고려하여 주택 과부족을 판단하고 공급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의 전개는 사용 가능한 통계가 구축되어 있고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 미분양사태 상황에 국한할 때, 건설통계의 역할은 미미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부분 시행주체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하여 시행착오 각오하고 투자를 결정해 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설실적, 미분양, 입주 등 각종 통계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진행단계나 향후 입주 및 준공물량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나 예측치가 없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통계는 한 국가와 산업의 중요한 자산이자 인프라다. 건설산업 또한 건설통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현상에 대한 파악과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기초한 산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금융과의 접목도 강화되고 있고 환경, 에너지 등의 새로운 수요의 창출도 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변화와 업역제한 폐지 등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기여하기 위해서는 건설통계의 발전이 수반되어야 한다. 건설통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상호관계를 보다 엄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된 관리운영시스템을 갖추어 건설통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한국의 사회지표



사회복지통계과 김미애

“사회지표”란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 상태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한다. 아울러 한 사회의 주요 측면의 상황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주는 규범지향적인 관심의 성격을 가진 통계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생활의 측정, 사회상태의 종합적인 측정, 사회변화의 예측, 사회개발정책의 성과 등을 측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 및 문화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지표를 모은 것이 “한국의 사회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2008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된 주요 관심지표를 통하여 요즘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I. 서론

통계청에서는『한국의 사회지표』를 1979년 이후부터 매년 작성하여 책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2008 한국의 사회지표』에는 통계청 및 각급 통계작성기관에서 만든 통계를 수집·재분류하여

인구, 노동, 소득·소비, 복지 등 13개 부문에 걸쳐 총 487개 지표를 수록하였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정도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파악하여 각종 사회개발 정책의 계획수립, 정책결정과 효과측정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표체계는 인구, 가가와 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화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의 13개 부문으로 나뉘며, 부문별로 관심영역의 지표를 포괄하고 있다.

작성방법은 통계청과 각급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기존 통계자료를 재분류, 가공하여 지표를 작성하고, 주관적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금부터는 한국의 사회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되는 주요 지표를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분야별 주요 관심 지표

1. 인 구

1) 인구규모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장래추계인구)는 4,860만7천명이며, 전년대비 인구성장률은 0.31%로 나타났다. 2008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자녀수)은 1.19명으로 2007년 1.25명보다 0.06명 감소하였다.

1983년에 대체출산율¹⁾ 수준까지 낮아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후 2006년, 2007년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8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한편 2008년 조(粗)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9.4명으로 2007년 10.0명보다 0.6명 감소하였다. 이는 2007년 황금돼지해 영향으로 인한 출산 증가 효과가 2008년에는 사라진 결과로 보인다.

〈 총인구,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 : 1980~2008년 〉

(단위 : 천명, %, 인구천명당, 可妊여성1명당)

연 도	총인구	인구1)		인구1) 성장률	조출생률	합계출산율2)
		남자	여자			
1980	38,124	19,236	18,888	1.57	22.7	2.83
1990	42,869	21,568	21,301	0.99	15.4	1.57
2000	47,008	23,667	23,341	0.84	13.3	1.467
2001	47,357	23,843	23,514	0.74	11.6	1.297
2005	48,138	24,191	23,947	0.21	8.9	1.076
2006	48,297	24,268	24,030	0.33	9.2	1.123
2007	48,456	24,344	24,112	0.33	10.0	1.250
2008	48,607	24,416	24,191	0.31	9.43)	1.19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인구성장률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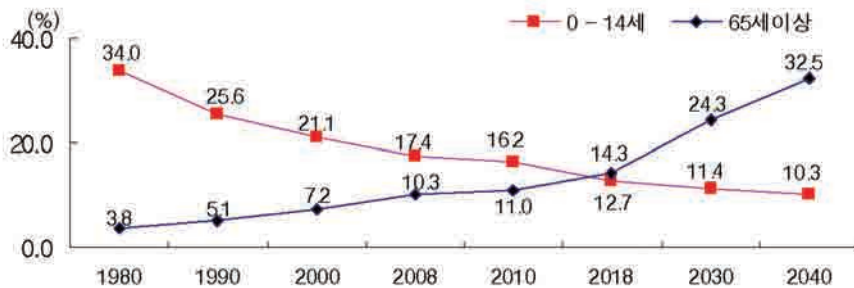
2) 가임여성 한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자녀수. 현재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합계출산율(2.1명)

3) 2008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임

2) 인구 구조

2008년 총인구를 연령에 따라 3계층으로 구분하면, 0~14세의 유년인구는 총인구의 17.4%,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72.3%,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3%를 차지하고 있다. 14세 이하 유년인구 비중은 출산율 둔화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계속 높아져 지난 2000년(7.2%)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14.3%)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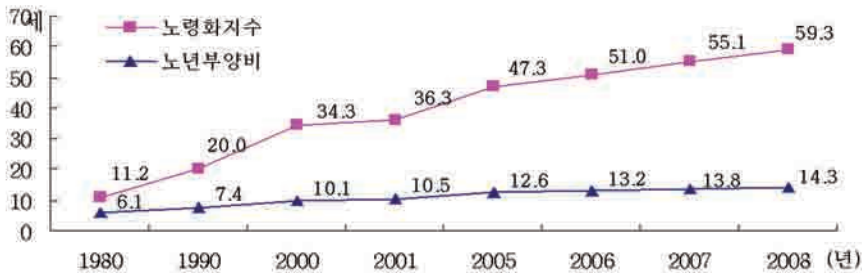
〈연령계층별(0-14세, 65세이상) 인구구성비〉



3) 중위연령, 노령화지수, 평균수명

2008년 중위연령은 36.7세로 전년(36.1세)에 비해 0.6세, 1980년(21.8세)에 비해서는 14.9세 높아졌다. 노령화 지수는 59.3으로 1980년(11.2)에 비해 5.3배 증가하였다. 노년부양비도 계속 증가하여 2008년에는 14.3%로 전년대비 0.5%p, 1980년에 비해서는 8.2%p 증가하였다. 2007년 기대수명은 79.6세로 전년(79.2세)에 비해 0.4세 길어졌으며 남자 76.1세, 여자 82.7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6.6세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노령화지수와 노년부양비〉



2. 가구·가족

1) 가구구성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미뤄지면서 혼인을 자체도 감소해 최근 10년 동안 약 12% 넘게 감소했다. 반면 이혼이나 재혼은 늘어나는 추세로 결혼에 대한 풍속도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우리나라의 총가구수는 1,667만 3천가구로, 2030년에는 1,987만 1천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는 2.79명으로 추정되며, 1인가구의 증가세에 따라 평균가구원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된 가구유형은 부부+자녀가구(696만5천가구)로 전체의 41.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1인가구가 335만7천가구로 20.1% 수준을 보이고 있다.

〈 가구 추이 및 가구 구성 : 2005~2030년 〉

(단위 : 천가구, %, 명)

연도	일반가구		평균 가구원수	가구구성					
		증가율		부부	구성비	부부+자녀	구성비	1인	구성비
2005	15,971	1.59	2.89	2,268	14.2	6,744	42.2	3,187	20.0
2006	16,158	1.17	2.86	2,324	14.4	6,808	42.1	3,239	20.0
2007	16,417	1.60	2.83	2,391	14.6	6,889	42.0	3,298	20.1
2008	16,673	1.56	2.79	2,460	14.8	6,965	41.8	3,357	20.1
2010	17,152	1.39	2.73	2,603	15.2	7,092	41.3	3,473	20.3
2020	19,012	0.77	2.48	3,360	17.7	7,215	38.0	4,109	21.6
2030	19,871	0.14	2.35	4,112	20.7	6,709	33.8	4,713	23.7

자료 : 통계청「2007년 장래가구추계」

2) 혼인, 이혼 및 재혼건수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결혼하는 나이가 점점 미뤄지면서 혼인을 자체도 감소해 최근 10년 동안 약 12% 넘게 감소했다. 반면 이혼이나 재혼은 늘어나는 추세로 결혼에 대한 풍속도가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연간 혼인건수는 32만7천7백건으로 전년(34만3천6백건)보다 약 1만5천8백건 감소하였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3만6천2백건으로 전체 혼인건수 중 11%를 차지하고 있다.

〈 혼인, 이혼 및 재혼건수 : 1990~2008년 〉

(단위 : 건)

연도	총혼인건수 ¹⁾			총이혼건수	총재혼건수 ²⁾
		외국인과의 혼인	총혼인건수대비		
1990	399,312	—	—	45,694	18,838
1997	388,960	—	—	91,159	28,087
2000	332,090	11,605	3.5	119,982	32,015
2001	318,407	14,523	4.6	135,014	34,618
2005	314,304	42,356	13.5	128,468	46,351
2006	330,634	38,759	11.7	125,032	41,325
2007	343,559	37,560	10.9	124,590	41,971
2008	327,715	36,204	11.0	—	—
증감(률)(2008/2007)	-4.6	-3.6	0.1	-0.4 ³⁾	1.6 ³⁾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주 : 1) 1998년 이후 해외 주소 자료 제외

2) 총재혼건수에는 양쪽 모두 재혼인 경우만 포함

3) 2007년 증감률임

3) 평균 초혼·재혼연령 및 첫 자녀 출산연령

2008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1.1세, 여자 28.1세로 남자는 0.2세, 여자는 0.3세 높아졌고, 10년전(1997년)에 비해서는 남자 2.5세, 여자 2.4세 높아졌다. 평균 재혼연령은 남자 45.0세, 여자 40.3세로 최근 10년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첫 자녀 출산 시 모(母)의 평균연령은 29.6세로 전년에 비해 0.2세, 10년전(1998년)에 비해서는 2.5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초혼, 이혼 및 첫 자녀 출산연령 : 1998~2008년 〉

(단위 : 세)

구 분		1998	2000	2002	2005	2007	2008
평 균 초혼연령	남자	28.8	29.3	29.8	30.9	31.1	31.4
	여자	26.0	26.5	27.0	27.7	28.1	28.3
평 균 재혼연령	남자	41.6	42.1	42.1	44.1	44.8	45.0
	여자	36.9	37.5	37.9	39.6	40.1	40.3
첫 자녀 출산 시 모의 평균연령		27.1	27.7	28.3	29.1	29.4	29.6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인구동태통계연보(총괄·출생·사망편)」, 각년도

3. 소득·소비

1)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및 국민처분가능소득

2008년 국민총소득(GNI)은 1,030조6천억원(명목)으로 전년(976조2천억원)에 비해 5.5% 증가하였다.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 상승(연평균 18.7%)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NI는 2008년 19,231달러로 전년(21,695달러)에 비해 11.4% 감소하였다.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규모인 국민처분가능소득은 894조2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상승의 둔화로 국민소득(NI)(영업잉여와 피용자보수의 합)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은 60.6%로 전년(61.1%)에 비해 0.5%p 감소하였다.

〈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 및 국민처분가능소득 추이 : 2005~2008년 〉

(단위 : 십억원, %, %p)

연 도	GNI(명목)		GDP(명목)	국민처분가능소득 (명목)	노동소득 분배율
		1인당(\$)			
2005	864,427	17,531	865,241	748,041	60.7
2006	910,134	19,722	908,744	785,885	61.3
2007	976,814	21,695	975,013	844,616	61.1
2008	1,030,636	19,231	1,023,938	894,153	60.6
증감(률)(2008/2007)	5.5	-11.4	5.0	5.9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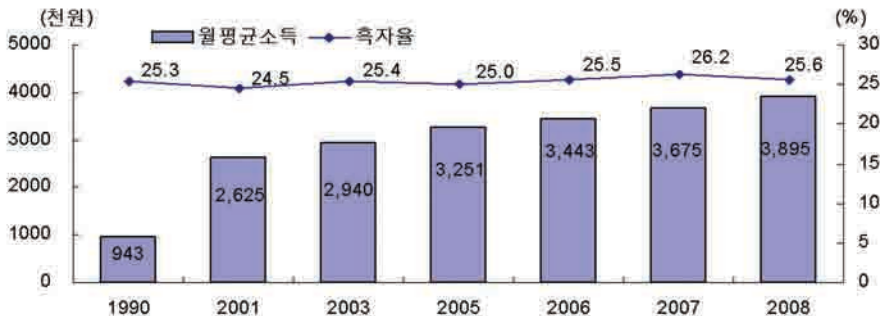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008년 국민계정(잠정)」 보도자료

주 : 2005년 기준임

2)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2008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89만5천원으로 전년(367만5천원)에 비해 6.0%, 월평균 소비지출도 249만5천원으로 2007년에 비해 6.2% 증가하였다.

평균소비성향은 74.4%로 전년(73.8%)에 비해 0.6%p 증가한 반면 흑자율은 25.6%로 전년(26.2%)에 비해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 및 흑자율¹⁾ 〉

주 : 1) 흑자율 =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3)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

2008년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구성비(엔겔계수)는 25.6%로 전년(25.1%)에 비해 0.5%p 증가하였다. 외식비의 비중은 11.9%로 10년 전(9.3%)에 비해 2.6%p 증가한 반

면, 식료품비의 비중은 27.8%에서 25.6%로 2.2%p 감소하였다. 교육비의 비중은 12.6%로 전년(12.0%)에 비해 0.6%p, 10년 전(11.5%)에 비해 1.1%p 증가하였고, 교통통신비의 비중은 16.9%로 전년(17.2%)에 비해 0.3%p 감소, 10년 전(14.0%)에 비해 2.9%p 증가하였다.

〈 도시가구¹⁾의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 : 1990~2008년 〉

(단위 : %, %p)

구 분	1990	1998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8-1998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식료품	32.2	27.8	27.4	27.0	26.4	25.7	25.1	25.6	-2.2
외식	6.5	9.3	10.8	12.6	12.2	11.9	11.8	11.9	2.6
교육	8.4	11.5	11.2	11.7	11.8	11.8	12.0	12.6	1.1
교양·오락	4.7	4.5	5.2	4.9	4.9	4.8	5.0	4.7	0.2
교통·통신	8.5	14.0	16.0	17.2	17.3	17.5	17.2	16.9	2.9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각년도

주 : 1) 도시의 근로자 및 근로자의 가구

4. 노 동

1) 노동력 공급 구조 추이

2008년 15세이상 인구는 3,959만8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1.1% 증가하였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2,434만7천명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한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전년대비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2,357만7천명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고, 실업자는 76만9천명으로 1.7%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2%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25만1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2.0% 증가하였고, 이 중 구직단념자는 11만9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9.7%가 증가하였다.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1) : 2000~2008년 〉

(단위: 천명, %, %p)

연 도	15세이상 인 구	경제활동 인 구	참가율	취업자	고용률2)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 활동인구	구 직 단념자3)
2000	36,186	22,134	61.2	21,156	58.5	979	4.4	14,052	165
2003	37,340	22,957	61.5	22,139	59.3	818	3.6	14,383	90
2005	38,300	23,743	62.0	22,856	59.7	887	3.7	14,557	125
2006	38,762	23,978	61.9	23,151	59.7	827	3.5	14,784	122
2007	39,170	24,216	61.8	23,433	59.8	783	3.2	14,954	108
2008	39,598	24,347	61.5	23,577	59.5	769	3.2	15,251	119
증감(률) (2008/2007)	1.1	0.5	-0.3	0.6	-0.3	-1.7	-	2.0	9.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주: 1) 2000년부터는 '구직기간 4주' 기준 적용함 2) 취업인구비율

3)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2)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2008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8.7%로 전년대비 0.5%p 증가하였고, 자영업주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은 전년대비 각각 0.5%p, 0.1%p 감소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1.6%p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중은 각각 1.1%p, 0.5%p 감소하였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1.1%p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 제조업, 농림어업,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취업자 비중은 모두 감소하였다.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비 : 1995~2008년 〉

(단위: %, %p)

연 도	취업자	임 금 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 사 자
1995	100.0	63.2	58.1	27.9	14.0	27.3	9.5
2000	100.0	63.1	47.9	34.5	17.6	27.7	9.1
2005	100.0	66.4	52.1	33.3	14.6	27.0	6.6
2007	100.0	68.2	54.0	32.4	13.6	25.8	6.0
2008	100.0	68.7	55.6	31.3	13.1	25.3	5.9
증 감 (2008-2007)	-	0.5	1.6	-1.1	-0.5	-0.5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주: 1) 상시 근로자=상용 근로자+임시 근로자

〈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 1995~2008년 〉

(단위 : %, %p)

연 도	계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SOC 및 기타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개 인·공공서 비스업	전기·운 수·통신· 금융업
1995	100.0	11.8	23.7	23.6	64.5	—	—	—	—
2000	100.0	10.6	20.4	20.3	69.0	7.5	27.2	24.6	9.8
2005	100.0	7.9	18.6	18.5	73.5	7.9	25.4	30.3	9.8
2007	100.0	7.4	17.7	17.6	75.0	7.9	24.4	32.4	10.2
2008	100.0	7.2	17.4	17.3	75.4	7.7	24.1	33.5	10.1
증 감 (2008-2007)	—	-0.2	-0.3	-0.3	0.4	-0.2	-0.3	1.1	-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각년도

3) 임금수준

2000년 이후 화이트칼라 사무종사자에 비해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임금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순노무종사자 및 농림어업종사자의 상대적 임금도 하락하는 추세다.

반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사무직 종사자들의 임금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등의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집단과의 임금차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직종별 임금수준은 사무종사자 임금을 100으로 할 때,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가 188.9로 가장 높았고, 단순노무종사자는 54.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종별 근로자 임금격차 추이 : 2000~2007년 〉

(단위 : 천원, 사무종사자=100)

연 도	월평균임금 (천원)	임금수준(사무종사자=100)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 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종 사 자	기능원, 장치기계 조작종사자	단순노무 종 사 자
2000	1,643	189.0	137.1	100.0	78.1	87.6	95.9	62.8
2001	1,748	189.4	140.7	100.0	76.8	87.4	97.9	60.5
2005	2,333	176.9	118.1	100.0	68.3	88.6	85.5	53.1
2006	2,476	185.7	117.3	100.0	69.1	85.4	86.3	54.1
2007	2,577	188.9	113.8	100.0	69.8	74.1	85.9	54.7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각년도

5. 교 육

1) 취학률, 진학률

2008년 취학률은 초등학교 99.0%, 중학교 93.2%, 고등학교 90.0%, 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67.2%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중학교 진학률은 99.9%,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로 초·중고생 대부분이 상급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 진학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다.

〈 취학률과 진학률 : 1998~2008년 〉

(단위 : %)

연 도	취학률 ¹⁾				진학률 ³⁾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²⁾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 대학(교) ⁴⁾
1998	97.7	94.1	88.7	46.8	99.9	99.5	64.1
2000	97.2	95.0	89.4	50.2	99.95)	99.6	68.0
2001	97.5	96.1	89.8	52.9	99.95)	99.6	70.5
2006	98.8	96.2	93.1	63.5	99.95)	99.7	82.1
2007	99.3	96.0	91.3	66.1	99.95)	99.6	82.8
2008	99.0	93.2	90.0	67.2	99.95)	99.7	83.8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취학률 = (취학 적령학생수 / 취학 적령인구수) * 100

2)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 대학과정)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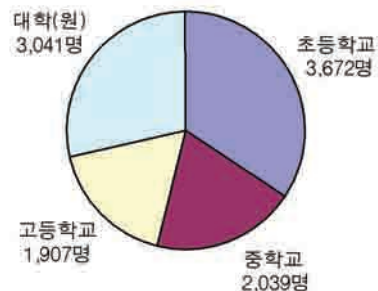
3)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 수 / 졸업생 수) * 100, 기타학교 진학 포함

4)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교육대학 등

5)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였음

2) 학교급별 학생 수

2008년 4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총 학생수는 1,065만9천명이며, 총인구 중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1.9%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년 전(1998년)에 비해 초등학생은 4.3%, 고등학생은 18.0% 감소한 반면, 대학이상 학생수는 304만1천명으로 22.6% 증가하였다.



〈 학교급별 학생수(2008년) 〉

3) 교육환경

정부예산대비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은 2008년 20.5%로 전년에 비해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18.8명, 일반계고등학교 16.4명, 전문계고등학교 13.4명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9.2명, 중학교 34.7명, 전문계 고등학교 30.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1명, 0.3명, 0.1명 감소한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전년대비 0.8명 증가하였다.

〈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교원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1995~2008년 〉

(단위 : %, 명)

연 도	정부예산 대 비 교육과학 기술부예산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 학교	전문계 ¹⁾ 고등 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 학교	전문계 ¹⁾ 고등 학교
1995	22.8	28.2	24.8	22.1	21.4	36.4	48.2	48.0	47.9
1998	23.3	27.4	20.9	22.0	21.0	34.9	40.8	49.0	47.1
2000	20.4	28.7	20.1	20.9	18.2	35.8	38.0	44.1	40.3
2006	20.1	24.0	19.4	15.8	13.5	30.9	35.3	33.7	29.9
2007	19.8	22.9	19.1	16.1	13.5	30.2	35.0	34.3	30.1
2008	20.5	21.3	18.8	16.4	13.4	29.2	34.7	35.1	3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년도

주 : 1) 2007년 4월부터 실업계고등학교 명칭이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됨

6. 보건

1) 사망원인 순위 및 사망률 변화

2007년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명당 137.5명이 사망하였으며, 다음은 뇌혈관질환(59.6명), 심장질환(43.7명), 자살(24.8명) 등이 뒤를 이었다.

10대 사인 중 10년 전(1997년)에 비해 사망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인은 암(24.8명)이며, 가장 많이 감소한 사인은 운수사고(-17.8명)이다.

〈 사망원인 순위 및 사망률 변화 : 1997, 2006, 2007년 〉

(단위: 인구 10만명당)

순위	1997		2006		2007		증감 (2007-1997)
	순위	사망률	순위	사망률	순위	사망률	사망률
암(악성신생물)	1	112.7	1	134.0	1	137.5	24.8
뇌혈관 질환	2	73.1	2	61.4	2	59.6	-13.5
심장질환	3	35.6	3	41.1	3	43.7	8.1
자 살	8	13.1	5	21.8	4	24.8	11.7
당뇨병	6	18.8	4	23.7	5	22.9	4.1
운수사고	4	33.3	6	15.9	6	15.5	-17.8
만성하기도 질환	7	13.5	8	14.4	7	15.3	1.8
간질환	5	26.0	7	15.5	8	14.9	-11.1
고혈압성질환	9	9.6	9	9.4	9	11.0	1.4
폐렴	-	4.9	10	9.3	10	9.3	4.4

자료 : 통계청, 「2007 사망원인통계연보」

2) 암 사망률

2007년 각종 암의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137.5명으로 나타났으며, 암 종류별로 보면 폐암(29.1명), 간암(22.7명), 위암(21.5명) 순으로 나타났고, 전년(2006)과 비교하면 폐암(0.4명), 간암(0.4명), 대장암(0.7명), 췌장암(0.3명), 전립샘암(0.2명) 등은 증가하고, 위암, 식도암은 감소하였다.

최근 10년간 사망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암은 폐암으로 8.4명 증가 한 반면, 가장 많이 감소한 암은 위암으로 4.0명 감소하였다.

〈 암 사망률 : 1997~2007년 〉

(단위 : 인구 10만명당)

연도	각종암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췌장암	자궁암	전립샘 암	유방암	백혈병	식도암	뇌암
1997	112.7	20.7	25.5	21.1	6.9	5.0	3.1	0.7	2.1	3.0	3.2	1.8
2000	122.1	24.4	24.3	21.3	8.9	5.7	5.6	2.3	2.5	2.9	3.2	2.1
2003	131.8	26.4	24.3	22.8	11.4	6.2	5.8	3.2	3.0	3.0	3.1	2.4
2005	134.5	28.4	22.6	22.5	12.5	7.0	5.6	3.7	3.3	3.0	2.9	2.4
2006	134.0	28.7	21.9	22.3	12.8	7.0	2.5	2.1	3.3	2.9	3.0	2.3
2007	137.5	29.1	21.5	22.7	13.5	7.3	2.5	2.3	3.4	2.9	2.9	2.4
증감 (2007-2006)	3.5	0.4	-0.4	0.4	0.7	0.3	-	0.2	0.1	-	-0.1	0.1
증감 (2007-1997)	24.8	8.4	-4.0	1.6	6.6	2.3	-0.6	1.6	1.3	-0.1	-0.3	0.6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7. 주거 · 교통

1) 주택가격지수

2008년 도시주택 매매가격은 전년에 비해 3.1% 상승하였고, 주택 형태별로는 연립주택이 7.9% 상승하여 아파트 2.3%, 단독주택 2.0% 상승하였다. 전세가격도 전년에 비해 1.7% 상승하여, 주택 형태별로는 연립주택(5.0%), 단독주택(2.1%), 아파트(0.8%)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지수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특히 2008년도는 타 주택에 비해 연립주택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 도시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 1998~2008년 〉

(2007. 12 = 100.0)

연 도	매매 가격지수				전세 가격지수			
	계	단독	연립	아파트	계	단독	연립	아파트
1998	60.7	87.1	70.3	48.2	57.0	81.3	60.5	46.5
2000	63.1	84.6	69.5	53.1	74.0	91.0	79.1	66.1
2005	86.9	92.5	81.1	86.1	91.6	95.2	86.8	91.2
2006	97.0	97.3	92.3	97.9	97.5	97.6	94.5	98.2
200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8	103.1	102.0	107.9	102.3	101.7	102.1	105.0	100.8
증감률(%) (2008/2007)	3.1	2.0	7.9	2.3	1.7	2.1	5.0	0.8

자료 :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년도

주 : 매년 12월 기준임

2) 교 통

2008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1,679만4천대로 전년에 비해 2.2% 증가하였다. 전체 자동차 수의 74.3%를 차지하는 승용차 등록대수는 1,248만대, 이 중 자가용 승용차는 1,202만6천대로 전년대비 3.0% 증가하였다. 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는 0.72대로 이는 10가구 중 7가구가 자가용을 보유한 셈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이다.

2007년 항공기 보유대수는 422대, 국적선 선박은 7,487대로 각각 전년대비 29.4%, 2.7% 증가한 반면 철도차량은 18,759대로 0.3% 감소하였다.

〈 자동차 등록대수 및 교통수단 보유현황 : 1990~2008년 〉

(단위 : 천대, %)

연도	자동차 등록 대수 (천대)				철도차량 (대)	항공기 (대)	국적선 선 박 (대)
		승용차 (천대)	자가용 (천대)	1가구당(대)1)			
1990	3,395	2,075	1,902	0.17	19,183	179	4,711
2000	12,059	8,084	7,798	0.54	17,779	262	6,494
2005	15,397	11,122	10,759	0.67	19,259	296	7,119
2006	15,895	11,607	11,219	0.69	18,807	326	7,292
2007	16,428	12,100	11,674	0.71	18,759	422	7,487
2008	16,794	12,484	12,026	0.72	—	—	—
증감(률) (2008/2007)	2.2	3.2	3.0	0.01	−0.32)	29.42)	2.72)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1990, 2000년은 인구주택총조사, 2001~2007년은 통계가구 자료 이용하여 산출

2) 2007년 증감(률)

8. 정보·통신

1) 일반전화, 이동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2008년 일반전화 가입자수는 2,213만2천명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하였고, 인구 백명당 가입자수는 45.5명으로 전년에 비해 2.2명 감소하였다.

2008년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4,560만7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4.8% 증가하였고, 인구 백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93.8명으로 10명 중 9명 이상이 이동전화에 가입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는 1,471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4.7% 증가, 보급 초기인 2000년에 비해 280.1%(약 3.8배) 증가하였고, 인구 백명당 가입자 수도 30.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3명 증가하였다.

〈 일반전화 · 이동전화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 1998~2008년 〉

(단위 : 천명, 명, %)

연 도	일반전화 가입자수 (천명)	인구백명당 (명)	이동전화 가입자수 (천명)	인구백명당 (명)	초 고 속 인 터 넷 가입자수 (천명)	인구백명당 (명)
1998	20,089	43.4	13,982	30.2	—	—
2000	21,932	46.7	26,816	57.0	3,870	8.2
2001	22,725	48.0	29,046	61.3	7,806	16.5
2005	22,920	47.6	38,342	79.7	12,191	25.3
2006	23,119	47.9	40,197	83.2	14,043	29.1
2007	23,130	47.7	43,498	89.8	14,710	30.4
2008	22,132	45.5	45,607	93.8	—	—
증감(률) (2008/2007)	-4.3	-2.2	4.8	4.0	4.71)	1.31)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주 : 1) 2007년 증감(률)

2) 인터넷 이용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1994년 상용망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이제는 국민생활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2008년 인터넷 이용률은 여자보다 남자가, 연령이 낮을수록(9세미만제외),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자는 주당 평균 13.7시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 연령대별 주당 평균이용시간은 20대가 18.6시간으로 가장 많고, 50대이상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높아지나, 주당평균이용시간은 14시간 안팎으로 나타나, 소득은 인터넷 이용시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9. 복지

1) 공적연금

공적연금 가입자(국민 · 공무원 · 사립교직원)는 2007년 1,954만명으로 전년(1,899만5천명)보다 2.9%, 10년전 가입자 수(902만1천명)와 비교하면 약 2.2배 증가하였다.

가입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가입자 대비 수혜자 비율은 국민연금이 2006년 11.3%에서 2007

〈 인터넷 이용률 및 주당 평균 이용시간 : 2008년 〉

(단위 : %, %p, 시간)

구 분	인터넷이용률 ¹⁾			주당평균 이용시간
	2007	2008	증감 (2008-2007)	2008
전 체	75.5	76.5	1.0	13.7
남 자	80.8	81.6	0.8	14.7
여 자	70.3	71.5	1.2	12.7
3 ~ 9세	79.5	82.2	2.7	8.6
10 대	99.8	99.9	0.1	10.4
20 대	99.3	99.7	0.4	18.6
30 대	96.5	98.6	2.1	15.4
40 대	79.2	82.0	2.8	16.0
50 대	46.5	48.9	2.4	7.4
60세이상	17.6	19.0	1.4	8.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주 : 1) 만3세 이상 인구 대상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 이용여부임

〈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혜자¹⁾²⁾ : 1997~2007년 〉

(단위 : 천명, %, %p)

연 도	공적연금가입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대비 수혜자		가입자대비 수혜자		가입자대비 수혜자	
1997	9,021	7,836	12.6	982	7.4	203	2.7
2000	17,330	16,210	5.8	909	16.6	211	6.3
2005	18,347	17,124	10.3	986	22.1	237	9.4
2006	18,995	17,740	11.3	1,009	23.4	246	10.1
2007	19,540	18,267	12.4	1,022	25.0	251	11.1
증감(률) (2007/2006)	2.9	3.0	1.1	1.3	1.6	2.0	1.0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각년도

주 : 1) 군인연금 제외 2) 매년 12월 기준임

년 12.4%로, 공무원연금이 23.4%에서 25.0%, 사학연금은 10.1%에서 11.1%로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 건강보험

2007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768만1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0.6% 증가하였다. 연간 건강보험료 총부담액은 21조7,287억원으로 전년(18조8,106억원)에 비해 15.5% 증가, 1인당 연간부담액은 45만6천원으로 전년(39만7천원)에 비해 14.9% 증가하여 가계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연간 건강보험 총급여비는 23조9,557억원으로 전년(20조9,316억원)에 비해 14.4%, 1인당 연간급여비는 50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하였다.

〈 건강보험 적용인구, 총부담액 및 총급여비 : 1997~2007년 〉

(단위 : 천명, 백만원)

연 도	건강보험 적용인구1)	건강보험 총부담액2)		건강보험 총급여비3)	
			1인당(천원)		1인당(천원)
1997	44,842	4,878,728	109	5,709,290	127
2000	45,936	7,228,817	157	8,789,329	191
2005	47,404	16,927,714	357	17,988,570	379
2006	47,409	18,810,579	397	20,931,600	442
2007	47,681	21,728,700	456	23,955,697	502
증감률(%) (2007/2006)	0.6	15.5	14.9	14.4	13.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연평균 건강보험적용인구임.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적용인구+의료급여적용인구

2) 국고부담 보험료가 제외된 수치임 3) 지급기준(현금급여비 및 건강진단비 제외)

10. 문화 · 여가

1) 영화 상영편수 및 관객수

2008년 한국영화 상영편수는 108편으로 전년(112편)에 비해 4편(3.6%) 감소하고, 관객수는 6,354만명으로 20% 감소하였다. 외국영화 상영편수는 271편으로 전년(280편)에 비해 9편(3.2%) 감소한 반면, 관객수는 8,729만명으로 10% 증가하였다.

따라서 2003년부터 5년 연속 외국영화보다 높았던 한국영화 관객 점유율이 2008년 42.1%로 내려앉았다.

〈 영화 상영편수 및 관객수 : 1997~2008년 〉

(단위 : 편, 만명, %, 회)

연 도	한국영화				외국영화			
	상영편수	관객수	점유율 ¹⁾	1인당 관람횟수	상영편수	관객수	점유율 ¹⁾	1인당 관람횟수
1997	60	1,212	25.5	0.23	271	3,540	74.5	0.77
2000	62	2,271	35.1	0.41	277	4,191	64.9	0.89
2001	52	4,481	50.1	0.96	228	4,455	49.9	0.94
2006	108	9,791	63.8	2.00	237	5,549	36.2	1.13
2007	112	7,939	50.0	1.61	280	7,938	50.0	1.61
2008	108	6,354	42.1	1.28	271	8,729	57.9	1.76
증감(률) (2008/2007)	-3.6	-20.0	-7.9	-20.5	-3.2	10.0	7.9	9.3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주 : 1) 점유율 = 한국(외국)영화 관객수 / 총 관객수 * 100

11. 안전 및 사회참여

1) 교통사고 현황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7년 21만1천7백건으로 전년(21만3천7백건)에 비해 1.0% 감소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도 각각 2.5%, 1.3% 감소하였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2007년 12.7명으로 전년(13.0명)에 비해 0.3명, 인구 10만명당 부상자수는 693.2명으로 전년(701.5명)에 비해 8.3명 감소하였다.

〈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 : 1985~2007년 〉

(단위 : 건, 명, %)

연 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1일평균	부상자수	인구 10만명당		1일평균
1985	146,836	7,522	18.3	20.6		184,420	449.2	505.3	
1990	255,303	12,325	28.8	33.8		324,229	757.7	888.3	
2000	290,481	10,236	21.8	28.0		426,984	908.3	1,169.8	
2005	214,171	6,376	13.2	17.5		342,233	708.6	937.6	
2006	213,745	6,327	13.0	17.3		340,229	701.5	932.1	
2007	211,662	6,166	12.7	16.9		335,906	693.2	920.3	
증감률 (2007/2006)	-1.0	-2.5	-2.3	-2.3		-1.3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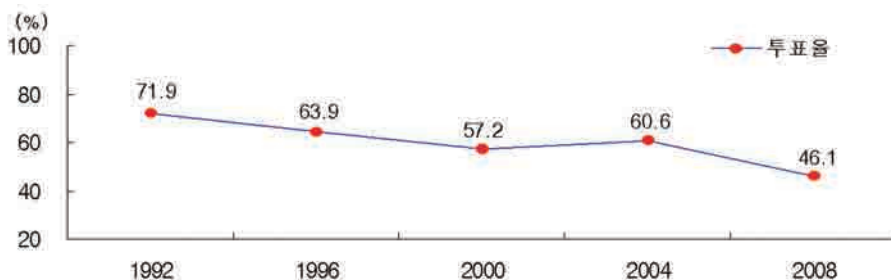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각년도

2) 투표율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63.0%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70.8%보다 7.8%p 감소하였으며, 대통령직선제 실시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도 46.1%로 2004년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60.6%보다 14.5%p 감소하여 국회의원 투표율로는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



〈 선거 투표율 : 1992~2008년 〉

(단위 : %)

연 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시·도	구·시·군
1992	81.9	71.9	—	—
1996	—	63.9	—	—
1997	80.7	—	—	—
1998	—	—	52.3	53.2
2000	—	57.2	—	—
2002	70.8	—	48.8	48.8
2004	—	60.6	—	—
2006	—	—	51.6	51.4
2007	63.0	—	—	—
2008	—	46.1	—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국회의원선거총람」, 「지방의회의원선거총람」, 각년도

Ⅲ. 맺는 말

지난 1979년 이래 30번째 발간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사회의 사회 경제 및 문화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하여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회적 상황과 변화하는 국민적 관심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의 사회지표에 수록된 모든 지표는 보고서 외에 통계청 홈페이지 내 디지털간행물이나 전자책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서비스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란다.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충격



정승영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부동산박사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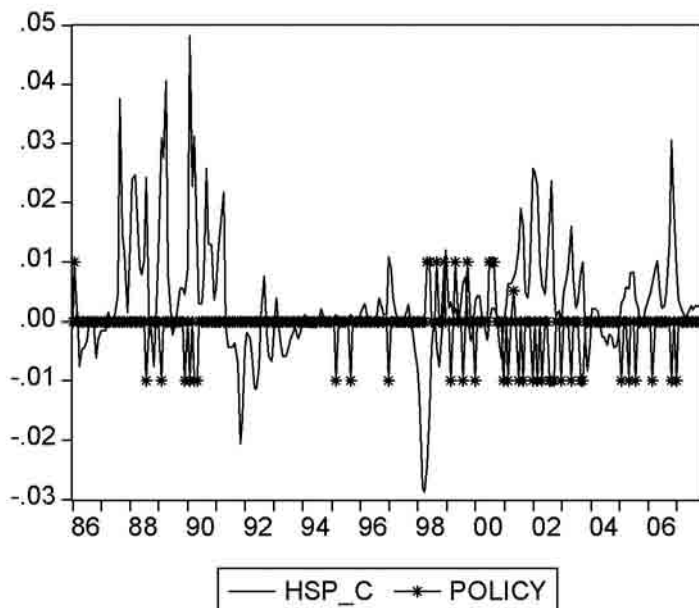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은 부동산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동산가격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 혹은 규제완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 정부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번 발표하는 다양한 부동산정책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별 주택정책의 방향과 시계열상의 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률과의 상관관계성 혹은 인과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시대에 따라 발생한 주요 부동산문제와 그에 따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특징을 요약하였다. 제2장에서는 실증적 연구로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규제강화 혹은 규제완화 형태로 이분형 자료화하여 시계열상 부동산가격의 변동에 반영하여 정부의 개입효과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정책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제적 지표와 부동산가격과의 관계를 보였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함의를 제시한다.

II. 부동산정책의 주택가격과의 상관관계성

〈그림 1〉 주택정책과 주택매매가격 변동률과의 관계



주 : HSP_C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 POLICY - 주요 주택정책의 발표(발표=0.01 ; 미발표=0)

주 : 주요 주택정책은 주택경기활성화인 경우는 +0.001이고 투기억제 및 주거복지정책인 경우는 -0.001로 표시하였음.

〈그림 1〉은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의 변동률을 1986년 1월-2007년 12월까지 월단위로 측정한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크게 주택경기활성화 조치와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로 구분할 수 있기에 본 사례연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정책을 구분한 후에 그 내용을 수치로 전환하여 * 표시로 그래프에 반영하였다. 여기서 양(+)의 수치는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을 대리하는 값이고 음(-)의 수치는 투기억제하기 위한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을 대리하는 값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1987년-1991년, 1998년 - 1999년, 2001년-2004년, 2006년 7월 - 2007년 2월의 기간에 매우 높았으나 2007년 3월부터는 점차 안정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서 2006년 10월 30일에 최고 높은 변동률을 보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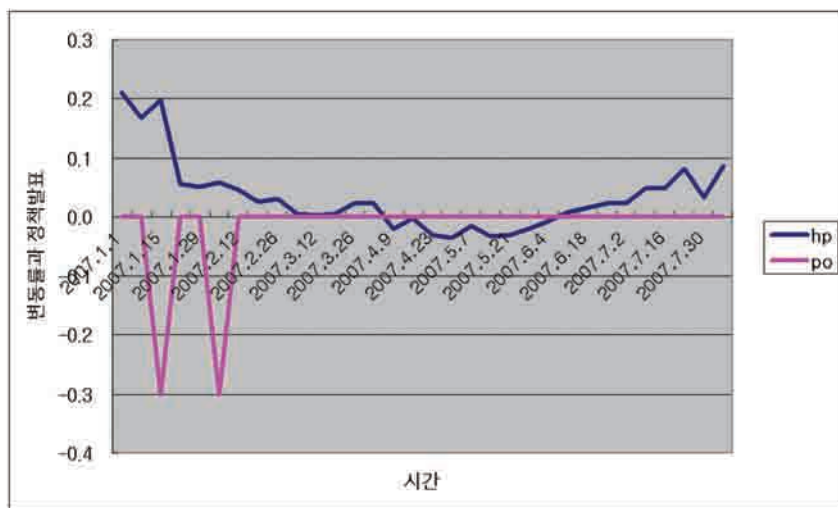
2007년 4월 말까지 비교적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정책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와 주택경기활성화 조치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주택정책과 서민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1988년 8월~1990년 5월, 2004년을 제외한 1999년 3월 - 20007년 12월 동안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정책을 분석해 보면 많은 부분이 주택시장을 규제하는 내용이 많다. 반면에 1986년에서 2007년도까지의 정부가 발표한 주택경기활성화에 대한 주택정책은 ① 1980년 9월 16일의 경제활성화 대책, ② 1980년 12월 13일의 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 ③ 1981년 6월 26일의 주택경기활성화 조치, ④ 1982년 1월 14일의 부동산 등 당면경제대책, ⑤ 1981년 5월 18일의 경기활성화 대책, ⑥ 1985년 9월 5일의 고용안정과 주택건설 촉진방안, ⑦ 1986년 2월 12일의 주택경기 촉진방안, ⑧ 1998년 6월 22일의 주택경기활성화 자금지원방안, ⑨ 1998년 9월 25일의 건설산업활성화 방안, ⑩ 1998년 12월 12일의 건설과 부동산활성화 대책, ⑪ 1999년 5월 3일의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주요내용, ⑫ 2000년 7월 1일의 주택건설촉진대책, ⑬ 2000년 8월 29일의 건설업 활성화와 구조개편촉진대책, ⑭ 2001년 5월 23일의 건설산업 구조조정과 투자적정화 방안이다. 정부가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시기는 1980년대 초와 1998년에서 2001년도 사이임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정부는 아파트매매가격의 변동률이 높게 변화는 시점에서 주택시장을 규제하는 많은 대책을 발표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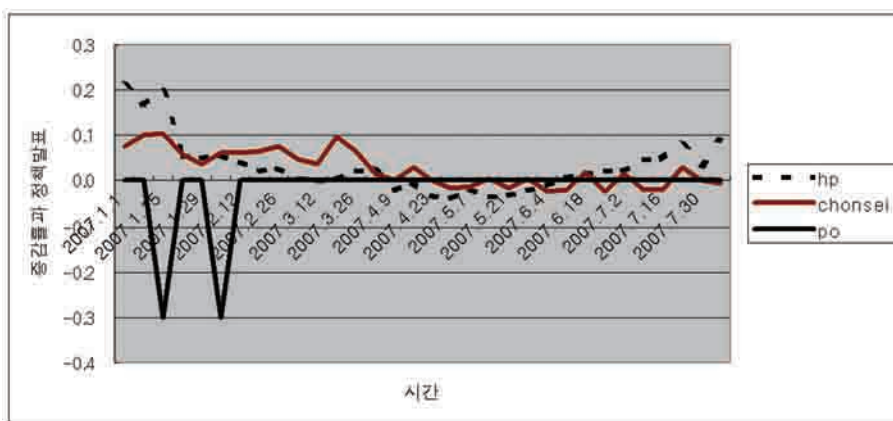
〈그림 2〉 전국 2007년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주 : hp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 po - 주택정책의 발표(규제정책의 발표=-0.03 ; 미발표=0)

〈그림 2〉에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률에 영향을 주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말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성은 2007년 1월 22일을 분기점으로 하여 2007년 5월 7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그 원인은 정부가 2006년 11월 15일 대책과 2007년 1월 11대책을 각각 발표하여 주택시장을 강력한 규제가 실시되었다.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성을 안정화시키는 정부의 2007년 1월 11일의 부동산 제도개편과 2007년 1월 31일의 공공부문역할 강화 방안이 있다. 여기서 각각의 정부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11월 15일 대책의 주요내용은 ① 공공택지내 주택의 조기공급과 공급확대; ②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확대; ③ 분양가 인하; ④ 투기지역 아파트의 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강화; ⑤ 6억원 초과 아파트 DTI규제 수도권 투기과역지구 확대 적용이다. 그리고 2007년 1월 1일 대책의 주요내용에는 ①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까지 적용; ②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확대; ③ 청약가점제 조기시행; ④ 전매제한 기한확대; ⑤ 토지 임대부와 할부조건부 시범사업실시; ⑥ 투기지역 1인 1건 담보대출로 제한이다. 정부가 발표한 2개 정책내용에서도 특히, 투기지역 아파트의 담보대출비율(LTV)규제강화와 투기지역 1인 1건 담보대출로 제한이 단기적으로 주택의 투기적 수요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전국 2004년-2007년 아파트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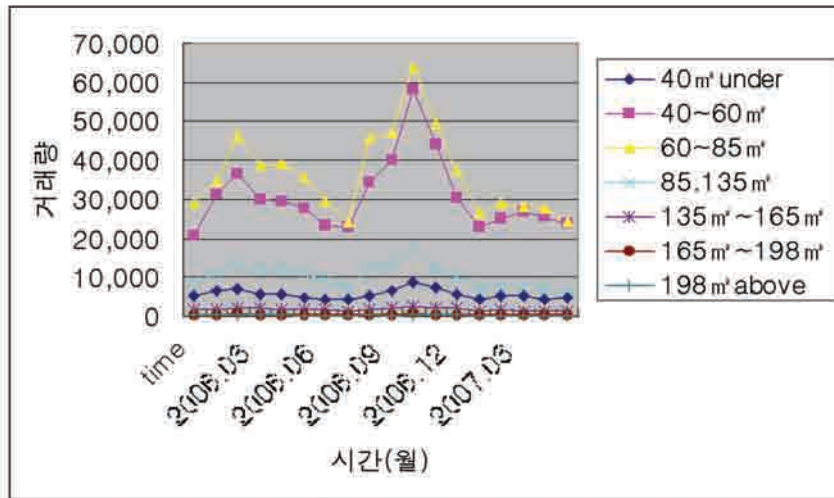


주 : hp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 po - 주택정책의 발표(규제정책의 발표=-0.03 ; 미발표=0)

전국 아파트 전세가의 가격변동률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률의 폭은 차이가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2007년 1월 1일- 2007년 2월 26일,

2007년 6월 18일-까지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의 변동률은 매우 높았으나 2007년 1월 이후 부터는 변동률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2007년 7월말에 약간 상승하였다.

〈그림 4〉 전국 아파트의 규모별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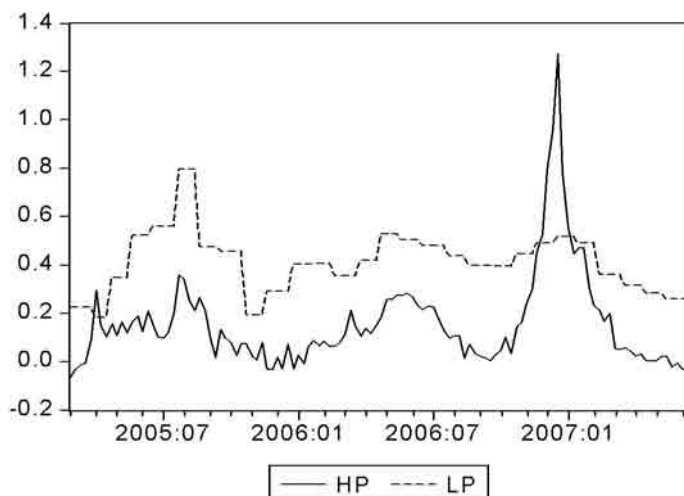
전국 아파트의 규모별 거래량은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주택시장은 주택의 규모, 주택이 위치한 위치 등에 따라 시장의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위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40m²~60m²(12~18평형), 60m²~85m²(18~25.7평형)의 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이 대형아파트에 비해 변동률이 크다. 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2006년 12월에는 급증하였다가 2007년 초부터는 거래가 안정화되었다.

IV. 부동산정책과 거시경제와의 상관관계성

본 장에서는 실증자료를 통해서 주택경기와 주택정책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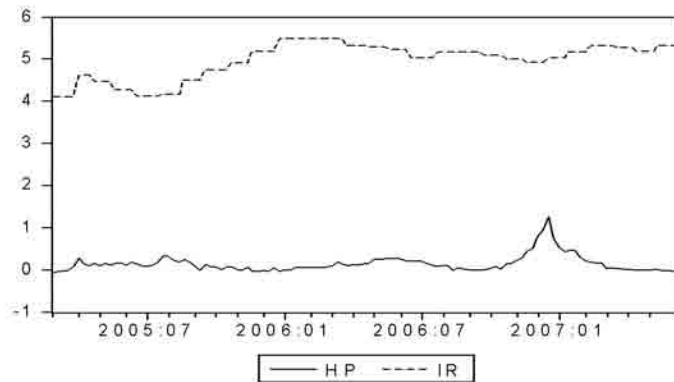
〈그림 5〉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과 토지가격의 변동률과의 관계



주 : hp - 주택매매가격 지수 ; lp - 토지 매매가격 변동률; po - 주택정책의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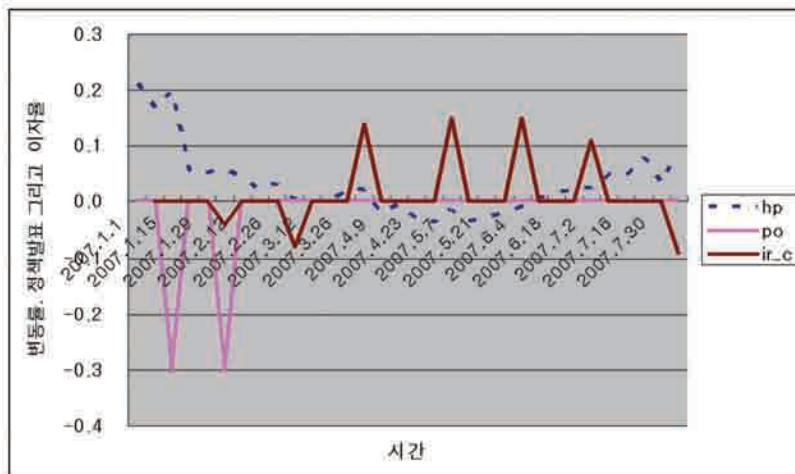
첫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과 지가변동률과의 관계는 동행이다. 위의 그래프를 통해서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률(HP)과 토지가격의 변동률(LP)의 추이가 유사하여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이 서로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서 특정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토지가격의 변동률이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과는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것도 발견 할 수 있다. 2006년 12월 12일 서울시의 중랑중화, 강서방화, 양천신청, 동작노량진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하는 내용의 발표와 2006년 12월 14일의 경기도 화성시 택지개발추진 발표가 2006년 말과 2007년 초의 지가변동률을 크게 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전국 개별공시지가 중 2006년과 비교가 가능한 2,545만여 필지 중 76%인 1,935만여 필지가 상승하고, 24%인 610만여 필지는 2006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하였다.

〈그림 6〉 아파트 매매가격과 시장이자율의 추이



주 : HP - 주택매매가격 지수; PO - 주요 주택정책의 발표(발표=1, 미발표=0)

〈그림 7〉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과 시장이자율 변동률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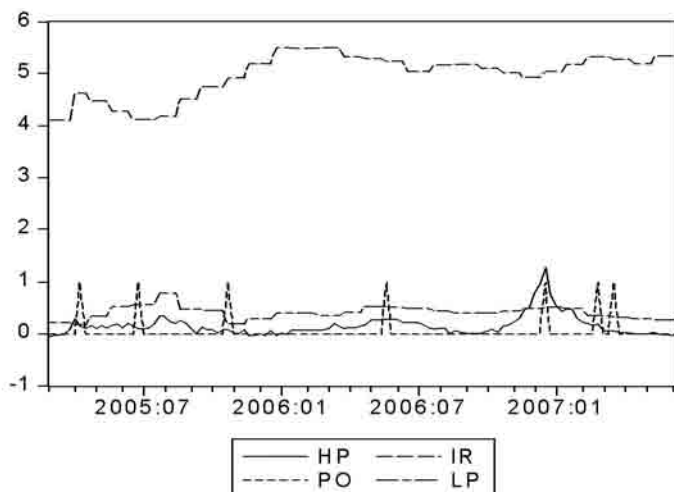


주 : HP - 주택매매가격의 변동률; IR_C-이자율의 변동률 ; PO - 주택정책(발표=-0.03, 미발표=0)

둘째,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률과 시중금리와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다. 즉 〈그림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률(HP)과 시중금리(IR)의 움직임이 ‘엇박자’이다. 이 원인은 정부의 주택정책과 관련이 있다. 〈그림 6〉에서 정부가 2007년 1월 11일에 강력한 주택정책을 발표한 후 3년 만기 보증부 회사채 수익률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시중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3년 만기 보증부 회사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이 상승

하면서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7.8%대로 진입했다. 이 시점의 주요 시중 은행의 대출이자율을 살펴보면 ① 국민은행의 경우 연 5.87%~7.67%; ② 우리은행의 경우 연 6.12%~7.82% ; ③ 신한은행의 경우 연 6.22%~7.62%이었다. 그래서 2주택이상 소유자와 강남권에 10억원이상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상과 제2금융권으로의 DTI규제 확대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더욱 위축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변동 없이 안정 기조를 유지했다.

〈그림 8〉 부동산가격과 거시경제



주 : HP - 주택매매가격 지수; IR -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PO - 주요 주택정책의 발표(발표=1, 미발표=0); LP - 토지매매가격 지수

셋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과 거시변수간의 관계이다.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아파트 부동산가격변동률(토지와 주택)은 부동산의 억제정책과 시중금리와의 역(逆) 관계로 움직인다. 2006년 11.5대책부터 2007년 1.31대책 까지 정부의 정책은 크게 세금규제, 금융규제, 주택공급 확대이었으며 향후 금융규제가 더욱 더 강화되었다. 따라서 2007년 하반기의 부동산시장에서는 중대형아파트의 매매가격은 하락하였고 소형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은 점차 상승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시대별로 우리나라의 주요 부동산문제와 그에 정부의 시장개입수단인 부동산정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실증적으로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시계열상의 부동산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은 크게 규제완화와 규제강화로 구분되고 정부의 정책수단은 토지이용규제 및 부동산조세에서 부동산금융으로 다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실시될 때 토지가격의 변동률이 아파트 매매가격변동률과는 다르게 반응을 보였다.

셋째, 정부가 1980년대 초, 1998년에서 2001년도 기간에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아파트매매가격의 변동률이 높게 변화는 시점에서는 정부는 부동산을 규제하는 많은 조치를 발표했다.

넷째,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률과 금융규제와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상과 DTI규제 확대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위축되었다.

다음 연구에서는 부동산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수치로 나타내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명직 · 장국현(1998), 금융시계열분석, 경문사.
 이정전(2007), 토지경제학, 박영사.
 임서환(2002), 주택정책 반세기, 대한주택공사.
 임재현 · 한상삼 · 정승영 · 최신용(2009), 주택정책론, 부연사.
 임재현 · 정승영 · 최신용 · 한상삼(2008), 부동산학개론, 부연사.
 장동훈 · 정승영(2009), 신부동산공법, 형설출판사.
 정승영(2009), 부동산자산관리통계학, 부연사.
 정승영 · 장동훈 · 우경 · 권영수(2009), 부동산공법연습, 부연사.
 정승영(2009), VAR모형 구축을 통한 상가임대가치의 예측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35호, 한국부동산학회, 2008, 12
 김명직 · 장국현(1998), 금융시계열분석, 경문사.
 박유성 · 김기환(2002), 시계열분석자료분석 I, 자유아카데미.
 허명희 · 박유성(1994), 시계열자료분석, 자유아카데미.



월간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개발사례

—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 —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팀 부장

1. 개발배경 및 목적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981년부터 분기별 중소기업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산, 판매, 재고 등 시의성 있는 동태통계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였으나, 모집단이 중소제조업 조합원사만을 대상으로 표본틀을 구성하였고 분기별 조사가 경기 Cycle 단기화에 따른 현장체감경기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2002. 3월 통계청에 분기별 중소기업 경영실태조사 작성 중지를 신청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중소기업계의 현장체감 경기동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 Small Business Health Index)를 개발하게 되었다.

2. 조사개요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를 활용한 월별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는 2002. 1월 표본설계, 그리고 제1차, 2차 예비조사를 거쳐 2002. 3월 통계청의 통계작성승인(일반통계, 제34011호)을 받아 2002. 4월 최초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KSIC상 제조업, 종사자수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제조업 1,500개이며, 담배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업 및 핵연료제조업, 재생재료가공처리업은 제외하였다. 조사방법은 중앙회 본부와 12개 지역본부로 이원화하여 실시되며, 조사내용은 전월대비 업황, 생산, 판매, 경상이익, 자금사정, 원자재조달사정 등 12개 항목의 전망 및 실적치이다.

표본설계는 기업체를 추출단위로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결과를 표본틀로 하였으며, 층화기준은 한국표준산업 중분류별로 1차 층화후 종사자 규모별로 2차 층화하였고, 표본수 결정은 Neyman의 최적배분법에 의하여 상대허용오차(ϵ) 0.07, 신뢰수준 95%로 산업중분류별 종사자 규모별로 결정하였다. 통계분류는 업종별, 공업구조별(경공업, 중화학공업), 기업규모별(소기업, 중기업), 기업유형별(일반제조업, 혁신형제조업)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경기예측은 중앙회가 자체 개발한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를 활용하였다.

3. 중소기업건강도지수 (SBHI, Small Business Health Index)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 Small Business Health Index)는 기존 BSI산출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회가 처음 개발한 고유의 중소기업경기예측지수이다

SBHI방식은 BSI(기업실사지수)의 3점척도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들의 경기판단국면을 5점척도로 세분화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높였다.

SBHI와 BSI 척도방식 비교

구분	SBHI	BSI
질의방법	5점척도 (매우나쁨, 나쁨, 동일, 좋음, 매우 좋음)	3점 척도 (호전, 동일, 악화)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 방식은 경영부분 항목별로 5점서열 척도로 배분하여 가중치(0, 50, 100, 150, 200)를 부여한 후 전체응답 빈도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SBHI가 100 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을 100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를 100이면 전월과 보합수준으로 해석한다. 단, 수준판단 항목인 생산설비, 제품재고수준, 고용수준 SBHI는 일반적으로 경기확장기에는 하락하고 경기수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이다. SBHI 특징은 BSI 산출시 동일(보합) 응답빈도가 결과치에 반영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였다.

SBHI와 BSI 산출방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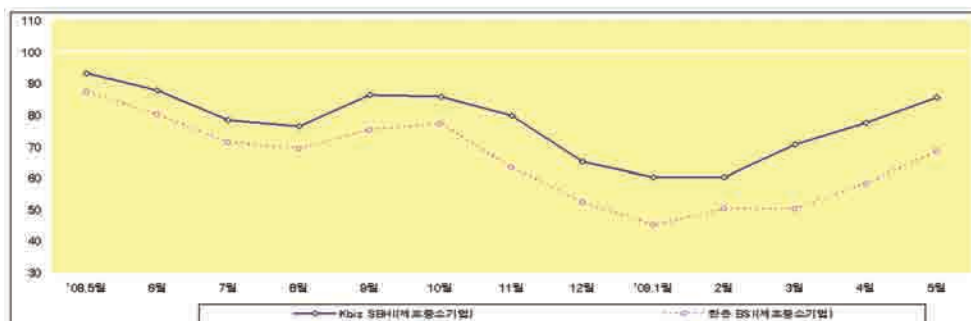
구분	산출방식
SBHI	$(\text{매우감소 응답빈도} \times 0 + \text{다소감소 응답빈도} \times 50 + \text{동일 응답빈도} \times 100 + \text{다소증가 응답빈도} \times 150 + \text{매우증가 응답빈도} \times 200) / \text{전체응답빈도수}$
BSI	$\text{호전응답업체 비율}(\%) - \text{악화응답업체 비율}(\%) + 100$

주 : 가중치 부여방식은 통계청 소비자전망지수 가중치 부여방식과 동일함

4. SBHI와 BSI 조사결과 비교

중앙회에서 매월 조사하여 발표하는 SBHI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BSI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SBHI 지수가 BSI 지수보다 기준치(100.0)에 근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BSI 지수가 지나치게 경제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비해 SBHI는 동일(보합) 응답비율을 지수에 반영한 결과이다.

SBHI와 BSI 조사결과 추이 비교



또한, SBHI는 2006년 국가통계품질진단결과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업황(전반적인 경기) BSI와도 외적 정합성 면에서 한국은행 BSI와 0.86, 전경련 0.84,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경기전망지수 BSI와는 0.77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지수의 신뢰성을 검증 받은 바 있다.

SBHI와 타기관 BSI와 상관관계

구분	한국은행	전경련	중기청(소상공인)
교차상관계수	0.86	0.84	0.77

자료 : 국가통계품질진단결과(2006)

또한, SBHI 조사는 EU, OECD에서 기업경기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시한 모집단, 가중치, 최소응답율, 측정척도 등 통일기준과도 대체적으로 부합하고 있다.

EU 및 OECD의 기업경기조사 통일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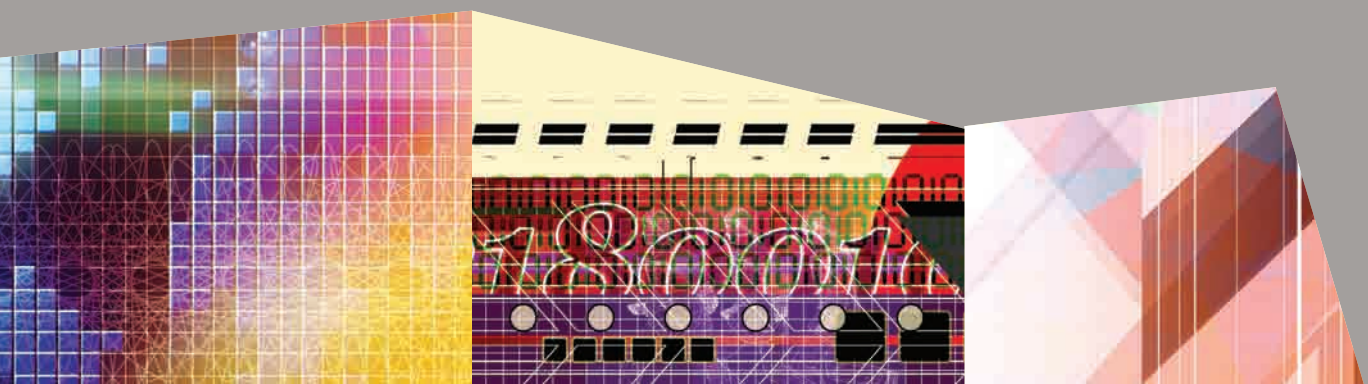
구분	통일기준 내용	SBHI 조사
조사대상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	제조업
모집단	조사대상 기간중 조사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	좌동
조사단위	표본단위 : 기업체, 보고단위 : 사업장	표본단위, 보고단위 모두 기업체
표본설계	전수조사 대상기업을 포함하여 경제활동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층화임의 추출	업종별, 종업원규모별 층화임의 추출
가중치	기업의 응답결과에 표본추출률의 역수와 종업원수를 곱해 가중	척도에 따라 가중치 반영
최소응답율	최초 고정표본이 층화임의 추출로 선정된 후 정기적으로 개편될 경우 50% 이상, 고정표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60~70% 상회	월 평균 92% 이상 유효응답
조사주기	월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핵심 항목만 조사하여 응답부담을 경감해야 함	월단위 조사 A4용지 1면
조사시기	월 조사의 경우 조사표 도착일이 매월 25일을 넘지 않고 익월 10일 이전에 조사표를 작성, 회송토록하여 익월 말경에 결과 공표	매월 15일 기준으로 5일간 실시
조사내용	조사항목은 질적 질문방식, 비교기간은 명확히 하고, 응답 기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묻고, 전망관련 질문은 향후 3~4개월 정도의 비교기간으로 할 것	질적 질문방식 비교기간제시(전월기준)
측정척도	3점 척도로 하되 일부 항목은 예/아니오, % 등으로 조사	5점 척도 (중양회 고유 SBHI 지수)

5. SBHI 품질관리 및 향후과제

중앙회에서는 SBHI 품질관리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각 기관별 기업경기동향 및 전망자료 공유 및 토론을 통한 품질개선을 위해 통계청, 한국은행, 전경련, 산업연구원, 중앙회 등 기업경기전망기관이 참여하는 ‘경기전망지수의 분석과 전망 포럼’을 분기별로 개최하여 통계의 품질개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 중앙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SBHI 품질관리를 위해 2006년 12월 서울대 국가경쟁력연구센터(소장 표학길 교수)가 주관으로 창립된 경기전망 포럼에 적극 참여하여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품질을 강화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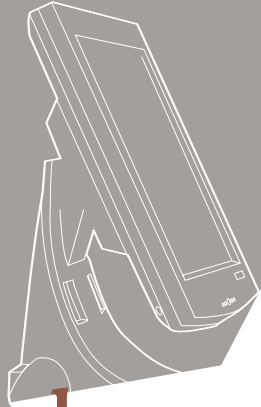
또한,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2006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진단시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받았음에도 일부에서 계절조정지수 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SBHI의 경우 계절조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지만 계절성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이미 조사표상에 계절요인 제거 후 응답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앞으로 중앙회는 월간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의 계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통계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매년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와 개선요구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체통계의 활용실태 및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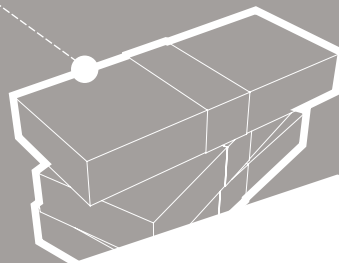
가구통계의 실태 및 활용방안



Research

통계연구

사업체 통계의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



이흥철 NIR 대표이사

1. 서론

사회 시스템이 발달해 갈수록, 정책의 입안과 수행 및 평가는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대상 경제통계들은 국가의 산업 구조와 현황 파악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며, 이런 통계들은 여러 정부부처, 국책 연구소 및 민간 연구소 등에서 정책의 계획수립 및 수행과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분산형 국가통계체계로 운영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 수행하고 관리하는 통계들은 60여종에 이르며 그 중 산업통계의 표집틀이나 근간을 이루는 통계는 약 10여종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1인 이상의 모든 업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각종 산업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되며,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 자료나 학술연구기관의 주요 연구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비슷하게 ‘광업및제조업통계조사’나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농어업법인통계조사’ 등은 해당 분야별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하여 각 산업 부문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년마다 전수조사로 시행하는 ‘산업총조사’는 광업과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사업 부문의 산업 구조와 분포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 이 조사는 경제정책 수립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대학과 연구소 등의 연구 활동 및 국제 비교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산업생산지수 산출 및 G에 디스플레이터 비중 산출과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업총조사’는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모든 산업체의 분포와 고용구조 및 경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 연구소 등의 연구와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일 부분의 각종 통계조사 표본 틀(sample frame)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산업 통계조사들은 시작 당시의 조사 목적이나 활용 계획 뿐 아니라, 추후의 필요나 요구에 맞추어 꾸준히 개편되어 왔다. 그래서 각 통계마다 조사 대상과 조사 항목의 중복 문제, 조사 간 통합이나 개편 및 신설과정에서 조사 대상 사업체의 분류가 일관성 및 연속성을 잃는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시계열 유지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최근 정보나 공공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태 조사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마케팅 조사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협조도가 낮아진 점은 비표본 오차가 증대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 산업 통계조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응답자 친화적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각종 경제 관련 보고서 및 논문에서 통계청이 수행 및 관리하는 주요 산업 관련 통계조사 결과의 활용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측면의 조사 대상을 포함한다. 첫째는 각종 보고서 및 논문에서 활용하는 경제 및 산업통계의 범위이며, 둘째는 이 통계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 및 논문이다.

2)연구대상 통계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경제통계 중에서 산업 및 경제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사업체 대상 조사통계 10종을 조사 대상 통계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가계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월간 산업 동향에 관한 조사는 제외되었다. 조사 대상 통계 10종은 <표 1>에 조사 주기 및 방법과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이 중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전수조사이며, 나머지 8종의 통계는 연간 조사로서 조사마다 전수와 표본조사를 병행하는 통계이다.

이 중, '기업활동실태조사'는 2006년 6월에 승인이 된 통계로 실제 인용 및 활용 현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사업체 대상 통계라는 점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보고서 및 논문에서의 인용 및 활용 실태를 조사했다.

3)인용 자료의 선정 및 범위

본 연구가 국가 산업통계의 활용 현황 분석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국책 연구소와 지자체의 지방 발전 연구소, 그리고 공신력 있는 민간 연구소 등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와 학술 진흥 재단에 등재된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고서 및 논문의 선정은 각종 지식 정보 포털에 등재되어 있는 상기 조건의 보고서와 논문을 먼저 선정하고, 이 중에서 통계청에서 산출하는 10종의 산업구조 통계조사를 인용한 산업 및 경제 부문 연구 보고서를 선정한 다음 2005년 이후에 출간된 보고서나 논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보고서 탐색 과정을 통해 10종의 산업구조 통계를 한 건이라도 인용한 보고서 329개가 검색되었다.

〈표 1〉 각 산업구조 통계조사별 조사 주기 및 방법

구분	조사 주기	조사 방법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년	• 임시 조사원에 의한 면접 타계식 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1년	• 자계식 혹은 타계식 조사
산업총조사	5년 (년도 끝자리가 3, 8인 해)	• 자계식 혹은 타계식, 우편조사, 본사 및 협회를 통한 일괄 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1년	• 임시 조사원에 의한 면접 조사 및 자기 기입식 조사 (대규모 결산 사업체의 경우)
서비스업통계조사	1년	• 임시 조사원에 의한 면접 조사 및 자기 기입식 조사 (대규모 결산 사업체의 경우), 인터넷 조사
서비스업총조사	5년	• 임시 조사원에 의한 면접 조사 및 자기 기입식 조사 (대규모 결산 사업체의 경우), 인터넷 조사
건설업통계조사	1년	•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한 보고 조사(전수조사), 지방 통계청을 통한 방문 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운수업통계조사	1년	• 표본조사(13개 업종, 5,238개), 전수조사(31개 업종, 1,915개)
농어업법인사업체 통계조사	1년	• 직접 방문을 통한 면접 조사
기업활동실태조사	1년	• 직접 방문을 통한 면접 조사

출처: 2008 통계 메타DB-<http://meta.nso.go.kr>

수집된 보고서별로 인용된 통계 종류별 인용 현황은 〈표 2〉에 제시되었다. 여기에서의 빈도는 하나의 보고서가 인용한 통계가 몇 개인지를 계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보고서가 전국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인용하였다면 각 통계에 한 번씩의 빈도로 계수가 된다. 또한 보고서 내에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10번 인용하였더라도 한 보고서 내에서 하나의 통계가 인용된 것으로 계수된다. 그 결과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187개의 보고서에서, 그 다음으로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가 159개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와 이들 두 통계가 가장 많이, 그리고 주로 인용되는 통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도소매업통계조사가 27개의 보고서에서, 서비스업총조사가 25개의 보고서에서, 그리고 산업총조사가 21개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6년 6월에 정부승인통계로 지정된 기업활동실태조사를 인용한 보고서는 검색되지 않았다.

〈표 2〉 산업구조 통계별 인용 보고서의 수 ¹⁾

구분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산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인용 현황	187	159	21	27	12
구분	서비스업총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	농어업법인 사업체통계조사	기업활동실태조사
인용 현황	25	13	14	3	0

3. 인용 현황 및 활용 실태

1) 통계별 조사표 항목 인용 현황 분석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인용이 총 928건 ²⁾의 인용 중 677건으로 73.0%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항목 중에서는 고용 사항이 365건으로 3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고용 항목,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고용 항목,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매출 및 수입 사항이 특징적으로 많은 인용 조사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그리고 매출액이 한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표 3〉 통계조사별 항목 집계 현황

구분	고용 사항	매출(수입) 사항	비용 사항	자산 사항	기타 사항	합 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66	43	0	0	136	348
광업제조업통계조사	117	129	23	30	30	329
산업총조사	13	14	8	6	4	45
도소매업통계조사	14	19	0	1	17	51
서비스업통계조사	16	7	1	0	3	27
서비스업총조사	22	16	1	4	16	59
건설업통계조사	7	13	1	2	3	26
운수업통계조사	7	10	1	4	8	30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	1	2	0	2	4	9
기업활동실태조사	2	1	0	1	0	4
합 계	365	254	35	53	221	924

1) 한 보고서에서 특정 통계조사 결과가 여러 번 인용되었어도 한 번으로 계수했으며, 단일 보고서에 복수의 통계가 인용되었을 경우는 인용된 통계를 중복으로 계수하였음.

2) 통계조사 결과를 인용한 경우를 모두 계수한 것임. 단,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인용한 경우는 하나의 인용으로 계수하였음.

2) 개별 통계조사별 분석

(1)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중에서 가장 활용 빈도가 높은 항목은 종사자수로 329건의 보고서 중에서 166건의 보고서 이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사업체 규모(종사자수)구분과 사업의 종류, 즉 산업의 분류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이며 매년 실시되어 조사의 범위의 포괄성과 시계열성 유지에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산업의 규모와 그 변화를 파악할 목적으로 주로 인용이 되며, 특정 산업의 규모는 보고서상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다. 종사자수는 단순히 산업의 규모 추정 자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 규모(예, 영세기업/중소기업/대기업)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에서 매출액은 총매출액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329종의 보고서 중에서, 사업체기초통계의 조사 항목상의 총매출액을 그대로 인용한 보고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총매출액은 있으나 산출 근거가 조사되지 않는 점과 경상가격으로 발표되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매출액과 부가가치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계수, 취업 탄력성, 산업 특화도 관련지수 등 여러 통계치들을 이용한 지수산출은 보통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외의 다른 통계조사의 통계치들과 결합해서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 있어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항목이 총 329건의 보고서 중, 125건의 보고서에 인용이 되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이 117건의 보고서에서 인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유형자산이 27개의 보고서에서, 그리고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은 23건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소비세나 본사 소속 타공장 유무 등의 항목은 단 1건의 보고서에서도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체 기준 통계이지만 1996년 통계부터 이를 기업 단위

로 확대하여 기업 통계도 아울러 작성하고 있으며, 끝자리가 3과 8인 연도에는 산업총조사로 개칭된다. 이때는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도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전기·가스·수도 사업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종사자수를 인용하는 경우는 항상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4인 미만의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를 인용할 경우에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와 함께 제시하거나 산업총조사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산업총조사의 경우 5년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시계열적 분석을 위한 적시성이 떨어져 주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비해 보다 세부적인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비교적 다양한 파생지표들이 이를 통해 산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취업계수나 고용탄력성, 산업특화도 등과 같은 구조적 특성 뿐 아니라, 산업의 수익성 지표, 성장성 지표, 그리고 생산성 지표들이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산출되어 인용되고 있다.

(3) 산업총조사

산업총조사의 경우 광업제조업통계에 비해서 조사 범위가 넓고, 조사 항목이 많으며, 4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도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공을 들인 조사다. 그럼에도 실제 인용 및 활용 빈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 등은 고용 사항과 매출 및 수입 사항을 각각 13개씩의 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비용 사항이 8개의 보고서에서, 자산 사항은 4개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주기가 5년으로 연간 시계열분석의 적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는 산업총조사와 마찬가지로 5년 단위 조사여서 조사 항목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5년마다 실시되기 때문에 연간 시계열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보고서에서는 인용 빈도가 그리 높지 않다. 조사 항목 중에서는 종사자수를 포함하는 고용 사항이 14건의 보고서에서 인용되어 가장 많은 인용도를 보여주었고, 매출 및 수입 사항이 16건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업종 분류 항목인 사업의 종류(사업의 내용)에 대한 인용이 6건으로 나왔다.

서비스업총조사는 다른 통계들과 조사 시기가 달라 자료 인용에 있어 시의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보고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공표되는 보고서의 조사 단위 중에서 지사와 분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자들이 부가가치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산업총조사나 광업제조업통계에서도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서비스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소비자와의 접점이 많이 필요한 특성으로 인해 지사 및 대리점 등이 많아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 다른 문제는 서비스업은 광업이나 제조업과 같은 2차산업과는 달리 산업의 유동성이 강하고, 이합집산이 강한 성격을 지닌 산업이라는 점, 통계조사의 문제라기보다는 통계조사가 활용하는 산업의 분류 체계에 맞지 않는 새로운 사업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산업과 경제의 융합 현상이 좋은 예이다.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분류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소매업통계조사는 대부분 고용 사항 항목이 14개의 보고서에 인용되었으며, 매출 및 수입 사항 항목이 19개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사업 내용과 조직 형태가 각각 6개의 보고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통계조사 항목의 경우 여타 다른 집계에 비하여 조사 형태나 방법이 어렵다. 활용이 많은 항목으로는 고용 사항 항목 16건과 매출 및 수입 사항 항목 7건이며, 조사 연수에 비하여 전체 인용 건수가 가장 적었다.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 산업 규모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일차적으로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로부터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된 업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자료를 이용해 추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매출액이나 부가가치는 주로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활용하거나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서비스업총조사의 경우, 조사가 5년마다 이루어지는 문제로 인해 연간 시계열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조사 항목이 많아 여러 형태로 자료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 활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를 인용하는 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건비와 영업이익을 합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부가가치를 산출한다. 그러나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규모를 추정할 때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나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실질 가치 기준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관련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운수업통계조사와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의 경우 종사자수를 포함한 고용 사항이 7건의 보고서에서 인용이 되었으며, 연간 운수 수입 및 운수 비용 항목이 7개의 보고서에서 인용되었고, 사업 형태가 4개, 수송 실적이 3개의 보고서에서 인용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통계조사의 경우 업종별 공사 실적, 매출액과 기성액 등과 같은 매출 및 수입사항이 가장 많이 인용된 항목이며 다음으로는 고용사항이 주로 인용되는 항목들로 나타났다. 건설업통계의 경우 각 업체별 투자 지역 정확성을 나타내는 항목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 또한 투자 지역과 본사를 따로 분류하지 않아 지역 투자 금액 조사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연구원(2006)의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에서 교통 시설별 투자액 자료로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를 소개하면서, 건설 기성액 자료는 장기간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등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 통계별 조사표 항목의 활용 유형 분석

1) 통계조사별 인용 및 활용 유형

통계청의 산업구조 통계조사를 인용한 보고서 및 논문들은 경우에 따라서 문장 내에서 인용을 하거나, 표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인용하거나, 연구자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는데 통계청 자료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329개의 보고서들이 어떤 방식으로 각 통계조사를 인용하고 활용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서의 빈도는 구체적인 인용에 대한 것이다. 329개의 보고서가 10종의 통계를 총 인용한 건수³⁾는 1,709건이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7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업제조업통계조사가 663건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업총조사가 85건, 도소매업통계조사가 71건, 산업총조사가 60건순으로 나타났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통계조사가 전체 인용 건수의 81.5%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율로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용 건수는 모두 계수한 것임. 즉,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인용한 경우도 모두 계수를 하였음.

〈표 4〉 통계조사별 인용유형

구분		전체 인용수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광업 제조업 통계 조사	산업 총조사	도소 매업 통계 조사	서비스업 통계 조사	서비스 업 총조사	건설업 통계 조사	운수업 통계 조사	농어업 법인 사업체 통계 조사
전체		1,709	730	663	60	71	40	85	30	20	10
문장 인용	선행연구 재인용	13	4	9	-	-	-	-	-	-	-
	단순참고 인용	115	48	42	2	8	6	3	2	4	-
	수치 인용	93	52	22	4	2	-	3	5	4	1
	다른 통계와 비교인용	11	6	1	-	1	-	1	1	1	-
표, 그래 프 인용	가공없이 인용	341	191	82	17	10	8	22	6	4	1
	가공없이 시계열 인용	543	251	167	23	23	23	31	12	5	8
	가공하여 인용	170	85	66	-	4	2	12	-	1	-
	가공하여 시계열 인용	405	81	271	14	23	1	11	4	-	-
지수 산출 인용	다른 통계와 함께 지수산출	8	5	1	-	-	-	1	-	1	-
	단독사용 지수 산출	10	7	2	-	-	-	1	-	-	-

그리고 선행 연구 재인용, 단순 참고 인용, 문장 내에서 수치만 인용, 다른 통계와의 비교를 문장 내에서 인용은 138건, 통계치를 원자료로 인용하거나 가공하여 인용하거나, 또는 시계열로 제시 인용하는 등의 표나 그래프로 제시한 형태는 1,459건으로 85.4%에 달해 대부분의 인용이 표나 그래프를 통한 인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계열로 자료를 제시한 경우가 948건으로 전체 인용의 55.5%를 차지하여, 경제통계 인용에 있어서 시계열 유지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경우에는 주로 가공 없이 인용하거나 가공 없이 시계열 자료를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442건),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주로 가공 없이 시계열로 인용하거나(167건), 가공하여 시계열로 인용하는 것으로(271건) 나타났다. 이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주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중심으로 인용 되어 설명하려는 산업, 또는 지역 산업의 기초적인 규모의 추정치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며,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경우, 각종 수익성 지수(예, 1인당 부가가치, 매출액 경상이익 등), 생산성(노동생산성, 총요소 생산성, 노동장비율), 고용 지

표(취업 계수, 고용 탄력성 등) 등의 2차 가공을 통해 산출한 지표들을 시계열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 조사 항목별 인용 및 활용 유형

각 보고서들이 통계청의 통계조사들을 인용함에 있어, 어떤 항목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장 많이 인용된 항목은 고용 사항(955건), 사업체수(730건), 매출 및 수입 사항(561건)이었다. 다시 말해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지역의 산업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항목 중심으로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인용통계별 인용유형

구분		전체 인용수	사업체수	고용 사항	매출, 수 입사항	비용 사항	자산 사항	기타
전체		1,709	730	955	561	30	48	229
문장인용	선행연구 재인용	13	-	4	3	-	-	6
	단순참고 인용	115	26	49	26	9	9	49
	수치 인용	93	47	33	8	3	1	20
	다른 통계와 비교인용	11	2	6	3	1	-	2
표, 그래프 인용	가공없이 인용	341	225	243	124	4	5	18
	가공없이 시계열 인용	543	244	323	171	2	15	26
	가공하여 인용	170	87	116	51	3	-	27
	가공하여 시계열 인용	405	93	172	170	6	18	77
지수산출 인용	다른 통계와 함께 지수산출	8	4	3	3	2	-	
	단독사용 지수 산출	10	2	6	2	-	-	4

사업체수는 조사 항목이 아니라 집계 항목이지만 특정 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가장 주요한 추정치 중의 하나로 주로 가공 없이 인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공하여 인용되는 경우는 사업체당 매출액이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또는 사업체당 부가가치 등으로 재계산되는 경우였다.

고용 사항은 주로 종사자수가 인용이 되었고, 주로 노동이나 여성, 복지 관련 보고서들에서 종사상 지위가 중요한 분류 변수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고용 사항 중, 종사자수와 취업자 수는

취업 계수나 고용 탄력성, 지니계수 등과 같은 고용 관련 지수, 그리고 노동생산성이나 총요소 생산성, 기타 수익성 지수 산출에 사용되는 등 그 인용 및 활용의 유형이 가장 폭넓은 조사 항목으로 나타났다.

매출 및 수입 항목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경우, 총매출액이라는 조사 항목이 있음에도 보고서에서는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으며,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등 나머지 통계조사에서는 매출 및 수입, 그리고 비용 부분이 매우 상세하게 조사되고 있으나, 실제 인용되는 항목은 주로 매출액 및 수입 항목이며, 생산원가 및 판매원가 등은 총요소 생산성 산출을 위한 투입 변수로만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청 산업구조 관련 통계조사의 매출액이나 부가가치가 인용되는 경우에도 경상가격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보다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로 조정된 실질 가액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따라서 보고서들이 어떤 산업의 규모나 현황을 소개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인용하고, 매출액과 부가가치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자료를 인용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자수를(노동 관련 보고서) 인용하고, 매출액 및 부가가치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하거나 통계청의 개별 산업 관련 통계조사를 인용하는 방식도 있다. 다음으로는 산업총조사와 서비스업총조사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매출액과 부가가치를 인용하는 방식이다.

기타 기업의 경영 실태와 관련된 보고서는 통계청의 산업구조 관련 통계조사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하지만,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비용 등을 실질 가액으로 재산정한 한국은행의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전문가 의견

본 연구는 통계청의 산업구조 관련 통계 10종을 인용한 보고서들의 인용 현황 및 인용 유형을 분석하고, 이 보고서들을 작성한 연구자들 중, 보고서에서 어떤 형태로든 통계청의 산업구조 관련 통계를 인용할 때 겪은 문제점 및 어려움을 적시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면접을 시도했다.

1)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팀에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사용할 경우, 시계열 및 절대값을 참조하여 사업체 구분, 종사자수, 연간 총매출액 등을 GDP 편제에 활용하고 있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주로 사용되는 것은 연간 조사라는 점과 1인 이상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 항목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즉,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종사자수, 소재지, 사업장 변동, 조직 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의 종류, 연간 총매출액 등이 단일 조사표로 조사되는데,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생산원가 및 영업 비용 등의 비용 부분을 포함하여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비용 부분의 항목은 광업제조업통계조사나 서비스업통계조사에서처럼 아주 세분화된 항목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그리고 제세 공과금 수준으로만 조사되어도, 전국 단위 1인 이상 사업체 전수조사라는 장점으로 인해 그 활용도 및 결과 자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2)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광업제조업통계의 경우, 그 활용도와 자료 가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모두 높게 평가했다. 특히 시계열을 추적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해외 자료들과 비교할 때도 손색이 없을 만큼 내용이 풍부하고 그 신뢰성 또한 높다는 평가이다.

광업제조업통계는 거의 모든 항목들이 단순 수치 인용에서, 원자료 인용, 가공 인용, 각종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지표들로 재가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항목들의 사용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통계라는 평가이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 및 산업총조사의 경우 업종별(중분류) 산업의 특성 및 공정에 대한 구분에 따라 출하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나 기관에서 산출하는 통계자료들을 분석하여 참고함으로써 개별 산업별 특성이 반영된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산업통계 부분과 품목 통계 부분을 비교 시 통계치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으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다품종 생산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기업들이 다양한 수익 창출 구조를 추구하며 일어나는 다변화 추세 때문인데, 이를 고려한 조사표 및 분석 프레임 상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다양한 산업에서 사업 간 융합과 종합 현

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현재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의 산업 분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조정되어야 하며, 통계청의 산업구조 통계는 산업의 거시적 추세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조사 항목에 종사자의 기술 수준, 또는 기술 경력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산업총조사의 경우 4인 미만 사업체의 표본조사가 추가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산업총조사 자체만으로는 5년 주기라는 간격으로 인해 시계열 자료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오히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조사 항목을 추가 보완할 경우 활용 가치가 더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국부통계를 연구하는 한 연구자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의 조사 항목 중에서도 특히 유형고정자산 항목에 대한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내용인즉, 연초 잔액, 연말 잔액, 연간 증가액, 연간 감소액, 연간 감가상각비 등으로 이루어진 유형고정자산 조사 항목 중에서도 특히 연간 감소액 부분에서 처분에 의한 것인지 손실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처분일 경우, 장부가액과 실처분액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3)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관련 통계조사 3종, 즉 서비스업총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서비스업통계조사의 경우, 이를 이용하는 전문가들은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는 서비스업총조사를 주로 사용하고 도소매업 관련 통계의 경우, 도소매업통계조사를 주로 사용하고 서비스업총조사를 보조 자료로 사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비스업 관련 연구자들이 연간 조사인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 5년 주기의 서비스업총조사를 더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서비스업통계조사를 활용할 경우 도소매업통계조사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조사 시기나, 조사 방법 등 전체적인 조사 프레임이 다르다면 분석상의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당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지니고 있는 경우, 이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업 실적 관련 정보의 경우, 업체 기본 정보와 같이 복수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해당 업종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 실적(매출액, 영업 비용 등)이 발생하는지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종사자 관련 정보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 수준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산업의 가치 사슬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산업 분류 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정보산업이나 통신 산업, 문화 산업 같은 경우,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류만으로는 한 업체의 산업 정보 또는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들의 경우, 이러한 가치 사슬상의 연계를 통한 융합적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산업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산업 분류 및 통계조사 프레임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산업 흐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유형의 산출물이 존재하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은 다양한 업종들이 존재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업이 생성되거나 소멸되고, 기존의 업종이 새로운 가치 사슬로 클러스터링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앞서 예를 든 융합 기술 산업이라든지, 지식 기반 산업, 그 밖에도 물류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 등과 같은 산업 가치 사슬상의 연계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들을 묶어 낼 2차 분류 체계 및 이를 반영한 조사표 보완과 개발, 분석 프레임이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4) 운수업통계조사와 건설업통계조사

운수업통계조사는 주로 교통 시설 관련 보고서와 물류 산업 관련 보고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행의 경우, 유형고정자산 측면의 운수 시설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면접에서 나타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항공 대리점, 해운 대리점은 KSIC에 의거한 기타 운수 관련 서비스의 하위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상에서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상 영업 비용 항목이 세분화되지 않아 외항 및 일반 화물 등의 업종에서 장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업 비용 항목을 세분화하여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하며, 둘째로는 육상운송의 경우, 차량 대수의 수송 실적 항목을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유형고정자산 중 연간 감소액 관련, 처분과 손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장부가액으로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을 처분 가액도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0종의 통계조사를 인용한 329개의 국내 경제 관련 정책 및 산업 현황 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어떤 통계치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몇몇 특정 통계조사들과 항목을 중심으로 인용 및 활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개의 통계조사 중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산업구분(사업내용 항목) 또는 지역(사업장소재지 항목) 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특정 산업 또는 특정지역의 산업 규모를 추정하는 기초자료로 가장 많이 인용되거 있다. 기타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등에서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이외에도 실질적 산업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매출액 또는 출하액, 부가가치 등이 주로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체 대상 통계조사가 주로 전반적인 산업의 구조 및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통계청에서 현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산업구조통계조사는 그 실시 시기와 주기, 표본추출 방법들이 달라서 동일 시점에서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조사 마다,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기준이 다르고, 산업 영역 별 조사 마다 조사항목이 달라 각 조사 자료들에 대한 별도의 가공 및 추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동일 시점을 전제한 비교나 동일 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 간 직접 비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산업구조통계 간의 정합성 또는 무모순성을 낮추는 원인이 되어 산업구조통계 조사 결과 활용 시 개별통계 세부 지표들의 정태적 특성이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특정 연도의 경제 전반, 즉 산업 전반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각 산업별 통계조사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통합된 조사 프레임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통합조사에 비해 특정 조건의 사업체를 누락하거나 동일한 사업체를 중복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한 사업체의 경우,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도 포함되고, 도소매업통계조사에도 포함되어 중복 조사될 가능성이 있다.

1) 산업 통계의 구조적 효율화

산업통계 자료 인용과 활용의 특정 조사 및 조사 항목으로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면서 산업구조 통계의 구조적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체의 통계조사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조사들 간의 구조적 연계를 더욱 효율화하여, 전수조사인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조사 항목을 보완하고, 전수조사의 정보 가치와 효용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다른 통계조사자료와 연동된 통합 DB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사별 중복된 조사항목은 줄이고, 필요한 추가 조사 항목만을 조사함으로써, 응답자의 조사 피로도를 줄여 주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사 간 자료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통계청 경제통계의 선진화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비스업총조사가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 인용과 활용이 더 많은 이유와 관련이 있다. 즉, 조사 범위의 포괄성(도매업과 소매업의 포함)과 전수조사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매출 또는 수입, 판매비와 영업 비용 같은 서비스업통계조사의 필수 인용 항목을 추가해서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서비스업통계조사와 도소매업통계조사는 표본조사의 특성을 이용해서 보다 구체적인 산업 특성에 대한 조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이 재편되는 현대 서비스산업의 추세에 따라 산업 가치 사슬상의 클러스터 산업의 조사를 위한 조사들 간의 구조적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들의 통계적 수요를 고려하여 통계조사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보고서들 중, 광역 지자체 산하 연구원들이 지자체의 산업구조를 분석한 보고서들은 주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산업 관련 보고서들의 형태와 발전 방안을 도출해내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국 단위 조사의 공통 조사 항목 이외에, 지방 통계청에서 각 지자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특정 조사 항목을 개발해 함께 지역별로 조사하고 지역별로 발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여주나 이천 같은 지역의 경우, 중요 산업인 도자기 공예 산업에 대한 조사 항목을 개발하여,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추가하여 진행하거나, 전주의 한지 및 전통 공예 산업,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관광산업 등, 각 지역의 중요 산업에 특화된 조사 항목을 개발하여 추가 조사할 경우, 통계청 본청 수준의 보고서 이외에, 지방 통계청 수준의 지역 산업 보고서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통계청의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2)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강화

산업구조 관련 통계조사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통계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 항목의 확충(매출액 구성 요소, 비용 부문 직접비와 간접비, 유형고정자산의 연초 잔액과 연말 잔액 등)을 통해, 인용 빈도뿐만 아니라, 인용 항목상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사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조사 후 발간하는 보고서 이외에,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 발표 후, 이와 결합된 여러 형식의 보고 유형을 개발하여 추가 보고서 발간이나 KOSIS에 등재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여 통계청 통계의 활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총조사와 산업별 연간 조사 간의 상보성 보완

5년마다 실시하는 산업총조사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에 비해 그 인용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서비스업총조사는 도소매업통계조사나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 그 인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유형의 총조사와 개별 산업통계조사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완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 가능하다. 첫째는 총조사가 지니는 의미를 고려하는 것이다. 5년마다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4인 미만 업체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와 산업총조사의 측면에서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강화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다. 즉, 4인 미만의 표본조사가 총조사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4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표가 5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표에 비해 약식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몇몇 조사 항목의 강화를 통해, 4인 미만 사업체로 인한 총조사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비스업총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둘째는 서비스업총조사의 인용 빈도를 고려한 측면이다.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이 제조업체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조사인 도소매업통계조사나 서비스업통계조사보다 서비스업총조사가 더 인용 빈도가 높다는 점이 일견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변동성들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인 조사 자료에 의존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서비스업총조사를 주로 인용한 보고서는 관심 분야 산업에 대한 관련 기관의 다른 통계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서비스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보수적인 분류 체계와 조사 항목에 기초한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되, 시의적 정보들이나 변동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에 한해 관련 기관들의 산업 실태 조사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제언은 무엇보다도 통계청에서 관련 기관의 산업 실태 조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수시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시로 변동하는 서비스산업의 변화와 통계에 대한 수요를 읽을 수 있으며, 통계청에서 관련 산업 실태 조사의 조사 프레임, 산업구조 분석 프레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통계의 근간은 아무래도 통계청이기 때문이다.

4) 행정 통계 데이터 활용 방안 강구

통계 데이터 구축의 효율화 및 활용 증대를 위해 행정 통계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순수 통계를 위한 정보 사용을 목적으로 행정 정보와 통계 정보와의 대규모 결합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통계청 조사 자료와 한국은행 자료, 그리고 국세청 자료 간의 차이는 국가 경제의 구조 및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이를 통계에 기초한 경제정책의 신뢰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행정 통계와 통계청의 통계를 연계시킬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개선을 통해 국가 통계의 효율화 및 응답자들의 애로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국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5) 조사표 및 조사 표준화 방안 강구

본 연구 결과는 산업구조 통계의 통합 시스템으로써의 표준 조사 설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조사 항목이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는 이 조사가 1인 이상의 전 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라는 점과 연간조사를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산업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는 전 산업 대상, 1인 이상 사업체 대상, 연간 조사라는 세 가지 측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국가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 산업의 포괄성, 그리고 연간 시계열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가 10개의 산업구조 관련 토계조사들의 인용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국가 산

업구조의 근간이 되는 산업통계는 광업제조업통계, 도소매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통계, 건설업통계와 운수업통계이다. 연구자들에게는 광업 및 제조업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범위의 포괄성보다는 시계열 분석 가능성이 우선이었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연간 조사가 지나는 시계열보다는 조사 대상 범위의 포괄성이 우선이었다. 그런 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전 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성과 시계열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나노산업 등과 이를 포괄하는 융합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및 이를 포함하는 지식 기반 산업 등과 같이, 새로운 산업 경제의 매크로 트렌드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산업 분류 체계 이외에 제2의 메타 분류 체계를 관련 산업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산업 가치 사슬 중심의 산업 클러스터로의 재편성 추세를 빠르게 파악하고 국내 관련 산업과 경제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고 미래의 추세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메타 분류 체계의 개발과 분석 프레임 개발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경선, 강민호, 강연수 외. 『한국 과학기술행정 40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07.
- 강상인, 김재준. 『축차 동태형 환경경제 통합모형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 강영주. 『대역 R&D 특구와 충남연계발전 전략』, 충남발전연구원, 2005.
- 강영훈, 김문연, 문상식 외. 『울산지역 혁신주체간 효율적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2007.
- 강일영, 문병윤, 박재현 외. 『철강공구 산업경쟁력 조사』, 기획재정부, 2006.
- 강희복, 신무성, 이광훈 외. 『2006 시장구조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2006.
- 경제연구·정책분석그룹. 『한국경제 희망 찾기 2부(희망찾기는 어디인가)』, LG경제연구원, 2005.
- 고상원, 전병유, 이경남 외. 『IT와 고용창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 고용정보원. 『2007년 지역별 인력 및 훈련 수요 조사(1)』, 노동부, 2007.
- 곽태열. 『경남의 나노 세라믹 산업의 잠재력 분석과 육성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07.
- 곽태열. 『경남의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실태분석 및 육성방안』, 경남발전연구원, 2006.
- 권오현. 『건설상품별 중장기 시장전망 III(토목투자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 권오현. 『우수 중소 건설업체 성공 사례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 권철우, 전봉걸. 『합병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이윤 및 매출 변화 분석』, 한국은행, 2006.
-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 종합연구(시장경제 창달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로드맵, 4-4권)』, 한국경제연구원, 2007.
- 금성근. 『한국 동남권과 일본 후쿠오카현간의 산학협력 방안』, 부산발전연구원, 2005.
- 김경아. 『지역혁신체제에서 기술혁신의 제조업 유형별 특성과 협력관계 분석』, 일반연구논문, 2006.
- 김경일, 이용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과 출판산업의 상관성 연구(경영학적 사업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일반연구논문, 2007.
- 김경환. 『수도권 집중의 사회적 비용 편익추정의 검증』, 경기개발연구원, 2005.
- 김경환, 임상준.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규제논리의 비판적 고찰과 정책대안의 모색)』, 한국경제연구원, 2005.
- 김경희, 이선영.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지역업체 의견수렴 및 영향분석』, 부산발전연구원, 2007.
- 김경희, 이선영, 김성주 외. 『첨단제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첨단의료기기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발전연구원, 2007.

참고문헌

- 김광임, 최정석, 임현곤.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수립 연구』. 환경부, 2007.
 김광희. 『2016 중소기업 발전 비전과 전략(지속가능경제의 견인차)』. 중소기업연구원, 2006.
 김광희, 정남기, 홍운선 외. 『중소기업정책의 변천과 혁신』. 중소기업청, 2006.
 김군수, 김경희, 김상봉 외. 『파주 LCD 클러스터 조성의 경제적 효과』. 경기개발연구원, 2005.
 김군수, 김은경, 김이석 외. 『한미 FTA가 경기도 산업에 미치는 효과』. 경기개발연구원, 2007.

지면관계상 「참고 문헌」의 일부만 게재하였음



가구통계의 실태 및 활용방안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통계법 제2조에 따르면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資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고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통계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정부의 합리적 정책 수립을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정보의 불완전성 및 비대칭성이 크게 문제시되는 노동시장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제공은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더군다나 노동시장의 단기적 충격 및 중장기적 구조변화를 정확·신속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노동통계의 생산이야말로 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상대적으로 큰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통계의 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생산된 통계의 활발한 활용이다. 생산된 통계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유익하며 통계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가 생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계들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

점들을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내용과 조사체계 뿐만 아니라 통계 생산의 기본 방향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때 활용도 높은 통계가 생산될 수 있다. 이미 생산된 통계가 통계 수요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수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들도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가구통계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생산되는 대표적인 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 및 한국노동패널조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들 조사들을 통해 생산되는 통계들은 노동시장, 특히 노동공급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II. 가구통계의 현황

어떤 조사의 주된 조사항목, 즉 대표변량이 무엇인가에 따라 조사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는데, 그러한 변수가 수량변수인가 가격변수인가에 따라 '수량조사'와 '가격조사'로 분류할 수 있다. 각종 조사통계에서 대표변량이 무엇인가에 따라 표본추출방법 및 조사결과의 보정여부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조사항목도 대표변량과 관련성이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이 유익할 수 있다. 본 연구가 다루기로 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는 각각 가구수량조사와 가구가격조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조사이다.

1. 가구수량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공급의 수량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조사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과거 「고용구조조사」가 3~5년 간격으로 1997년까지 실시된 적이 있었고 2006년부터 「인력구조조사」라는 대규모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¹⁾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이며 196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1) 「인력구조조사」는 평소상태접근법을 사용하여 노동력 상태를 조사하는데, 이는 현상태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다르다.

가.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 실업, 노동력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노동 공급, 고용구조, 노동시간 및 인력의 활용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조사목적으로 한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대상기간(조사 대상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을 기준으로 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현역 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수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08년 현재 표본수는 전국의 약 33,000가구이며, 2005년부터 연동표본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 통계들이 생산되고 있다. 예컨대,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등 경제활동상태별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 각종 지표들이 지역, 성, 연령계층, 교육수준별 등으로 산출되고 있다.

나. 조사연혁 및 조사항목

이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노동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량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구조사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더불어 1962년 8월과 12월에 시험적으로 실시되었지만, 공식적인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의 발표는 1963년 3월 이후였다. 주요 조사연혁 및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주기는 1963년 3월부터 1982년 6월까지의 분기별(3, 6, 9, 12월)이었지만, 1982년 7월 이후에는 현재와 같이 월별로 변경되었다. 조사대상도 1987년 1월 이후에는 그 이전의 14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이 「인구주택총조사」(10% 표본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되고 2005년부터 연동표본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이전의 오랜 기간 동안에는 매5년 간격으로 표본이 개편되었다. 특히 표본수와 관련하여 그 동안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경제규모를 통제한다면 표본추출비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오히려 높다²⁾.

둘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항목은 1980년 1월 이후 다목적 분석을 위하여 대폭 확충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3년 이후에도 이용자 의견수렴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조

2) 이에 대해서는 통계청(1994) 참조.

사항목들을 개선해 오고 있으며, 2005년 7월부터 공식 실업률 작성기준을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전환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발생 이후 1998년 9월, 1998년 12월, 1999년 6월, 2000년 8월, 2001년 8월, 2002년 3월, 6월 및 8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5월 및 8월, 2007년부터 3월, 6월 및 8월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부가조사들을 통해 실업, 청년, 근로형태 등과 관련된 실태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한 다양한 조사항목이 추가되었다.

2. 가구가격조사 : 가계조사

노동공급 주체인 가구와 그 구성원들의 소득 및 지출 등 가격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조사로 「가계조사」가 가장 대표적이다. 2002년까지 「도시가계조사」라는 명칭으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오다가 2003년부터 조사대상을 읍면지역의 2인 이상 비농가까지 확대하여 전국 가계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동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단독가구가 2006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매월 실시되고 있는 「가계조사」의 특별조사에 해당하며 1991년 이후 매5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다.

가.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가계조사」는 “도시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수준 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①국민생활수준 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 ②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필요한 가중치자료, ③각종 경제 및 사회정책입안 기초자료, ④국민소득추계 기초자료 등을 제공함”을 조사목적으로 한다. 농(림)가, 어가, 가계수지 파악이 곤란한 가구, 외국인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08년 현재 표본수는 약 9,000가구로서, 표본은 매5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10% 표본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다목적 표본으로 추출되고 있다.

이러한 「가계조사」를 통하여 주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생활수준 실태와 그 변동사항이 가구원수·입주형태, 소득 및 소비지출계층, 가구주의 연령계층·교육수준·산업 및 직업별로 산출되고 있으며, 가계수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통계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계조사」는 2002년까지 도시지역의 가구원수 2인 이상인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매월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어가, 군지역의 비농가, 단독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농가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어가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어가경제조사」를 통하여 매년 수입 및 지출을 조사하고 있으며,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신근로자생계비조사」를 통하여 매년 수입 및 지출을 부분적으로 조사하여 왔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조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조사가 「가구소비실태조사」이다. 이 조사는 “전국의 모든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연간소득과 소비지출, 저축·부채, 가구내구재 보유현황 등 가계자산에 관한 심층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과 소득·소비구조를 파악함”을 조사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전국 모든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시도별 가구의 소득·소비수준, 가구유형별 소비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고, 가구내구재 및 저축·부채 등의 보유자산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조사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표본조사구내의 정상적인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한 모든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단,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①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점용주택내의 가구, ②영업상 사용인이 2인 이상 동거하는 가구, ③외국인 가구, ④비혈연 집단 가구 그리고 1인 가구의 경우 ①15세 미만인 자, ②사회시설에 있는 자, ③입원환자, ④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점용주택내의 가구, ⑤외국인 가구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같이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도시가계조사」보다 조사대상이 매우 포괄적이다. 예컨대, 2000년 제3차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경우 표본은 약 27,000가구로서 당시 「도시가계조사」에 비하여 약 5배 정도 많았다.

나. 조사연혁 및 조사항목

「가계조사」는 특히 임금근로자가구의 수입 및 지출 등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구조사로서 그 활용성이 매우 높다. 「가계조사」는 1963년 이전에도 한국은행 등에서 실시되었지만, 공식적인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의 공표는 1963년 1월 이후이다. 조사연혁 및 조사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가계조사」의 조사방법을 살펴보면 1974년까지는 식료품비에 한정하여 가계부 기장방식(즉, 매일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금액과 품목명을 직접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75년부터는 모든 비목에 대해 가계부 기장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가계조사」의 조사항목은 가구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가구주·배우자·기타 가구원에 관한 사항(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등), 가구구성에 관한 사항(가

구원수,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유형, 세대구분 등), 주거에 관한 사항(점유형태, 거처구분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조사」에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건의에 따른 품목별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소비지출 비목은 1963~1981년에는 5대 비목(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1982~1994년에는 9대 비목(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1995년 이후에는 다시 '교육·교양오락'을 '교육비'와 '교양오락비'로 세분하여 전체 10대 비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구주가 '임금근로자'가 아닌 '비임금근로자'인 가구 즉 자영업자 및 무직자가구에 대해서는 수입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발표하는 변화도 있었다.

셋째, 「가계조사」는 한국은행에서 현재의 통계청으로 조사기관이 이관된 이후 1969년의 다목적 표본설계계획에 따라 2003년까지 8차례에 걸쳐 표본이 개편되었다. 표본의 개편주기는 대체로 매5년인데, 이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마찬가지로 매5년 간격으로 실시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10% 표본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이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목적 표본설계에 따라 「가계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분표본(subsample)이라는 특성도 지닌다. 실제로 「가계조사」 조사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4개 조사구역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불응가구가 많으면 세 번째와 네 번째 구역으로 확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한편, 「가구소비실태조사」는 「가계조사」의 특별조사에 해당되는데, 1991년, 1996년, 2000년 등 대체로 매5년 간격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이 「가계조사」에 비하여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조사항목에서도 부동산에 관한 사항, 저축·부채에 관한 사항, 가구내구재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되어 있다.

3. 패널조사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패널조사는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걸쳐 추적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패널조사를 통해 생산된 자료는 횡단면 자료나 시계열 자료만으로는 어려운 여러 분석들을 가능케 한다. 이에 따라 패널자료들을 사용한 연구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패널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많은 패널조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다른 형태의 패널조사들이 계획되고 있다. 이들 패널조사들에서 조사 개체는 가구, 개인, 학교, 사업체 등으로 다양하며 특히 가구를 개체로 하는 가구패널조사가 많다. 이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패널조사가 한국노동패널조사

(KLIPS)이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KLIPS는 기존의 단편적인 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를 패널로 얻기 위해 실시하는 종단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이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하며 1998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8년에 제11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5,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표본 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조사의 사활은 무엇보다도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도 얼마나 많이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KLIPS는 10여년간 조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유효원표본 가구의 76-77%를 조사하여 높은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여오고 있다. 이는 PSID, GSOEP, BHPS 등을 비롯한 외국의 우수한 패널조사와 비교하더라도 뒤지지 않는 성과이다.

KLIPS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조사는 매년 반복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며, 부가조사는 패널조사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기본조사에 덧붙여 실시하는 추가적인 조사이다. 기본조사는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구성과 가구 소득 및 소비, 주거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가구를 구성하는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실시하며 취업자 개인(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과 미취업자 및 신규 진입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내용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력 상태, 소득, 노동이동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풍부하다.

부가조사의 주제도 다양하다. 제4차 조사는 건강과 은퇴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고 제6차 조사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을 반영하여 중·고령자에 대한 조사를 부가조사로 실시하였다. 제7차 조사는 ‘근로시간과 여가’를 부가로 조사하였고 제8차 조사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제9차는 청년층에 대해, 제10차는 고용형태에 대해, 그리고 제11차 조사는 교육에 대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노동연구원은 생산된 KLIPS 자료의 학문적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이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최근 들어 국제비교가능패널(CNEF)의 구축을 통한 KLIPS의 국제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항목무응답에 대한 대체(imputation), 조세계산(tax imputation) 등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Ⅲ. 문제점 및 활용방안

1. 가구통계에 이미 많은 개선이 있었음

기존연구(정진호·남재량, 2002)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가구통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많은 사항들이 이미 개선되었다. 참고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기존연구가 제시하였던 가구 통계조사의 개편방향과 거의 일치하는 형태로 가계조사가 개편되었다. 다만 농가와 어가에 대한 조사는 아직 가계조사의 틀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를 하나의 가계조사에서 함께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1〉 가구 조사통계의 개편방향

현재	수량조사 (개인조사)	가격조사	
		개인조사	가구조사
기본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도시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특별 및 부가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향후	수량조사 (개인조사)	가격조사	
		개인조사	가구조사
기본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전국가계조사’
특별 및 부가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전국가계특별조사’

자료: 정진호·남재량(2002)

2. 선제적 가구통계 생산³⁾

우리 사회에서 최근 10여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중요한 논의의 주제들은 고용과 관련이 매우 깊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당시의 화두는 노동력의 부족

3) 이 부분은 남재량(2007)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과 유희인력의 활용이었다. 당시 실업률이 2%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마찰적 실업을 제외한다면 노동시장은 사실상 완전고용을 달성한 상태였다. 실제로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였으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실제 필요한 인력보다 좀더 많은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일종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당시 연구자들은 과연 유희인력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하면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족한 인력을 국내의 여성인력으로 보충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력을 도입하여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핵심주제였다.

외환위기가 발생하자(1997년 10월) 고용상황은 돌변하여 실업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갔다. 실업률을 비롯한 통계들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생산되는데, 이 조사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경제지표로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사용하여 실업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분석이 가능하였고 여러 대책들이 비교적 신속히 마련되었다. 물론 또 다른 조사들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들을 확보하기도 하였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업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에 대한 통계는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년실업의 본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차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나아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이는 심층적인 통계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실업률이 낮아지자 고용에 대한 논의는 또 다시 급변하였다. 이제는 고용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로 되기 시작했으며 비정규 근로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비정규 근로란 근로자의 근로형태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계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근로형태 대신 종사상 지위를 사용하여 비정규 근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후 고용형태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내려지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를 통하여 비정규 근로에 대해 통계가 비로소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의 통계생산 시차를 경험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한국의 비정규 근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비정규 근로에 대한 규모와 실태만 파악하였을 뿐, 비정규 근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케 할 체계적인 조사가 없다. 비정규직에 있다가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나, 우리는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외국의 비정규 근로와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직도 급히 마련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비정규 근로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들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리다보니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얻은 경험적인 사실(fact)이 아니라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설들이 논의를 주도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비정규 근로의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 등은 앞으로 적어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언제 어떠한 문제가 새로 생겨나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난 10여년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새로운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어 왔으며 부랴부랴 설문문을 만들어 단편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시켰다. 이제는 이러한 방식의 대응을 지양하여야 하며,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때 그 때 새로운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비용도 중복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비효율적인 접근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고용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통계(가구수량조사)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양질의 자료를 사용하여 풍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등장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분석이 미리 가능하도록 고용통계 생산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 고용통계의 축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통계의 한 축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다. 이 조사의 중요한 목적은 대표성 있는 고용통계를 신속하게 생산하는 것인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이 조사는 고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한두 쪽의 설문조사로 알아 낼 수 있는 정보는 심층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고용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만 제공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조사를 보완할 수 있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는 한편, 고용통계의 나머지 한 축은 KLIPS를 보강하여 담당하게 하면 된다. 고용은 본질적으로 동태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고용에 대해서는 패널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은 고용에 대한 패널조사를 예외 없이 실시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도 이러한 패널조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노동패널 조사가 바로 그러한 조사이다. 이 패널조사는 방대한 양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해 조사를 실시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얻을 수 없는 풍부한 고용정보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패널조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KLIPS가 고용통계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여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현재의 노동패널자료로는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은 사실이다. 예컨대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옮겨간 근로자들을 그들의 자세한 인적특성별로 분석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가 워낙 적거나 해당자가 없어 의미 있는 분석이 불가능해진다. 이 문제만 극복될 수 있다면 우리는 고용에 대한 방대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고용에 대한 풍부하고 심층적일 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 조사는 방대한 설문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용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새롭게 등장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고용통계가 이와 같은 두 축을 바탕으로 할 경우 많은 장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고용 관련 패널조사의 표본을 크게 늘리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기본적으로 표본을 2만 가구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표본을 계속 늘리고 있다. 특히 영국은 표본을 4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최소한 2만 가구 정도의 표본을 확보하여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들이 가능해지는 경우들이 많다. 더 늦기 전에 적어도 노동패널조사의 표본을 2만 가구까지 확충하고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이 조사가 고용통계의 나머지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기존의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조사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소득을 조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근로형태 부가조사에서 지난 3개월 평균 임금을 묻고 있을 뿐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가구의 노동공급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가조사 외에 CPS(미국)의 소득부가조사(March Income Supplement)를 비롯한 몇 가지 부가조사를 1년에 한번 정도 만이라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다목적 표본의 활용

앞에서 보았듯이 다목적 표본설계에 따라 「가계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분표본(subsample)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계조사가 실시되는 가구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도 실시되므로, 가계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함께 제공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풍부한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합된 자료가 제공될 경우 가구의 노동공급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부터 유용한 정책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4. 가공패널자료의 구축 및 제공

한국에서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경제

활동인구조사를 패널로 연결(이하 경합패널)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임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이 10년 정도나 앞서 있다”라는 일본 학자의 지적은 경합패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경합패널이 가능하도록 원자료가 제공되었으나 이후 한 동안 그러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 매우 제한적인 용도로 제한된 공간에서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경합패널을 분석에 사용하고 있었던 여러 연구자들은 자료 이용이 불가능하였던 기간 동안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경합패널 제공에 몇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 대신 자료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던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많다. 다행히 통계청은 최근 제한적이긴 하나 경합패널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 이용 과정에 불편함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가계조사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분표본이므로 두 조사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패널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여 외환위기 기간 동안 실업률이 그렇게 크게 상승한 것은 실업률이 외환충격에 과민반응을 한 결과라는 연구를 비롯하여 조세의 노동공급 효과에 대한 연구 등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결합패널자료가 제공된다면 그동안 불가능하였던 가구의 노동공급과 관련된 연구들이 가능할 것이고 풍부한 정책 시사점들이 도출될 것이다.

5.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개선안

경합 부가조사의 조사내용에도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추가적으로 몇 가지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가. 단기적 측면

조사 단위의 불일치 문제로 인해 시간당 임금 산정에 오차가 발생하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조사를 포함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기본적으로 1주일을 조사 단위로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도 마찬가지로이다. 근로시간을 묻고 있는 (문13)은 “지난주에, 주업과 부업으로 총 몇 시간 일하였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조사에서 임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조사하고 있다. 즉 (문57)은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얼마였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조사 단위의 이러한 불일치로 인해 시간당 임금 계산에 있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간당 임금은 임금격차를 포함한 임금 관련 분석에서 반

드시 필요한 변수이며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시간당 임금을 분석하고 있는 모든 연구들은 임금과 근로시간에 있어 조사 단위의 불일치라는 문제를 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조사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조사할 때나 부가조사에서 임금을 조사할 때에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일한 평균 근로시간을 추가로 질문하는 방향으로 조사표를 수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월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또는 “최근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평균 며칠 일하였습니까?”라는 질문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의 주요 근로자 집단별 모집단이 파악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부가조사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를 (문49)에서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라고 묻고 “예”라고 대답하면 특수고용이고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특수고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 질문의 하단에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라는 예시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 전체의 규모는 파악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형태별로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각 집단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두고 예시를 없애는 대신 “예”라고 응답하는 경우 구체적인 특수고용 형태를 선택하도록 한다. 즉 (문49)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권한다.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라고 묻고 “예”라고 대답하면 (1) 보험설계사, (2) 학습지교사, (3) 퀵서비스 배달기사, (4) 골프장 캐디 (5) 기타()라는 응답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은 ‘근로계약기간 분류상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본조사 (문35)는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였습니까?”라고 묻고 “정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고용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라고 다시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응답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즉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1년 미만, 3. 1년, 4. 1년 초과~2년 이하, 5. 2년 초과”가 그것이다. 그런데 부가조사에서도 유사한 조사를 하고 있으나 응답항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즉 부가조사 (문44)는 “지난주의 직장(일)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라고 묻고 이에 대한 응답항목으로 “1. 1년 이하(□□개월), 2. 1년 초과~2년 이하, 3. 2년 초과”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본조사의 응답항목을 부가조사의 응답항목으로 일치시키던가 아니면 “1. 1년 미만(□□개월), 2. 1년, 3. 1년 초과~2년 이하, 4. 2년 초과”로 수정한 뒤 이를

본조사와 부가조사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1년” 계약한 경우를 별도의 응답항목으로 유지하는 것은 가급적 과거 조사의 응답항목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응답 항목을 일치시킴으로써, 시계열의 연결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조사 시기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 8월은 고용형태에 있어 1년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시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8월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시계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8월에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8월이 근로형태를 조사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보기 어렵다. 2007년부터 3월에도 동일한 부가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일정 부분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나. 중장기적 측면

(1)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통계 생산의 필요성

현재의 부가조사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를 구분하고 분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근로형태에 대한 부가조사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부가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종사상의 지위를 사용하여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형태 구분 기준을 세워 부가조사로 실시한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의 초창기에는 비정규직을 정의에 입각하여 분류하고 규모를 파악하는 등의 문제가 중요하였으며, 부가조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 통계가 근로형태의 분류 및 그 규모 파악에 머물고 조사내용을 더 이상 심화시키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새로운 논의나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통계가 거의 생산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가조사 내용의 추가나 변경은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06년부터 추가된 비정규직의 교육·훈련에 대한 조사항목인데, 단 한 항목이 추가로 조사된 것에 불과함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 조사항목의 추가는 이미 비정규직의 교육·훈련에 대한 논의가 상당정도 진전되었고 부가조사는 이를 사후적으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부가조사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고 이들 결과 가운데 일부를 실제로 조사표에 반영함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할 통계를 선제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구체적인 근로형태별 핵심 사항 파악

현재 부가조사의 한계 가운데 하나는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다양한 근로형태를 구분하고 그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 치중하다보니, 구체적인 근로형태별 핵심 사항들을 조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간제 근로, 시간제 근로, 파견 근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질문내용이 달라져야 하고 질문의 내용들도 심층적이어야 한다. 만약 각 고용형태별 핵심 질문내용이 개발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부가조사에 반영된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크게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구체적인 고용형태별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들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형태별 핵심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여 조사표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3) 임금 근로와 비임금 근로의 경계에 대한 조사

임금 근로와 비임금 근로의 구분이 모호한 근로형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근로형태에 대한 부가조사는 임금 근로자만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8월 부가조사부터는 비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도 부가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미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로 구분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달리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 근로와 비임금 근로를 구분하기 어려운 새로운 근로형태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통해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생산되고 있지 못하다.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모두가 답할 수 있도록 설문구조를 일부 개선하고 근로관계의 종속성을 비롯한 별도의 설문을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부가조사에서 소득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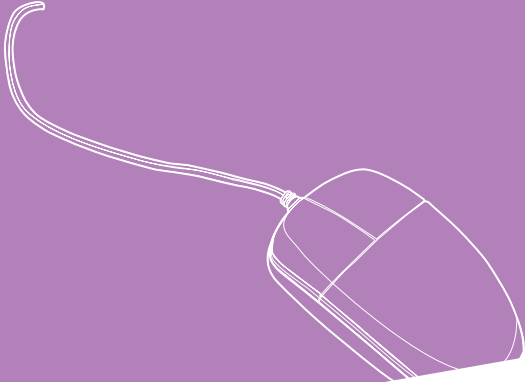
참고문헌

- 김경미 · 이익규 · 정미옥, "마이크로데이터 제공현황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통계연구, 제13권 1호, 2008
- 나성린 · 남재량 · 문춘걸,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공공경제■■, 제7권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2. 5.
- 남재량, "고용통계의 발전방향과 노동패널의 역할," 노동리뷰, 2007.
- 우리나라 失業率 趨勢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7. 8
- 남재량 · 류관, "장기패널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실업기간 측정과 새로운 패널자료의 구축," ■■경제논집■■, 제39권 제2호, 서울대학교, 2000. 12.
- 남재량 · 이창용, "외환위기와 실업을 변화에 대한 연구," 200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 2.
- 이지연, "노동력조사결과와 패널자료화 해외사례연구: 패널가중치와 응답오차의 문제," 통계연구, 제12권 1호, 2007.
- 이희길 · 이익규 · 박소현 · 김서영 · 권순필 · 심규호, ■■통계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2008-04, 통계개발원
- 정진호 · 남재량, ■■노동통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2.



일본 통계제도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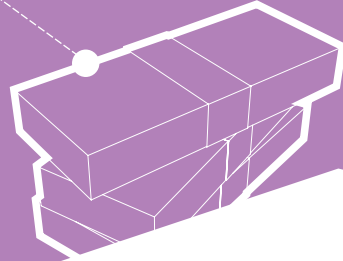
UN&OECD 통계활동



S y s t e m

외국의
통계제도
소개

일본통계제도의 개관



1. 일본통계조직 변천

가. 근대통계기구의 태동에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 체제, 행정시스템 등에 따라 집중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기도 하고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기도 하고 있다.

일본은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며,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근대적인 통계의 태동은 1872년(明治 4년) 태정관정원에 『정표과』가 설치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후 수 차례의 변천을 거친 후, 1885년(明治 18년) 내각제도의 발족으로 내각에 통계국이 설치됨에 따라 일본의 통계제도가 확립되었다.

통계제도는 분산형으로 내각통계국외에 각성도 통계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내각통계국이 중앙통계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내각통계국의 소관 사무로는 ① 행정각부의 통계에 관한 사항 ② 행정각부에 전속하지 않는

통계에 관한 사항 ③ 통계에 관한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④ 내외 통계표의 교환에 관한 사항 ⑤ 각 관청 통계주임자의 소집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그 후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내각통계국이 작은 조직이지만 일본의 중앙통계국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각성의 작성통계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이 있었고, 또한 국가 기본통계에 대한 조사·편집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통계제도의 개혁에 따라 통계국 소관사무가 크게 변화하였다. 즉 각성의 통계의 통일에 관한 사항, 국제통계사무의 총괄에 속하는 사항 등은 새로 설치된 통계위원회에 이관되어 통계국은 통계조사 실시기관의 하나로 되었다.

또한, 일본통계제도는 비약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각 성·청에 통계담당부국 등이 차례로 설치되었다.

- 1947년 4월 농림성 통계조사국 신설
- 1947년 6월 상공성 조사통계국 신설
- 1947년 5월 후생성 관방위생통계부 신설
- 1947년 노동성 노동통계국 신설
- 1948년 대장성 관방조사통계부 신설
- 문부성 조사보급국 통계과
- 경제안정본부 관방통계과
- 경제안정본부 재정금융국 국민소득조사실 등

그 후, 1949년 총리부 설치에 따라 총리청 통계국은 『총리부 통계국』으로 되었고, 통계국외에 농림성, 통상산업성, 후생성 및 노동성에 통계조사부(또는 조사통계부)를 두었으며, 대장성, 문부성 등 8성·청에 통계과(또는 조사과)를 설치하였다.

- 1956년 건설성에 조사통계과 설치
- 1958년 법무성에 조사통계과 설치
- 1963년 운수성 대신관방에 통계조사부 설치

한편, 통계위원회는 그 후, 1952년 행정관리청과 통합하여 『행정관리청 통계기준부』로 되었

고, 1957년에는 『행정관리국 통계기준국』, 1968년에는 『행정관리청 행정관리국 통계 주간』으로 변경되었다.

1984년 사회·경제 진전에 따라 통계개선발전을 가일층 추진하기 위해, 총리부 통계국 및 행정관리청 행정관리국 통계주간을 통합하여 『총리청 통계국』, 총리부 통계국 제표부는 총무청 시설기관인 『총무청 통계센타』로 되어 일본통계 행정의 중추적 기능에 맞는 체제로 정비되었다.

2001년 중앙 성·청 재편에 따라 통계국 및 통계센타는 『총리성 통계국』 및 『총무성 통계센타』로 되었다.

2003년 4월에는 통계센타가 독립행정법인화되었고, 통계연수소는 총무성의 시설 등 기관으로 되었다.

2005년 8월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한 통계의 정비를 추진하고자 통계제도, 통계행정에 관한 기획·입안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통계국 통계기준부의 기능이 『정책통괄관(통계기준 담당)』으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47년 제정이래 60년 만에 통계법이 전면 개정 공포(2007년 5월)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통계심의회가 폐지되고 전문적이며 중립, 공정한 제3차 기관으로서 내각부에 『통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일본의 통계관계 연표(중앙통계기관중심)〉

- 1871년(明治 4년) 태정관 정원에 『정표과』를 설치
- 1881년(明治 14년) 태정관에 『통계원』을 설치
- 1885년(明治 18년) 내각제도 발족에 따라 통계원을 폐지, 『내각 통계국』 설치
- 1920년(大政 9년) 내각통계국과 군수국을 통합, 내각에 『국세원』 설치,
통계부문은 동원의 제1부로 됨
- 1922년(大政 11년) 국세원이 폐지, 동원 제1부는 『내각통계국(외국)』으로 됨
- 1924년(大政 13년) 『내각통계국(내국)』으로 됨
- 1942년(昭和 17년) 행정기구 개혁에 따라 내각통계국은 『통계국(외국)』으로 되고, 동 국장은 기획
원총재의 지휘감독을 받음
- 1943년(昭和 18년) 기획원 폐지와 동반하여 통계국은 『내각통계국』으로 됨
- 1946년(昭和 21년) 통계위원회 설치(내각통계국소관 중 행정 각부통계의 통계의 통일에 관한 사
무, 국제통계에 관한 총괄사무 등을 이관)

- 1947년(昭和 22년) 총리청 설치에 따라 내각통계국은『총리청 통계국』으로 됨
- 1948년(昭和 23년) 임시직원양성소는 통계직원양성소로 됨
- 1949년(昭和 24년) 총리부 설치에 따라 총리청 통계국은『총리부 통계국』, 통계위원회는 총리부의 외국으로 됨
- 1952년(昭和 27년) 통계위원회는 행정 관리청과 통합하여『행정관리청 통계기준부』로 됨. 또, 자문기관으로서 통계심의회를 설치함
- 1957년(昭和 32년) 행정관리청 통계기준부는 행정관리청 통계기준국으로 됨
- 1968년(昭和 43년) 행정관리청 통계기준국은 행정관리청 행정관리국 통계주간으로 됨
- 1971년(昭和 46년) 통계직원 양성소는 총리부 통계연수소(부속기관)으로 됨
- 1984년(昭和 59년) 총무청 설치에 따라 총리부 통계국과 행정관리청 행정관리국 통계주간을 통합·재편하여『총무청 통계국』과『총무청 통계센터』로 되고, 통계센터에 통계연수소를 부설
- 2001년(平成 13년) 총무청 설치에 따라 총무청 통계국은『총무성 통계국』, 통계센터는『총무성 통계센터』로 됨
- 2003년(平成 15년) 통계센터는 독립행정 법인화되었고, 통계센터 통계연수소는『총무성 통계연수소(시설등 기관)』로 됨
- 2005년(平成 17년) 통계국 통계기준부는『정책통괄관(통계기준담당)』으로 됨
- 2007년(平成 19년) 통계법 전면개정 및 이에 근거, 내각부에 통계위원회 설치

2. 현 일본통계기구 등 현황

가. 통계기구 및 업무

(1) 중앙조직

2차 대전 후 조직의 합리화, 정원의 감축 등을 목표로 수차례에 걸친 행정개혁이 단행되었다. 이 때, 각 성·청에서 형식적·일률적으로 삭감이 요구되었는데, 이 와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부문이 통계부문이었다.

이에 따라, 2008년 4월 1일 현재 중앙통계조직<그림1>은 총무성 통계국외에 후생노동성에 통계정보부, 농림수산성에 통계부, 경제산업성에 조사통계부, 국토교통성에 정보관리부를 두고 있으나 기타 각성은 통계과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내각부의 경제사회종합연구소에 경기통계부와 국민경제계산부를 두고 있고, 재무성의 재무종합정책연구소에 조사통계부를 두고 있을

뿐이다. 각성의 지금까지의 통계과는 기획과, 종합정책과 등에 흡수되어 통계소관과는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2) 지방조직

지방의 통계조직은 일부 성·청의 지방지국 이외에는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정촌 등)를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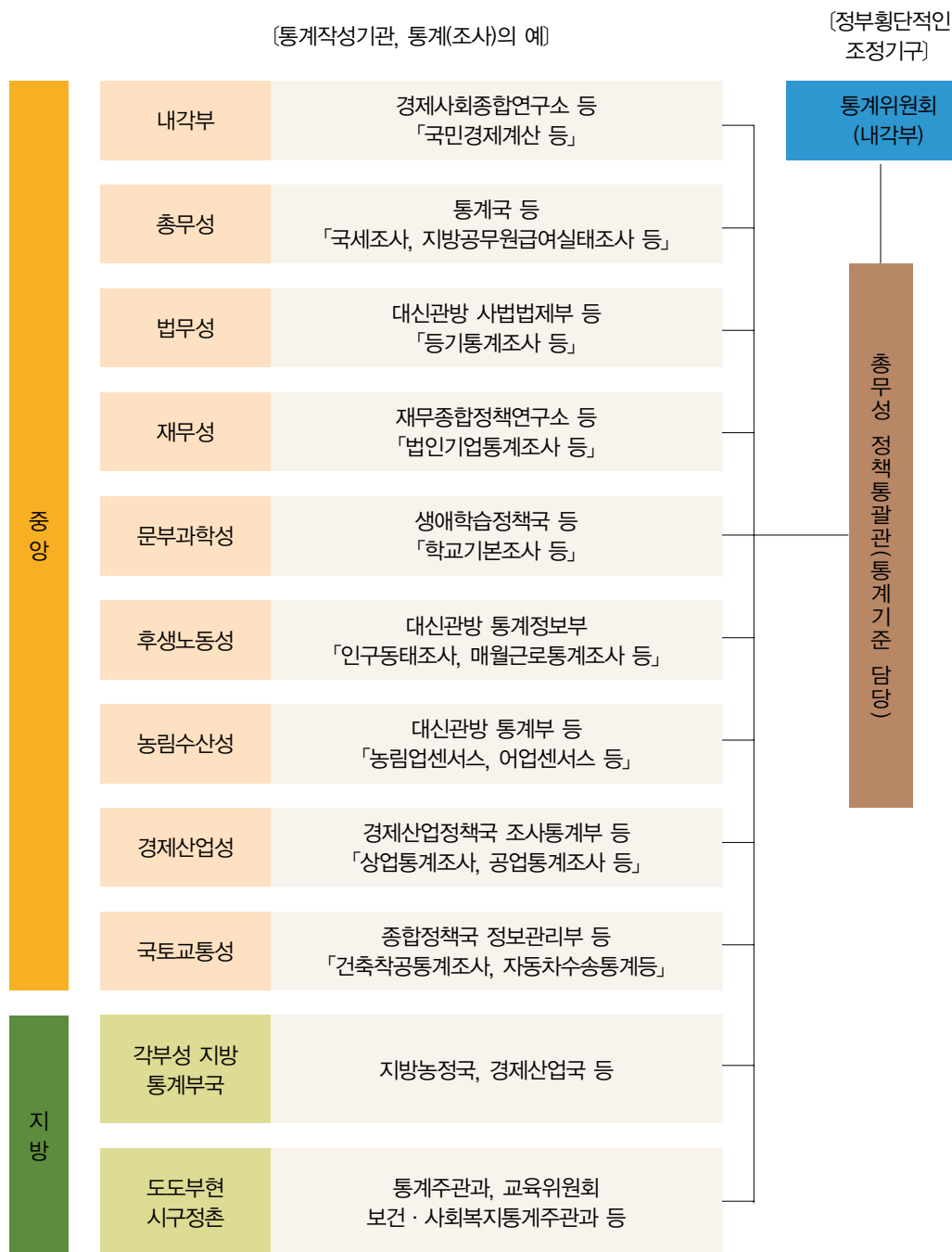
농림수산성은 지방농정국, 경제산업성은 경제산업국(총무기획부), 국토교통성은 지방운수국, 인사원은 지방사무국 등을 두고 각각 소관 통계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의 경우에는 도도부현 경찰본부 범죄통계·교통사고통계주관과, 총무성(통계국)은 도도부현 통계주관과, 문부과학성은 도도부현교육위원회, 후생노동성은 도도부현 보건통계주관과, 사회복지통계주관과 등, 국토교통성은 지방지국외에 도도부현 건축·토목주관과, 도도부현 주관과 등에 당해 소관 통계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각 도도부현의 통계주관과는 국가 통계조사의 실시와 함께 현 자체의 행정통계 등을 작성하고 있다.

국가통계조사의 경우, 과거에는 지방공공단체에 위임하여 실시하였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제의 개정으로 국가의 위탁사무로 되었기 때문에 현의 형편에 따라 수탁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통계직원수도 큰 폭으로 감소(1947년 5,030명→2007년 2,103명)하여 대단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림1. 일본의 주요 통계행정기구 및 총무성정책통괄관(통계기준담당) 업무



※ 2008년 4월 1일 현재

〈통계조직 일람표(일부기관제외)〉

【내각부】

(가) 중앙조직

- 대신 관방에서 통계위원회를 담당
- 정책통관관(경제재정분석담당)
- 국민생활국 소비자기획과(소비자행정추진실)
- 경제사회종합연구소 경기통계부 및 국민경제계산부 등

【경찰청】

(가) 중앙조직

- 형사국 형사기획과
- 교통국 교통기획과

(나) 지방지국 등

- 도도부현 경찰본부 범죄통계·교통사고통계주관과(98기관)

【총무성】

(가) 중앙조직

- 자치행정국 자치정책과(지역정보정책실, 공무원과(급여능률추진실))
- 정보통신정책국 종합정책과(정보통신경제실)
- 통계국 통계조사부 조사기획과, 국제통계과, 경제통계과, 경제기본구조통계과, 소비통계과, 노동력인구통계실, 물가통계실 등
- 정책통관관(통계기준담당) 통계기획관리관, 통계심사관, 국제통계관리관
- 통계연구소
- 독립행정법인 통계센터 등

(나) 지방지국 등

- 도도부현 통계주관과, 시정촌 통계계 등

【법무성】

(가) 중앙조직

- 대신관방 사법법제부 사법법제과

【재무성】

(가) 중앙조직

- 대신관방 종합정책과
- 주계국 급여공제과, 조사과
- 관세국 조사과
- 이재국 총무과(연조·염사업실), 국유재산기획과(국유재산기획과 정보실)
-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조사통계부

(나) 지방지국 등

- 재무(지)국 경제조사과(10기관)
- 이재부 주계과(10기관)
- 재무사무소 재무과(42기관)
- 세관조사부 조사통계과(9기관)

【문부과학성】

(가) 중앙조직

- 생애학습정책국 조사기획과
- 과학기술·학술정책국 조사조정과

(나) 지방지국 등

-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조사통계주관과(47기관)

【후생노동성】

(가) 중앙조직

- 대신관방 통계정보부 기획과, 인구동태·보건통계과, 사회통계과, 고용통계과, 임금복지통계과 등

(나) 지방지국 등

- 지방노동국
- 도도부현·지정도시 등 보건통계주관과(103기관), 보건소(517기관), 사회복지통계주관과(103기관), 복지사무소(1,239기관) 등
- 도도부현 통계주관과(47기관), 노정주관과(47기관)

【농림수산성】

(가) 중앙조직

- 대신관방 통계부 관리과, 통계기획과(시스템관리실), 경영·구조통계과(센서스통계실), 생산유통소비통계과(소비통계실)

(나) 지방지국 등

- 지방농정국(통계부)(7기관) - 통계·정보센터(25기관)
- 지방농정사무소(통계부) - 통계·정보센터(132기관) 등

【경제산업성】

(가) 중앙조직

- 경제산업정책국 조사통계부

(나) 지방지국 등

- 경제산업국 총무기획부 조사과(8기관)

【국토교통성】

(가) 중앙조직

- 종합정책국 정보관리부 정보안전·조사과(건설통계실, 교통통계실)

- 토지·수자원국 토지정보과

(나) 지방지국 등

- 도도부현 건축·토목주관과(47기관), 도도부현 항만주관과(40기관)
- 지방운수국(9기관)

【환경성】

(가) 중앙조직

- 종합환경정책국 환경계획과

【인사원】

(가) 중앙조직

- 사무총국 총무과 등

(나) 지방지국 등

- 지방사무국(9기관), 도도부현 인사위원회

나. 통계직원수

2차 대전 후 조직의 합리화, 정원의 감축 등을 목표로 수차례에 걸친 행정개혁이 단행되었다. 이 때, 각 성·청에서 형식적·일률적으로 삭감이 요구되었는데, 이 와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부문이 통계부문이었다.

그 동안의 통계인력추이를 보면, 중앙정부가 1949년도에 30,065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4,377명으로 1/7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은 1949년 4,345명에서 2008년 2,061명으로 절반 이상이 줄어 들었다.

표1. 중앙 정부의 통계직원수 추이(단위 : 명)

연도	계	본성	지방지분국
1960년	18,684	4,951	13,733
1965년	19,002	5,241	13,761
1969년	17,505	4,959	12,546
1976년	14,159	4,250	9,909
1980년	13,278	4,016	9,262
1985년	12,221	3,744	8,477
1992년	10,071	3,401	6,670
1998년	9,163	3,156	6,007
2004년	6,270	1,753	4,517
2008년	4,377	1,584	2,793

※ 자료출처 : 총무성 「통계기준연보」
재단법인 일본통계협회 「통계제도로론」(島村 史郎 著)

표2. 도도부현의 연도별 통계전문직원수 추이(단위 : 명)

1947	1967	1969	1976	1980	1985	1992	1998	2004	2008
5,030	3,233	3,158	2,921	2,829	2,693	2,509	2,378	2,242	2,061

※ 자료출처 : 총무성 「통계기준연보」

표3. 최근 10년간 통계직원수 추이(명)

연도	본성청	지방지분국	중앙계	지방계 (도도부현)
1998	3,156	6,007	9,163	2,378
1999	3,056	5,936	8,992	2,358
2000	2,977	5,846	8,823	2,338
2001	2,854	5,717	8,571	2,314
2002	2,816	5,655	8,471	2,290
2003	1,824	5,556	7,380	2,266
2004	1,753	4,517	6,270	2,242
2005	1,740	4,269	6,009	2,219
2006	1,713	3,894	5,607	2,146
2007	1,607	3,332	4,939	2,103
2008	1,584	2,793	4,377	2,060

※ 자료출처 : 일본총무성 통계국 홈페이지 및 「통계기준연보」

표4. 각성·청별 통계직원수(2008년 4월 1일 현재)

	본성청(명)	지방지분국(명)	합계(명)
내 각 부	78	—	78
경 찰 청	6	—	6
총 무 성	580	—	580
법 무 성	8	—	8
재 무 성	21	49	70
문부과학성	21	—	21
후생노동성	284	—	284
농림수산성	281	2,677	2,958
경제산업성	237	67	304
국토교통성	53	—	53
인 사 원	15	—	15
계	1,584	2,793	4,377

※ 자료출처 : 일본총무성「통계기준연보」

다. 성·청별 통계조사 및 통계관련 업무 내용

(1) 총무성 정책통괄관(통계기준담당) 주요업무

분산형 통계기구 하에서 필요한 통계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통계조사의 중복으로 국민에게 과대한 부담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책통괄관(통계기준담당)이 통계에 관한 정부횡단적인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가) 통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기획, 입안 추진

- 통계관계 법령의 제정·개폐
-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통계 정비, 추진
- 공적 통계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안의 책정 등

(나) 통계 조사의 심사, 조정

- 국가통계 체계상 주요 통계인 지정통계의 지정
- 각 부성이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심사 조정 등
- 각 부성 통계부문예산의 사전 심사
- 각 부성청이 공동작업으로 실시하는 산업연관표의 작성

(다) 통계에 관한 기준의 설정

- 일본표준산업분류, 일본표준직업분류, 일본표준상품분류 등의 기준설정·개정

(라) 통계조사환경 정비

- 통계조사원 확보대책 사업 실시
- 통계의 보급, 홍보 등

(마) 국제 통계 사무의 총괄

- 국제 회의에의 대응
- 국제적인 통계 사업에의 참가
- 통계정보, 데이터의 교환 등

(바) 통계연수에 관한 국제 협력

- UN 아시아 태평양 통계연수소에 있어서의 연수실시 협력 지원

(2) 총무성 통계국

사회경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세조사를 비롯한 국가 중요통계조사를 기획·입안 및 실시하는 국가통계기구에 있어서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 인구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

- 국세조사(지정통계 제1호, 5년 주기, 전수조사)
- 인구추계(가공통계, 매월)
- 주민기본대장 인구이동보고(보고통계, 매월)

(나) 주택·토지에 관한 통계

- 주택·토지 통계조사(지정통계 제14호, 5년 주기, 표본조사)

(다) 고용에 관한 통계

- 노동력조사(지정통계 제30호, 매월, 표본조사)
- 취업구조기본조사(지정통계 제87호, 5년, 표본조사)

(라) 사회생활관련 통계

- 사회생활기본조사(지정통계 제114호, 5년 주기, 표본조사)

(마) 사업소·기업활동에 관한 통계

- 경제센서스 - 기초조사(2009년 7월 제1회 실시예정, 전수조사)
- 경제센서스 - 활동조사(2012년 2월 제1회 실시예정, 전수조사)
- 사업소·기업통계조사(지정통계 제2호, 2006년까지 5년주기, 전수조사)
- 서비스업기본통계조사(지정통계 제117호, 2004까지 5년주기, 표본조사)
- 개인기업경제조사(지정통계 제57호, 분기별, 표본조사)
- 과학기술연구조사(지정통계 제61호, 매월, 표본조사)
- 서비스산업동향조사(승인통계, 매월, 표본조사)

(바) 가계에 관한 통계

- 가계조사(지정통계 제56호, 매월, 표본조사)
- 가계소비상향조사(승인통계, 매월, 표본조사)
- 전국소비실태조사(지정통계 제97호, 5년 주기, 표본조사)

(사) 물가에 관한 통계

- 소매물가통계조사(지정통계 제35호, 매월, 표본조사)
- 전국물가통계조사(지정통계 제 108호, 5년 주기, 표본조사)
- ※ 소비자물가지수(CPI)(가공통계, 매월)

(3) 기타 각 부·성의 주요 통계작성현황

【내각부】

- 경기동향, 기계수주통계조사,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 소비동향조사 등
- 국민경제계산, 현민경제계산, 민간기업자본수축, 민간비영리단체실태조사 등
- 경기관측조사, 소비자단체기본조사 등

【경찰청】

- 생활안전확보에 관한 통계 등
산업폐기물 사범 검거상황, 수난, 산악조난 개황, 소년보호도 및 보호개황, 소년비행 등 개요, 약물정세, 총기정세, 범죄정세 등
- 수사 활동에 관한 통계 등
범죄 통계자료, 범죄정세, 위조통화 발급매수 등
- 폭력단 대책에 관한 통계 등
폭력단 구성원수 등
- 국제 범죄 대책에 관한 통계 등
국제 조직 범죄 대책 등
- 안전, 쾌적한 교통 확보에 관한 통계 등
교통사고 발생 상황, 교통사고 통계, 운전면허 통계 등
- 사이버 범죄에 관한 통계

【법무성】

- 소송사건통계, 등기통계, 검찰통계, 부인보호통계, 교정통계, 소년교정통계, 보호통계, 호적통계, 공탁통계, 인권침해사건통계, 출입국관리통계 작성
- 등록외국인통계 작성

【재무성】

- 법인기업통계조사,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 주류제조업투입조사 등
- 재정통계 작성
- 의료상황실태조사 실시
- 국유재산통계 작성
- 무역통계 작성

【문부과학성】

- 학교기본조사, 학교교원통계조사, 사회교육조사, 학교보건통계조사 등
- 민간기업연구활동에 관한 조사 등
- 기술예측조사 등

【후생노동성】

- 인구동태조사 등
- 약사공업생산동태조사, 의료시설통계, 환자조사 등
- 매월노동통계조사, 임금구조기본조사 등
- 국민생활기초통계 등

【농림수산성】

- 농림업센서스, 어업센서스 등
- 작물통계, 농업경영통계, 어면어업생산통계, 목재통계 등
- 우유유제품통계 등

【경제산업성】

- 공업통계조사, 상업통계, 특정서비스산업실태통계, 경제산업성 기업활동기본통계, 상공업 실태기본통계 등
- 경제산업성 생산동태통계, 상업동태통계조사, 가스산업생산동태통계, 석유제품수급동태 통계 등
- 매장광량통계, 경제산업성 특정업종 석유등 소비통계 등

【국토교통성】

- 건축착공통계, 건설공사통계, 법인토지기본통계 등
- 항만조사, 조선조기통계, 선원노동통계 등
- 철도차량 등 생산동태통계조사, 자동차운송통계, 내항선박운송통계 등

【환경성】

- 대기오염물질배출량종합조사, 수질오염물질배출량종합조사 등
- 환경친화적 기업행동조사, 온천이용시설실태조사 등

【인사원】

- 일반직국가공무원 임용상황조사, 국가공무원 사인조사 등
- 국가공무원급여 등 실태조사, 직종별 민간급여실태조사 등

- 민간기업 근무조건제도 등 조사, 민간기업연금제도조사, 민간기업퇴직금실태조사 등
- 퇴직공무원생활상황조사 등

〈각부성별 최근의 통계작성현황〉

표5. 연도별 지정통계조사 실시건수 추이

	1988년	1993년	2003년	2008년
총 무 성	8	7	7	7(14)
재 무 성	2	2	2	2(2)
문부과학성	3	3	2	3(4)
후생노동성	11	8	7	7(7)
농림수산성	7	8	6	6(7)
경제산업성	15	14	8	8(12)
국토교통성	9	9	10	9(9)
계	55	51	42	42(55)

※ ()내는 지정통계수임

※ 자료출처 : 일본총무성 「통계기준연보」 재단법인 일본통계협회 「통계제도론」(島村 史郎 著)

표6. 각종통계조사 실시, 승인 및 수리건수(2008년 4월~2009.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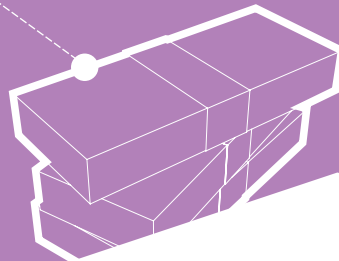
통계구분	지정통계	승인통계	보고(신고)통계		
			신규	변경	중지
내 각 부	-	9	-	-	-
총 무 성	7	7(1)	-	-	-
재 무 성	2	3	-	-	-
문부과학성	3	8(1)	-	4	-
후생노동성	7	40(1)	2	10	3
농림수산성	6	17(1)	1	4	-
경제산업성	8	23(4)	-	-	-
국토교통성	9	24(1)	1	2	2
환 경 성	-	4(1)	-	-	-
방 위 성	-	1	-	-	-
인 사 원	-	-	-	3	-
부성청계	42	131	4	23	5
지방공공단체등	-	-	566	55	16
합 계	42	131	570	78	21
			669		

※ 승인통계의 ()내는 복수 부성의 공동주관조사이며, 합계는 일원화하여 계상

※ 자료출처 : 일본총무성 「통계기준연보」 및 통계국홈페이지

UN & OECD

통계 활동



I. 들어가면서

IT발전과 자유무역의 확대로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성 있는 통계를 생산, 보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사회 환경에 발맞추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 등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통계 생산, 보급의 국제적인 표준을 만들고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통계청 역시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흐름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양질의 통계를 생산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에 대표적 국제기구인 UN과 OECD의 통계 조직과 활동 및 최근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 1) 1. 절대빈곤 및 기아 해결 2. 초등교육 달성 3. 양성평등과 여권신장 4. 유아사망률 감소
5. 산모보건 개선 6. HIV/AIDS, 말라리아 퇴치 7.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립 8.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

II. UN

1. 개요

□ 조직 및 주요 기능

UNSD(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유엔통계처)는 DESA(Depart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Affairs, 유엔경제사회국) 산하기관으로 각 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보급한다. 또한 국가 간 데이터의 비교가능성의 증진을 위해서 통계 방법 및 분류, 정의의 국제적 표준을 만들고 각 국에 국제적 표준에 대한 사용을 독려한다. 이를 위해 기술협력 등 각종 통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통계 활동을 지원하며 통계연감, 세계통계 포켓북 등의 주기적인 간행물 출간 및 온라인을 통한 데이터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UNESC(United Nations Economics and Social Council,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UNSC(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유엔통계위원회)가 있다. 1947년 설립된 UNSC는 개념 설정, 방법론의 발전 및 범국가적 수준의 이행 등 통계적 기준을 설정하는 최고의 의사 결정체로 연 1회 UN 뉴욕본부에서 각 국의 NSO(National Statistical Office, 국가통계기관)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계 관련 의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

□ 주요 사업

○ 천년선언(The Millennium Declaration)

2000년 9월, 유엔 정상회의에서는 147명의 정부 대표들이 모여 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발표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바탕 위에 발전이 있으며, 기본 인권을 위한 빈곤 퇴치가 가능함에 인식을 같이 했다. 천년선언은 2015년까지 하루에 1달러미만 생활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기아, 질병, 양성평등, 여권신장, 기본교육 보장, 지속발전을 위한 의제21 지원,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한 비전들은 8개의¹⁾ MDG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로 구체화되었다. 매년 사무국은 IMF, 세계은행, OECD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를 정하고 2015까지 진척상황을 측정할 지표를 정하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지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 Poverty Statistics

UNSD는 빈곤 통계 및 빈곤 측정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정책 담당자 및 통계학

자들의 개별 국가 및 범국가적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고자 work programme을 창설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UNSD는 2003년 4월 빈곤통계 핸드북 출간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패널 토론, 4개의 지역 워크숍, 1개의 전문가 그룹 회의를 포함한 프로젝트 진행 내용과 핸드북 개발 및 중간 결과물은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

2. 제 40차 UN통계위원회

□ 개 요

제 40차 UN통계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뉴욕 UN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기 통계청장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5명의 대표 단원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공식의제 관련 회의에서는 먼저 남아프리카의 Mr Pali Lehohla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기후변화와 공식통계를 비롯한 농업통계, 에너지통계, 국민계정, 보건통계, 노동통계 등 13개 경제, 사회통계 관련 의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부속회의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듯, 금융위기의 영향과 공식통계를 주제로 한 비공개 특별회의 및 공식통계 혁신 세미나 등이 열렸다. 우리나라는 OECD의장단 국가로서 김대기 前 통계청장은 OECD의장단 비공개 회의에 참여하여 2009년 OECD 업무실행계획을 심의하였다.

□ 주요 논의사항

○ 기후변화와 공식통계

기후변화가 미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국가 통계기관의 측정 및 분석 책임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과 12월 각각 오슬로와 서울에서는 기후변화와 공식통계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어 각 국은 기후변화정책 및 감독을 위한 공식통계 이용 증대에 대해 합의하고 관련 통계의 공식통계 편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제 40차 UN통계위원회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39차 통계위원회 요청에 따라 호주 통계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공식통계의 기여방안을 검토하고 공식통계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권고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공식통계의 역할로써 통계기준 개발 시 기후변화를 고려한 기준을 공표하고 기후변화의 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보를 통합한 툴의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환경경제계정을 개선하여 발전시키고 기후 변화의 영향, 취약성, 적응 분석을 위해 각 국간 모범사례를 교환하며 중·장기적으로는 GIS 및 공간 정보에 기반한 관련 통계의 이용을 독려하고 국제 표준 개정전

략의 이행 등을 권고하고 있다.

동 의제와 관련해서 김대기 前 통계청장은 기후변화 관련 통계의 공식통계 편입을 권고하는 호주 통계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정부의 주요 아젠다인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소개하면서 개도국의 관련 통계작성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비록 Non-Annex I 국가이지만 Annex I 국가의 의무사항 중 하나인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을 현재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통계청은 동 시스템 구축 관련 통계의 이해 및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할 예정이다.

○ “금융위기 영향 및 공식통계” 비공개회의

제 40차 UN통계위원회 부속회의로 금융위기 영향과 공식통계를 주제로 2월 22일 UNSD, World Bank, IMF 공동주관 및 UN통계처장의 주재 하에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통계의 역할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금번 회의에서 IMF는 현 세계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시경제 지표의 보완, 통계의 현실적합성 제고, 신속한 자료 갱신, SDDS(Special Data Dissemination Standard, 특별자료 제공기준)를 통한 투명성 제고, IMF Intranet을 통한 국가별 금융지표 연계방안 및 의사 소통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World Bank 는 적기 자료제공 및 가구의 소비지출, 주택 시장, 빈곤 등의 사회통계 생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UN통계청은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NA 2008)가 국제적으로 연동된 경제 상황을 기술하는 거시경제 계정으로서 자료 부족 현황을 파악하고 대차대조표 및 금융계정 보완을 평가하는 개념적 준거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 되었다.

김대기 前 통계청장은 세계적 시각에서 현 금융위기를 바라보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통계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신흥개도국의 자금흐름에 관한 지표를 개발, 보완함으로써 위기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World Bank, IMF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III. OECD

1. 개요

□ 조직 및 주요 기능

OECD 통계 조직은 STD(Statistics Directorate, 통계국)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연구 및 정책

분석을 담당하는 사무국의 각 부서에서도 직접 소관 통계를 담당하는 분권형 구조이다. STD는 1992년 설립되었으며 실제 국민계정, 단기 경제지표, 무역 등 거시경제 통계와 노동력, 경기 관련 통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통계 활동은 경제국, 교육국, 노동 사회 사무국 등²⁾ 8개의 사무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STD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정책 분석과 결정을 위한 적시성 있는 통계 정보 공급
-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인 통계 기준, 시스템, 분류 개발
- OECD와 외부 통계 기관과의 통계활동 조율
- 조직 내부의 통계활동 조율을 위한 매커니즘 제공

OECD 통계 위원회는 2004년 4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회원국 통계 기관장회의를 공식 통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SAG(Statistical Advisory Group, 통계자문그룹)을 위원회 의장단(Bureau)으로 변경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위원회는 연 1회 OECD 회원국 통계기관장들이 모여 OECD본부가 있는 파리와 UN유럽본부가 있는 제네바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모든 자료는 OLIS(oecd.int)를 통해 제공된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OECD 생산통계의 고품질 유지, 통계국 사업 및 예산 통할
- OECD 여타 위원회 및 사무국의 통계활동 관련 계획 입안 조인
- 각 위원회와의 협력하에 해당분야별 통계작성 방법론에 대한 권고안 승인
- OECD와 회원국간 통계 및 통계정보(metadata) 교환을 위한 표준방식 승인 - 통계국장 이 제안한 의제에 대한 의사결정

□ 주요 사업

○ OECD 글로벌 프로젝트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 발전에 대한 측정 지표로써 GDP의 한계가 대두되면서 경제상황에만 초점을 맞춘 지표로는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없고, 경제, 사회 및 환경관련 이슈를 포괄하는 통합지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공통의 경험이나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토론이 추진되지 않고 각국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개별적인 형

2) 개발협력국(DCD), 경제국(ECO), 교육국(EDU), 고용노동사회국(ELSA), 환경국(ENV), 금융재정기업국(DAF), 조세정책행정센터(CTP), 공공관리지역개발국(GOV), 과학기술산업국(STI)

태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던 시기에 2005년 제1차 OECD세계포럼이 이탈리아 팔레모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43개국 540여명이 참가하고 150여명의 연사, 좌장, 토론자들이 참여해 사회 발전측정 논의의 모멘텀을 유지, 강화시키기 위해 주요 지표에 대한 중기프로젝트의 출범과 2~3년 내 제2차 세계포럼을 추진하자는 행동계획을 도출하였다.

이후 2006년 3월 2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던 벨라지오회의와 각 대륙별 사전회의(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아랍 등)를 거쳐 2007년 6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2차 OECD세계포럼이 개최되었다. 여기서 채택된 이스탄불 선언을 통해 국제 사회는 지역공동체가 21세기에 적합한 발전의 의미를 고찰하여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에 의한 사회발전 측정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확고한 통계자료 및 지표에 근거한 사회발전 논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 변화에 관한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특히 개도국의 통계능력구축을 위해 선진국들에게 투자 장려 등과 같은 실천을 요구하였다.

이스탄불 회의를 계기로 선언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2008년 7월 글로벌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출범되어 다자간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발전 측정을 연구하고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 홍보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하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ICT툴의 개발 및 보급을 들 수 있다. 금년 10월에는 통계, 지식, 정책에 관한 제 3차 OECD 세계포럼이 부산에서 개최되어 사회발전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통계, 지식, 정책에 관한 제 3차 OECD 세계포럼

- 일시 및 장소 : 2009.10.27(화)~30(금) , 부산 BEXSCO
- 주최 및 주관 : 통계청, OECD
- 참석자 : 각 국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대표, 재계인사, NGO 대표, 언론인 등 130개국 1500명
- 회의 목적 : GDP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사회, 환경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 개념 정립
사회발전 측정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논의

2. 제 6차 OECD통계위원회

□ 개 요

제 6차 OECD통계위원회가 6월 10일 오후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UNECE본부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인실 통계청장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3명의 대표 단원이 회의에 참가

하여 세계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 통계기관장들과 교류를 통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신의 통계 정보와 이슈를 파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제 1차 OECD 통계위원회 설립 이래 매년 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2년 임기의³⁾ 의장단에 첫 선임된 이후 2008년 재선임되어 통계위원회의 사업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이번 통계위원회에서는 세계 경제 위기에서의 통계의 역할, 사회진보측정 등 총 9개의 공식 의제에 대해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주요 논의 사항

○ 세계위기에서의 통계의 역할

금번 경제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와 사회위기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통계의 미비가 원인은 아니지만 통계의 해석방법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금융 위기시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국민계정시스템)는 금융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금융자산 및 부채를 측정하기 위한 시장 가격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거 수년간 빈곤과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개발이 강조되어 왔으나 여전히 단기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위기의 특징을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통계당국의 마이크로데이터 수집 필요 등이 요구되며 아울러 다양한 금융·비금융 회계 개발과 함께 분야별 현상 변화를 나타내는 핵심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위기시 소득 뿐 아니라 부(富)에 관한 상태와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소득과 부의 분배에 대한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사회점검시스템(Social Watch System)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OECD는 주요거시경제변수에 대한 분기계정 개발,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조사 실시 확대한다 경제위기시 필요한 주요통계를 선정하여 2010판 OECD Factbook을 발간하고 기존의 OECD 통계 웹사이트를 보완하여 경제위기시 이용 가능한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 통합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 개발 방향

OECD의 통합 글로벌 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 방향은 크게 SDMX(Statistical Data and

3) 의 장 : Brian Pink (호주 통계청장) 부의장국 : 프랑스, 미국

임기 2년의 의장단은 3개국 외에 한국, 영국, 핀란드, 터키, 네덜란드이며 총 31개국 통계기관장을 멤버로 하여 구성

Metadata Exchange, 통계 데이터 및 메타 데이터 교환)를 이용한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공유와 OECD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소프트웨어 공유로 볼 수 있다. SDMX의 주요 목적은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와 교환을 촉진하고 기술과 표준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기관의 보고 부담을 경감 시키고 사용자를 위한 통계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유용성 향상에 있다.

글로벌 통계 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는 또다른 방법은 소프트웨어 요소를 발전시키고 모든 국제기구로 하여금 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 일이다. 통계데이터와 메타데이터를 생산, 저장, 보급을 관리하는 OECD 통계정보시스템의 세 가지 주요 요소(StatWorks, MetaStore, OECD.Stat)는 기타 국제기구와 가장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써 IT기술과 접목하여 통계의 전 과정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제 데이터의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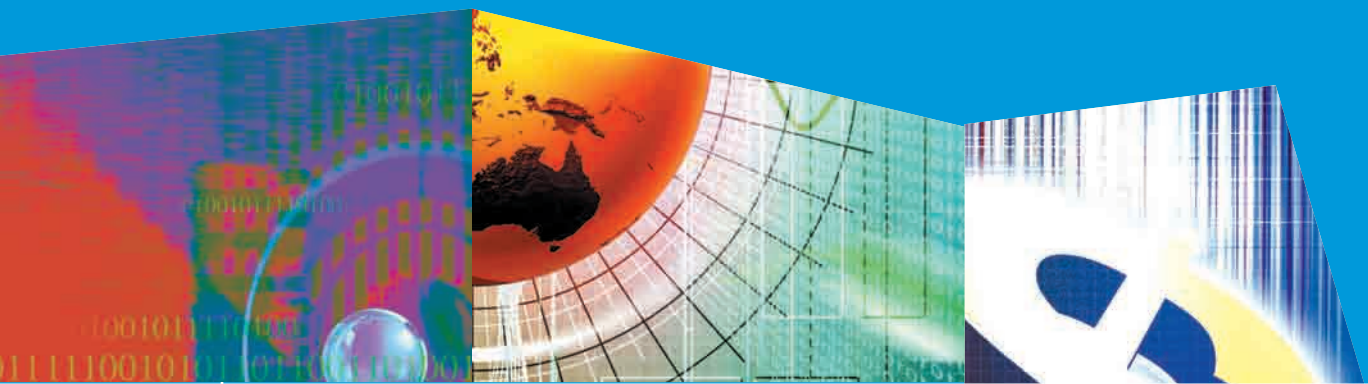
OECD외에도 여타 국제기구들도 개별적으로 글로벌 통계WJDQHTLTMXPADP 기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공유하나 이들은 전반적인 활동을 다루기보다는 특정 단계의 통계자료 처리과정에 특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국제기구들이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것은 분명 효율성 관점에서 각 국에 이점이 될 수 있지만 관련 기구의 역할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의 복잡성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맺음말

UN, OECD뿐 아니라 각종 전문가 회의 등에서는 통계의 여러 영역에 걸쳐 발전적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이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 뿐 아니라 글로벌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그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 통계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 10월 부산에서 개최 될 제 3차 OECD 세계포럼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했던 사회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키고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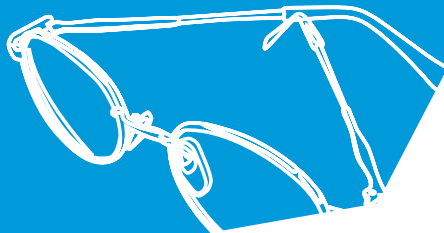
UNSD 웹사이트 : <http://unstats.un.org/unsd/default.htm>
 OECD 통계포털 웹사이트 : http://www.oecd.org/statsportal/0,3352,en_2825_293564_1_1_1_1_1,00.html
 OECD 통계위원회 웹사이트 : <http://oecd.int>
 해외통계동향 Vol.2,3,4



조사방법론 I 강좌-마케팅조사에 대한 새로운 통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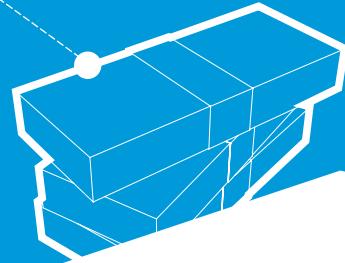
e-나라지표 소개 및 활용_통계청 이진석 사무관

Classroom



통계교실

[한국통계진흥원] 1. 마케팅조사에 대한 새로운 통찰



구자룡

밸류바인컨설팅(주) 대표컨설턴트/경영학박사

[마케팅조사 결과의 전략적 활용]

1. 마케팅조사에 대한 새로운 통찰
2. 소비자 내면의 심층분석을 통한 관계의 구축
3. 소비자 인식속의 포지셔닝분석을 통한 브랜드 구축
4. 제품의 속성분석 및 테스트 마케팅을 통한 신제품 개발
5. 브랜드 자산의 측정과 분석을 통한 전략적 브랜드 관리

마케팅조사에 대한 새로운 생각

기업 경영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 중에는 재무적인 지표를 이용한 경영분석 결과물이 있다. 즉, 회계 처리에 의한 분석결과물을 통해 계획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물은 과거의 결과지표로 미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영자나 마케터에게 유용한 정보로써는 기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결과물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조사에 의한 통계치일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거시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개별기업의 경영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는 직접적인 정보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각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마케팅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마케팅조사에 대한 연구방법론과 분석기법이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지만 실무자들이 편하게 통계 결과물을 이용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해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좀 더 전략적으로 통계 결과물을 업무에 활용할 수 없을까? 기존에 많은 조사결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마케팅 성과를 이룬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조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한스-게오르크 호이젤은 자신의 저서(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BRAIN VIEW))에서 ‘우리는 시장조사에 수십억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고객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엑스레이 광선 같은 것을 이용해 고객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고객의 진정한 욕구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라고 한바 있다.

오늘날 우리들은 고객의 진정한 욕구를 알아보고자 수많은 조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 종류의 보고서를 접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조사결과 중에서 과연 쓸 만한 내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보지 않을 수 없다. 기업에서 실시하는 마케팅조사의 80% 이상은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론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지적도 있다. 즉, 마케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 보다는 경영자나 마케팅 담당자의 자기 확신을 검증하는 차원으로 마케팅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경영자나 마케팅 담당자의 고정관념이 시장의 실패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마케팅조사에 대해 방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 결과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마케팅조사에 대한 고정관념

먼저 한 예를 살펴보자. 국내 굴지의 가구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마케팅조사를 진행하면서 과거에 조사된 관련 보고서를 열람하고자 했다. 그때 해당 실무 담당자로부터 “우리가 자주 조

사를 하지만 쓸모 있는 자료는 없어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과연 쓸모 있는 자료가 없었을까? 아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우리가 조사하고자 했던 내용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조사된 바 있고, 마케팅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다. 문제는 조사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내부 전문가 혹은 실무자가 없다는 점이었다. 단지 마케팅조사를 관행적으로 수행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한 번 마케팅조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자. 왜 마케팅조사를 하는 것인가? 아마도 마케팅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에 대해, 소비자에 대해 잘 모를 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조사의 결과물을 읽어보면 원하는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일수 있다. 조사설계가 잘못되어서, 분석이 잘못되어서, 해석이 잘못되어서 그럴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케팅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왔었다. 특히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치를 의사결정을 위한 결정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마치 절대적인 기준인양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써 전략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마케팅 실패는 대부분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통찰의 잘못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결과 및 통계정보는 중요한 마케팅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및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결과가 아니라 숫자(통계치) 이면에 있는 고객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어 전략적으로 마케팅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성과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구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 단편적인 숫자들 속을 관통하는 능력, 즉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마케팅 담당자에게 필요한 것은 조사 자체가 아니라 조사결과에 대한 통찰력이다.

그리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면서 소비자, 특히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소비자들은 구매 대상 제품의 주요 속성들을 나열하고 각 속성별로 중요성을 평가한 다음 속성별로 비교대상 제품들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평점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구매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매하고 있다. 어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매결정 과정은 습관이나 기타 무의식적인 동인에서 비롯되며 소비자들의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거의 자동화된 과정이라고 한다.

마케팅 담당자들 역시 일상생활에서는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로서 자신의 구매의사결정은 무

의식적으로 하면서 담당하고 있는 제품의 담당자가 되면 그 제품의 소비자들은 합리적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모순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마케팅 현상을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상급관리자나 경영자에게 자신의 지식과 논리성을 강조하여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또는 상급관리자나 경영자가 그러한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진정 유능한 경영자는, 또한 진정 유능한 마케팅 담당자는 지식과 논리가 아니라 미래의 시장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존의 마케팅조사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케팅조사의 결과를 사용하고자 하는 담당자들이 진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치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 있는 소비자의 진정한 욕구, 숨어있는 욕구를 읽어내고 시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정보이다. 즉, 표층적인 정보가 아니라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마케팅조사에 대해 새로운 관점

먼저 마케팅조사(Marketing Research)는 ‘마케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기회에 대한 규명 및 해결과 관련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수집하며, 분석하고, 보급하며, 사용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는 마케팅조사를 ‘회사가 당면한 특정 마케팅 상황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기획, 수집, 분석하고 보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정리하면, 마케팅조사는 체계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필요한 결과를 얻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단, 그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마케팅조사의 바람직한 목표는 소비자(혹은 고객)와 그들이 지닌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측정하여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해석하고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물론 마케팅조사의 진정한 목표는 경영진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조사결과 자체가 의사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마케팅의 주요 의사결정요소인 고객의 욕구, 신제품개발, 시장세분화, 포지셔닝, 마케팅 믹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마케팅 성과 등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 시장의 변화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조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먼저 소비자들은 단편적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사고한다. 신경과학자들은 사람들

의 사고가 선형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사람들은 케이크를 먹을 때 케이크 원료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케이크를 통째로 한꺼번에 맛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MP3 플레이어를 구매할 때, 가격, 용량, 음질, 디자인 등 각 구성요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요소들을 한꺼번에 고려하여 제품을 구매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요소 때문에 구매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통합적으로 고려한 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조사의 결과를 단편적으로 사용한다면 마케팅 담당자들이 생각했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마케팅 조사의 양은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 두 가지 측면에서 양과 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조사의 규모를 대량으로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본수가 크면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무한정 표본수가 커진다고 하여 신뢰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마케팅조사의 경우 모집단과 표본프레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정 규모, 즉 통계처리에 문제가 없는 정도의 표본수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시간적인 제약 또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면 족하다.

그리고 조사의 결과물, 즉 보고서의 양을 엄청나게 늘리는 경우도 문제 중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통계편을 포함한 보고서의 전체 쪽수가 1,000쪽을 넘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렇게 해야 뭔가 조사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과연 누가 다시 들여다볼 것인가? 여기서 어떤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작 중요한 소비자의 행동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나 전략적 시사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조사의 양보다는 조사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셋째, 조사의 결과치는 대부분 숫자(통계치)로 되어 있다. 대다수 마케팅 담당자들은 숫자가 바로 의사결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그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비록 마케팅에 실패하더라도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소비자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요한 것은 통계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숫자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넷째, 조사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실제 마케팅조사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목적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진행되거나 맹목적으로 진행되는 경

우들이 많다는 것이다. 전년도에 했던 조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대로 해야 마케팅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물론 고객만족도나 서비스품질, 또는 브랜드자산을 조사한다면 해당 기업의 고유 모델에 의해 지표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전년도와 동일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조사목적은 분명하게 지표 추이 분석에 의한 전략개발 및 개선 대안의 수립 등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조사하면 뭐든지 다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조사해도 응답자들이 표현하지 않는 내용, 또는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질문하면 무엇이든지 소비자들이 대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문제(조사내용)에 대해 사전에 생각해 본적도 없고 시간을 내어 그 문제를 지금 생각할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요청된 조사에 대해 모든 것을 대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즉 응답에 따른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는 표층적인 현상만을 답하지 그 내면에 깊숙이 숨어 있는 욕구, 즉 심층적인 생각은 겉으로 잘 들어 내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내면의 정보를 읽어 내고 아이디어를 찾아서 이를 마케팅 전략 개발에 활용하여 마케팅 성과를 높여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마케팅조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해야 마케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시냇가의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야 안전하다. 마케팅조사는 바로 시냇가의 돌다리를 미리 두드려봄으로써 발을 내디뎌도 되는 돌인지 그렇지 않는 돌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제대로 조사한다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은 예측이 가능할 때가 많다.

마케팅조사 결과의 전략적 활용 및 새로운 통찰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소비자 경험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개 그들은 자신의 선입견에 기초하여 설문 문항과 답안을 설계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는 질문만 던지게 된다. 일례로 미국의 일류 신용카드업체 경영자는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해 형성된 일화적인 증거(anecdotal evidence)를 근거로 젊은 성인들이 특정한 이유로 신용카드 보유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특정한 이유에 초점을 맞춘 설문을 설계하여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경영자의 가정을 검증하는 데 그치고 말았을 뿐, 경영자 자신은 그 조사설계 자체에 편견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실제로 그 경영자가 조사할 동안 경쟁업체는 신용카드 보유동인을 경영자가 생각하는 원인에 한정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업체는 다양한 잠재동인을 밝힐 수 있었고, 그러한 동인도 소비자 개인이 카드를 사용하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 카드회사는 조사를 통해 획득한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훨씬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함으로써 목표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제럴드 잘트먼, *How Customers Think*).

마케팅조사는 어떤 정보를, 어떤 정보원으로부터, 어떤 수단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조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여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적합하게 분석했을 때 그 결과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시냇가의 돌다리를 두드렸는데 잘못된 정보로 왜곡되어 있는 결과를 믿고 돌다리를 건넌다면 보기에는 안전할 것 같으나 실제로는 물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왜곡이 없는 온전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TV광고의 소재로 사용된 실험조사의 예를 가지고 조사의 목적과 한계, 그리고 오용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미 알려진 광고이므로 여기서는 실제 브랜드를 노출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최근에 집행된 맥도널드의 '맥카페' 광고는 실험이라는 방법을 통해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는 광고의 소재로 선택된 실험에 오류가 있고 그 오류가 조사방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왜곡된 결과가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맥카페의 브랜드매니저나 광고대행사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이 브랜드의 특성을 제시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이러한 실험을 기획했을 수도 있으나 만약에 이 조사결과를 진짜로 이해하고 전략을 구상했다면 아마도 잘못된 조사의 결과로 인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할 필요가 있다.

예제의 광고를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먼저 여러 명의 연기자가 동일한 커피에 대해 2,000원과 4,000원 짜리 커피 중에서 모두 4,000원짜리를 선택하게 하고 마지막 피실험자에게 의견을 요구하는데 피실험자는 고민하다가 4,000원짜리 커피를 선택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이 광고에서 실제 실험 장면이라는 자막을 보냄으로써 광고를 시청하는 소비자들에게 실험의 결과를 믿도록 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실험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 앞의 연

기자들에 의해 피실험자는 자기 의지와는 달리 사회적인 정의(여기서는 4,000원짜리 커피 선택)에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만 보편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자기 의지와는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편승효과(band-wagen effect)라고 하는데 주변의 여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실험설계는 응답오류를 일으키도록 설계된 잘못된 설계이다. 올바르게 실험을 하고자 했다면 아마도 1대1의 비공개 실험을 했어야 했다. 만약 이렇게 실험을 했다면 그 결과는 아마도 광고로 보여진 내용과는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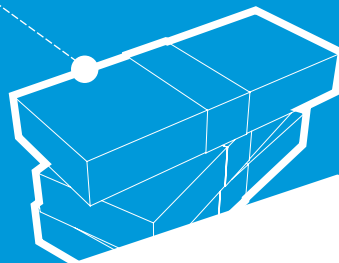
그리고 또 다른 광고들에서는 한 여성이 동일한 커피에 대해 평가 요구를 받고, 2,000원짜리 커피와 4,000원짜리 커피에 대한 맛 평가를 하게 된다. 그 결과 피실험자 모두 4,000원짜리 커피가 자기 입맛에 맞고 더 좋다고 평가 한다. 여기서 동일한 커피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맛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가격에 의존해서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반소비자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백로효과(snob effect)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기 위해 보다 비싼 가격을 선택한다는 속물 근성을 은근히 비꼬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실험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블라인드테스트(blind-test)를 하는 것으로 보여 지지만 실제로는 제품의 브랜드가 아닌 가격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브랜드 테스트(brand-test)라고 할 수 있다. 즉, 가격이 브랜드 역할을 함으로써 응답자들은 가격에 의해 품질을 평가하는 전형적인 가격-품질 연상고리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품질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격이 높은 경우 그 제품이 더 좋은 제품으로 인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만약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설계된 실험이라고 간주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실험장면이라고 자막으로 보여준 이상 이 실험은 잘못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사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악용하거나 혹은 잘 모르고 하거나 모든 경우에 시장 혹은 소비자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도출하여 그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여 사용한다는데 따른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마케팅 성공을 위한 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조사 설계와 분석, 그리고 검증을 거쳐 정확하게 사용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시한번 조사방법에 대해, 그리고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해 새로운 통찰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e-나라지표 소개 및 활용



이진석 통계청 통계정책과 사무관

1. e-나라지표란 무엇인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알고 싶는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와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되지?” “통계는 찾았는데 도대체 이 수치가 의미하는게 무엇인지 이해하는게 쉽지도 않고...”

필요한 통계를 빠르고 손쉽게 찾으면서 그 의미 또한 정확히 이해하고 싶다면 그 해답은 바로 e-나라지표(www.index.go.kr)에서 찾을 수 있다.

e-나라지표는 국가정책의 수립, 국정운영 상황의 점검 및 정책성과의 측정 등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35개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지표를 모아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로 정식명칭은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이다.

e-나라지표는 국정 전 분야에 걸친 각종 주요지표에 대해 정확한 통계, 그래프 및 생생한 의미분석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정책입안자 모두에게 국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나라지표 분야별 지표 현황〉

구분	합계	총량지표	경제	사회	문화	정무
지표수	690	44	313	218	37	78

대분류	중분류	지표수	대분류	중분류	지표수
총량지표	국토/인구	12	사회	복지	27
	행정일반	18		보건	18
	자치행정	13		환경	25
	공동체	1		노동	31
경제	거시경제	22		교육	42
	금융	32		보훈	16
	재정	51		여성/가족	23
	산업동향	30		청소년	8
	공정거래	9		경찰	13
	중소기업	13		해양경찰	6
	건설	23		재난안전	9
	부동산	20		문화/예술/산업	16
	교통	15	문화	관광	7
	해양	14		체육	7
	농업	18		문화재	7
	임업	11		외교	15
	어업	4	정무	통일(남북)	7
	과학기술	14		국방	17
	정보통신	16		병무	4
	조달	8		법무	35
	특허	6		합계	690
	기상	9			

3. 다른 통계 제공 사이트와 다른점은 무엇인가?

최근에는 e-나라지표 이외에도 통계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여러 통계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시스템과 비교할 때, e-나라지표는 무엇이 특별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통계정보시스템인 통계청「KOSIS」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주로 연구 목적의 세분화된 자료를 찾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의「경제통계시스템(Ecos)」은 그 제공범위가 경제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통계수치가 가지는 의미까지 함께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

반면, e-나라지표는 690종의 각 개별지표가 통계표, 그래프, 의미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통계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흐름과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프를 통해서 우선 지표의 흐름을 눈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통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미분석에서는 지표의 개념, 의의 및 활용도, 통계수치의 변동 요인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다. (<그림 3> 참조)

또한 이런 설명자료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 정책보고서 등 관련파일도 첨부되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내용파악 및 분석도 가능하다. 즉 과거 어떠한 정책의 결과로 우리가 현 위치에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e-나라지표 시스템은 일방적으로 정부의 시각만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통계수치의 변동 요인 등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e-나라지표 시스템은 1차적으로 정책입안자와 정책평가자들의 수고를 덜어준다.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찾으려고 관계기관과 연락하고, 인터넷의 여기저기를 헤매었던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정책기초자료 = 아, e-나라지표」라는 등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본인이 찾고자 하는 자료뿐 아니라 유관부처의 자료들 또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부처의 시각을 객관적인 통계지표에 근거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과 비판을 수용함으로써 건설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림 3〉 지표 구성화면



4. 어디에 활용할 수 있나?

2006년 9월 대국민 서비스 이후 2009년 5월까지 e-나라지표 방문자수는 68만여명을 넘었으며, 월 6만건 정도의 지표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 대부분은 주로 정책이나 연구 또는 국정흐름 파악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e-나라지표 활용수기 공모를 통한 지표 활용 사례를 보면 국가 정책의 흐름과 결정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숙제까지 e-나라지표는 아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지표 활용 사례

- 정책결정 : 정부정책 수립, 결정 및 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계획 : 공공보건의료 사업 등 계획 수립에 활용
- 계약수주 : 신재생에너지 지표를 활용한 사업제안서로 계약수주
- 교육활용 : 초/중/고 학습자료 및 과제로 활용
- 취업준비 : 진로희망 분야에 대한 향후 인력수요 예측 등

5. e-나라지표의 주요기능은?

▷ e-나라지표 접속주소 : <http://www.index.go.kr>

▷ 지표 분류

- 분야별(총량, 경제, 사회, 문화, 정부), 부처별, 지표성격별로 지표 분류

▷ 주요지표 서비스

- 각 분야별 이용도가 높은 48개 주요지표를 검색할 수 있음

▷ 마이페이지 기능

- 이용자가 관심 있는 지표를 편리하게 그룹관리 할 수 있으며, 최근에 검색창을 통해 입력한 검색어를 일자별로 확인가능

▷ 통합검색

- 주제분류 및 지표명 등을 모를 경우 찾고자 하는 통계의 키워드 또는 관련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단어가 포함된 모든 지표자료를 검색하며 부문별로 구분해 보여주므로 간편하게 지표검색 가능

주요지표 서비스

대분류	주요 지표명	
총량지표 (6)	· 총인구, 인구성장률 · 국내인구 이동 · 출생 사망 추이	· 지역내총생산(GRDP) ·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 남녀별 연령별 인구구조
경제 (20)	· 건설투자 동향 · 산업생산 동향 · 서비스업 동향 · 설비투자 동향 · 소비동향 · 생산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 취업자 수/실업률 추이 · 10대 수출입 품목 · 환율	· 시장금리 추이 · 가계신용 동향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 · 근로소득세 신고 현황 · 법인세 신고현황 · 세무조사 추이 · 전자납부 현황 · 현금영수증 가맹점 현황 ·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 인터넷보급률/컴퓨터 보유율
사회 (14)	· 소득 분배(Gini계수) · 합계출산율 · 만성질환 현황 · 고령자 고용동향 · 비정규직 고용동향 · 외국인근로자 고용동향 · 정규직/비정규직 고용실태	· 청년 고용동향 · GDP 대비 학교교육비 비율 · 유학생 현황 ·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 가족의 형태별 분포 · 국제결혼 현황 · 한부모 가구 비율
문화 (4)	· 공공도서관 현황 · 관광지 방문객 현황	· 해외여행자수 · 관광수지 실적
정무 (4)	· 수교국/미수교국 현황 · GNI대비 및 1인당 ODA 추이	· 병역자원 현황 · 역대사면실시현황

6. 맺음말

e-나라지표는 가장 손쉽게 국가현황의 이모저모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통계사이트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현 경제·사회 변화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하는 신규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책담당자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지표만을 엄선하여 제공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또한 각종 지표의 의미를 보다 쉽고 알차게 기술하도록 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 지표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연계시켜 더욱 편리한 통계포털로 다가가고자 한다.

21세기 국가 경영의 과학화, 바로 “e-나라지표”가 만들어 간다.



도박사의 오류

꿈의 5할타자

나도 “미스터 주부”

통계 어설프게알면 독, 제대로알면 약

R e s t

창가의
여유

도박사의 오류

얼마 전에 TV의 한 토크쇼에서 부산의 딸부자집이라고 불리는 가정에서 부부와 일곱 명의 딸이 등장해서 재미있는 가족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데 프로그램 중간에 사회자가 “어찌다가 딸만 일곱을 낳게 되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딸을 셋을 낳으니깐 사람들이 ‘딸 셋을 잇달아 낳으면 다음 아이는 틀림없이 아들이다’ 라고 하기에 낳았더니 또 딸이데요. 그런데 딸 여섯을 낳으니깐 다음엔 정말로 틀림없이 아들이라고 하기에 또 낳았더니 딸이었어요.” 이 대답에 방청객들은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 말속에는 간단히 웃어넘길 수 없는 확률적 오류가 숨어 있다.

어느 경우에도 아들을 낳을 확률은 $1/2$ 이다. 새로 태어날 아기는 그 전에 딸만 줄줄이 태어났다는 것을 당연히 기억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잇달아 딸을 다섯을 낳았거나 아들을 다섯을 낳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아들을 낳을 확률은 여전히 $1/2$ 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딸을 셋을 잇달아 낳으면 다음에 아들을 낳을 확률이 $1/2$ 보다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도박사의 오류’라고 한다. 도박사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라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

카지노에는 룰렛(roulette)이라는 게임이 있다. 1에서 38까지의 숫자가 적힌 원판을 돌리면서 그 위에 구슬을 떨어뜨린 뒤, 구슬이 어떤 숫자에서 멈추는가 하는 게임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숫자에 돈을 걸고 만약 숫자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을 받는다. 홀수나 혹은 짝수나에 돈을 건다고 할 때 만약 6번 동안 내내 홀수만 계속해서 나왔을 때 다음에 짝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이처럼 앞서서 홀수가 여러 번 나왔을 때 다음번에 짝수가 나올 확률이 $1/2$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도박사의 오류이다. 룰렛의 구슬은 이전에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도박사들은 구슬이 앞에서는 홀수만이 여러 차례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잘못을 한다. 도박사들의 이런 기대와는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다음에 홀수가 나올 확률은 $1/2$ 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도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유명한 소설가 에드가 포우(Edgar Poe)는 주사위 게임에서 2가 계속해서 다섯 번 나왔다면 여섯 번째 시도에서 2가 나올 확률은 $1/6$ 보다 작을 것이라는 주장을 끝내 고집했었다. 그러나 2가 연속 다섯 번이나 나왔어도 다음에 2가 나올 확률은 여전히 $1/6$ 이다. 이 소설가가 라스베가스에 살았다면 돈을 다 잃고 거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일본 왕실에는 30여 년째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 걱정이 많다고 한다. 현 아키히토(明仁)일왕의 아들딸과 사촌의 아들딸을 포함하여 최근 30년간 8번의 출산이 있었으나 모두 딸이었다. 일본의 왕위계승자는 반드시 남자여야 하고 또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왕족의 신분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나가면 왕실에 인적자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왕실관계자들은 큰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한다. 일부 언론과 국민들은 다음에는 틀림없이 아들일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에 태어날 아이는 앞서서 8명이나 딸만 태어났다는 것을 알 턱이 없으며 따라서 다음에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여전히 $1/2$ 이다. 이렇게 기대와 실망을 계속하던 일본 언론과 왕실은 가장 최근에야 아들을 하나 얻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까? 사람들은 동전을 던질 때, 앞면-뒷면-앞면-뒷면-앞면-뒷면이 나올 확률이 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이 나올 확률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1/2$ 이므로 몇 번의 시도에서도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전을 만 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1/2$ 에 수렴하겠지만 10번을 던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앞면 5번, 뒷면 5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면이 10번이나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룰렛에서도 홀수가 나올 확률은 수많은 시도를 했을 때 그 확률이 $1/2$ 이 되는 것이다. 이를 평균의 법칙(law of averages) 혹은 대수(大數)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라고 한다.

대수의 법칙의 의미는 시도(혹은 실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원래의 이론적인 확률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즉, 룰렛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수많은 시도(혹은 실험)를 했을 때 $1/2$ 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수많은 시도’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도를 의미한다. 시간의 흐름위에서 대수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많은 시도 속에 부분적으로는 홀수만 연속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다. 소설이기는 하지만 흥부전에서의 흥부처럼 아들만 열여덟을 낳을 수도 있다.

또한 사람들은 독립적인 사건을 종속적인 것으로 혼동하기도 한다. 내가 빨간 벡타이를 할 확률과 당신이 아침식탁에서 굴비를 먹을 확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것이다. 반대로 사건 A가 사건 B에 영향을 미칠 때는 사건 B는 사건 A에 종속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내일 우산을 들고 나갈 확률은 내일 비가 올 확률에 종속적이다. 비올 확률의 크기에 따라 우산을 들고 갈 확률이 영향을 받는다. 아들을 낳을 확률은 그전에 딸을 낳았다는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독립적이다. 앞에서 홀수가 연달아 나왔다는 사실은 다음에 홀수가 나올 확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독립적인 사건들을 어떤 관계가 있는 종속적인 사건으로 볼 때 도박사의 오류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꿈의 5할타자

한국통계진흥원 사업팀장 김영진

세상에는 너무 혼자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친구 중에 알미울 정도로 잘나가는 녀석이 한놈있다. 우리 사이에서는 그냥 잘난놈으로 통한다. 잘난놈은 뛰어난 두뇌와 월등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준수한 외모와 예술적인 감각까지 갖추었으니 무엇하나 부족한게 없어 보인다.

잘난놈은 지금까지 실패란 단어를 모르고 지내왔다. 그가 원하는 일은 언제나 성공하였고 그것도 언제나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

그의 이런 다재다능한 면 때문에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다. 판사나 의사가 되기를 바랬던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잘난놈이 선택한곳은 의외로 통계학이었다. 당시 그의 이런 행동은 학교에서 큰 화제를 불러왔다.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갈수 있다면 판사나 의사의 길이 월등히 나아가는데 편하기 때문이다.

그당시 잘난놈을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왜 통계학을 선택했냐?”

이 질문에 잘난놈은 글자하나 안틀리고 똑같은 말만 했다.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이 들으면 지랄한다는 말밖에 안나올것 같지만, 어쩌든 그말하던 잘난놈이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일은 역시나 통계학 보다는 그룹사운드의 리드보컬이었다. 최고의 대학의 준수한 외모를 가진 잘난놈의 상품성을 간파한 많은 연예인 기획사들이 그에게 스

카웃 제의를 해왔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파격적인 제안도 많았다고 한다. 잘난놈은 언제나처럼 깊게 빠지지 않고 적당한 수준만 유지 했다.

그당시 고등학교 친구들이 술자리에 모이면 늘하는 얘기가 잘난놈이 졸업하고 무엇을 하느냐였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예상을 했지만 잘난놈은 역시 우리의 상식밖에 있었다.

4학년이 되어 잘난 놈이 갑자기 열심히 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야구였다. 프로야구 선수가 되겠다고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을 했다. 초등학교때부터 열심히 해도 되기 힘들다던 프로야구 선수를 그동안 공부만하던 녀석이 한다고 하니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았다. 모든걸 최고로만 다가진 잘난놈이니깐.

녀석이 생각하는 것을 동문회 술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다.

“좀 어려운 것을 해보고 싶었어. 그냥 하기 쉬운거 말고. 이것저것 해보니 프로야구 선수가 재미있겠더라고, 연봉도 많이 받고, 올림픽에도 나가고, 뭐 게임하면서 돈받는 거잖아. 세상에서 남들 못치도록 공을던지고, 그렇게 어렵게 들어오는 공을 잘치기만 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이보다 좋은 직업이 어디있어.”

모두들 이 말에 토하고 싶을 정도로 속이 메스꺼웠지만 어찌겠나 잘난놈이 하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역시 잘난놈은 그냥 막연히 시작하지는 않았다.

“난 5할타자가 되고 싶어. 아니 5할이 가능하겠더라고. 야구란 결국 투수들이 어떤 공을 던지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어. 내가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확률, 즉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 미리 아는 거야. 야구는 단순 확률로 접근하면 안돼. 바로 베イズ 추론이 필요한거야.”

잘난놈은 언제 준비했는지 야구공을 손에 쥐고 공중으로 한번 던져 손으로 잡더니 투수가 던지는 시늉을 한다. 그 모습이 너무도 멋져서 모두들 자기도 모르게 와하는 감탄사를 내뿜었다.

“내 얘기를 간단한 산수로 증명할수 있어. 내가 그동안 연구해본 바에 의하면 무슨 공이 들어올지 예측이 맞았을 경우 안타칠 확률은 0.6이고 틀렸을 경우는 0.15더군. 그리고 투수가 무슨 공을 던질지 0.8은 맞출 수가 있지. 이 경우 타율이 얼마정도 나올거 같아. 바로 5할이야.”

$$P(H)=P(H|예측)P(예측) + P(H|예측틀림)P(예측틀림)$$

$$= 0.6*0.8+0.15*0.2=0.51$$

P(H) : 안타 칠 가능성

잘난놈은 씩웃 웃으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나의 장점은 바로 이거잖아. 투수들이 무엇을 던질지 거의다 알아 맞출 수가 있지. 그럼 타

울이 어느 정도 가능 할까. 꿈의 타율이 5할은 물론 6할도 가능하지 않을까? 모두들 그 답은 나중 야구장이나 와서 찾아보도록.”

모두들 잘난놈의 말에 식용류를 생맥주처럼 들이킨 것처럼 속이 니글거렸지만 5할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후로 모두들 취직 준비로 바쁘게 보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졸업식이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도서관에서 토익책을 붙잡고 있는 나에게 뜻밖에 소식이 들려왔다. 잘난놈이 프로야구 공개모집에 떨어지고 결국 유학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였다. 아무리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능력을 볼 때 의외의 결과였다. 그후 도서관에서 우연히 잘난놈을 만날 수 있었다. 워낙 잘나가던 놈이라 한번 실패의 충격이 큰 모양이었다. 풀죽은 모습으로 도서관에 와서 책을 찾아보고 있었다. 말을 걸까말까무척 망설였지만 호기심만은 남들한테 절대 뒤지지 않는 천성 때문인지 기어이 잘난놈을 만났다.

잘난놈은 머리를 끄적거리며 안피운던 담배까지 물며 하늘을 보며 탄식하듯 말을 내뱉었다.

“그동안 야구 경기를 보면서 투수들의 패턴을 다 분석 했었지. 일년쯤하니 모든 투수들의 공을 90%가까이 예측이 가능하더라고. 내 생각이 틀렸던게 아니야. 분명 5할이상은 가능했지.”

잘난놈은 말을 마치자마자 한숨을 내쉰다.

“뭘 출제경향을 잘못 짚은 거지. 테스트를 보니 2군 투수 한명이 나와 던지더라고. 애는 컨트롤이 남자 가슴만큼도 없어. 사전확률도 뭐고 없어. 완전 램덤이야. 뭘 알아야 치지. 뭐가 올지 모르는데. 너도 알다시피 예측한 공에 대해서 치는 요령만 일년동안 연습했잖아. 하도 답답해서 끝나고 물었지. 자기도 자기 손을 떠난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래도 말은 잘하더구만. 그게 뭐라나 마구의 일종인 무심투구라더구만. 무심투구는 무슨 무뇌투구지.”

세상에 실패를 모르고 살아왔던, 프로야구에서 5할이상의 타율을 바라보던 잘난놈은 결국 2군 투수의 벽을 넘지 못해 꿈을 접어야만했다.

나도 "미스터주부~"



여러분은 트로피남편, 셔터맨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는가?

혹은 미스터주부, 워킹맘 홈대드라는 말이 더욱 친숙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최근 남성이 가정주부 역할을 하고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는 부부가 여러 장르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005년에 인기리에 방영했던 드라마 '불량주부'에서의 유쾌한 불량주부이야기나 배우 한석규가 가정주부역을 맡았던 영화 'mr.주부퀴즈왕' 그리고 'Hello 아빠육아'와 같은 책에서 공통적인 소재를 가정일을 하는 남성으로 삼았다.

이에따라 가정주부의 역을 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신조어도 생겨났는데 아내가 하는 일이 더 뜻깊다고 생각해 하던일을 벗어나 집안일에 몰두하는 남성을 가르키는 '트로피남편'.

아내가 돈을 벌고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데 약국과 같은 점포시 셔터문을 열고 닫아 아내의 출퇴근을 돕는 남편을 의미하는

셔터맨'등의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드라마, 영화에 이어 소설까지 소재로 삼고 있는 남편들의 가정주부생활!!

도대체 남편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길래 영화와 드라마에서 앞치마를 두른 남자들이

등장하고, 아빠들의 육아를 위한 책들이 잘 팔리는지 통계를 통해 알아보았다.



출처:통계청

성/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성별	활동상태별	2004	2005	2006	2007	2008
남자	계	4,584	4,734	4,885	4,960	5,117
	육아	3	5	5	5	9
	가사	132	116	146	138	142
	통학	2,023	2,033	2,122	2,194	2,259
	연로	827	800	801	785	860
	심신장애	299	302	295	285	292
	그외	1,301	1,478	1,517	1,553	1,555
	기타 등	223	210	175	149	105

출처:통계청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해가 갈수록 남성의 비경제 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 통계를 통해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우선, 비경제활동인구란 경제활동인구에 반대개념으로 구분되며, 15세이상의 일할 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활동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뜻하고 주로 집안일에 종사하는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불로소득자, 종교인을 포함한다.

다음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의 활동상태에 관한 통계이다.



출처:통계청

200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추이는 2004년 450여만 명에서 2007년에는 490여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 경제활동대신 가사 및 육아활동 등 집안에서 가사일을 하는 '남성 주부'는 2007년보다 2008년에 5.6%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 경제 활동인구의 반대개념으로 구분되며, 15세 이상의 일할 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활동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뜻함

이러한 통계사실을 비추어 볼 때 남성들이 원하는, 원하지 않든지 '미스터주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녀성역할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2005년 5월 조선일보 설문조사

Q. 미래의 남편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대상 : 직장여성 345명)

- 1위 가사분담 (51.0%)
- 2위 높은소득 (30.1%)
- 3위 지적능력 (18.6%)
- 4위 외 모 (0.3%)

2005년 12월 서울신문 설문조사

Q. 살림하는 남편에 대한 생각? (대상 : 남녀 대학생 100명)

- * 아내와 맞벌이 상황에서 남편이 실직했다면 집안일을 하는 것은 당연 - 남녀대학생 70%
- * 아내가 직업이 있다면 전업주부로 일할 생각이 있다 - 남자 대학생 40%
- * 직장을 잃었을 때 재취업 하기까지 집안일을 할 생각이 있다 - 남자대학생 87%

이들의 설문조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가사분담과 양육에 있어서 더 이상 남녀의 성 역할이 따로 구분되지 않음을 실감한다. 교과서에서만 보는 남녀평등이 아닌, 사회가 변화하고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내 상황 나의 역할'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고용불안문제와 맞물려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진출의 하나의 여파라 할수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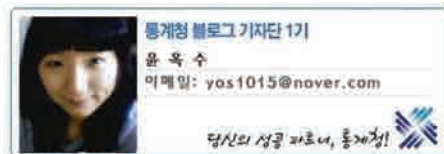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처럼 유쾌하고 왁자지껄한 '미스터주부'만은아니다.

전통적인 유교관이 뿌리 깊은 우리나라에서 '남자주부'라 함은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많은 수의 남자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기를 꺼려하거나 감추려 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 실제로 기자가 주위에 남성주부님들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 하시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염려해서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다. 주부남편이 증가하고 사회적 인식이 많이 변화해도 여전히 우리의 선입관을 버리기는 쉽지 않은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가정주부의 역할은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일이 절대 아니다.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상상 그 이상이다. 최근 노동 가치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육아에 대한 노동 가치를 빼고도 주부1인당 1달간의 노동 가치를 약 110만원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조사가 있었다.

육아에 대한 노동가 치를 월 70~100만원으로 본다면 전업주부일의 경제적 가치는 한 달에 약 180~210만원이 되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 상정된 민법개정안에서도 볼 수 있듯, 이혼 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에서 분할청구권자가 전업주부 경우도 재산형성기여도에 따라 30~50% 선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아도 우리 주부님들의 능력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육아를 하지 않는 남자는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는다' 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육아에 대한 책임은 공동부담이다. 일본 뿐 아니라 북유럽등의 선진국에서도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당당하게 '살림예찬론'을 펼치는 빅미스터주부가 많이 계신다. 이 표지에 모두 담을 수 없지만 전 세계의 미스터맘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공간을 소개하면서 기사를 마치고자 한다.



통계
어설픈게 알면 독,
제대로 알면 약!

이호권

2007년 회사를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소자본 창업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변에서 직장 상사나 친구, 혹은 친지들이 무작정 식당이나 제과점등을 개업했다가 수익을 내지 못해서 문을 닫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시장을 분석해서 제대로 된 창업을 하자고 생각했죠.

사업분야와 입지, 대상계층을 정하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우선 다양한 창업박람회와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다니면서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골목마다 유명 프랜차이즈의 베이커리와 치킨집이 들어서 있어서 우선 이런 외식은 제외하고 나니 선택의 폭은 무척 좁아졌습니다. 몇 가지 안되는 업종중에서 저희 부부의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아침에 과일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업체였습니다. 웰빙열풍으로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특히 과일 도시락이 인기를 끈다는 TV방영 프로그램의 영향도 있었지요.

업종을 정한 뒤에는 어디에서 영업을 할 것인가가 중요해지더군요. 배달 업체라 매장은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되도록 기름값도 아끼고, 직접 매장에서 보고 배달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매장과 배달지역을 일치시키고 싶었습니다. 특히 매장 위치선정과 대상계층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머리를 싸매고 생각한 것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미혼 직장인, 특히 사무직이나 IT쪽이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과일 도시락의 주요 소비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구체적인 수치의 정보를 얻을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창업 컨설턴트에게

의뢰하려고 했더니 만만치 않은 금액의 비용이 들기에 제 손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의외로 인터넷에 인구통계를 치니까 통계청과 바로 연결되어서 SGIS사이트까지 단번에 찾아가서 서울의 구석구석까지 인구 통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20대 후반~30대 중반까지의 사무직과 IT관련 미혼 직장인이 1가구로 많이 사는 곳은 통계내비게이터에서 수백번 검색을 하여 비교한 결과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로디지털단지쪽이 있는 가산동과 대림동쪽이 강남구 역삼동쪽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매장 임대료의 경우에는 대림동쪽이 훨씬 저렴하여서 대림동쪽으로 매장의 위치까지 정하고 바로 가게를 얻고 과일 도시락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했습니다.

매장을 오픈하고 직접 수 천 장의 전단지를 주변 오피스텔과 원룸을 돌며 붙이고, 구로디지털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의 사무실에 견본 과일 도시락을 돌리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업하고 6개월이 되도록 매출은 바닥이었고, 적자만 늘어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혼 직장인들의 아침을 겨냥하여서 시작한 과일도시락의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았고, 지역도 혼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사무직과 IT직종의 직원들이 많은 곳이라 수요가 있을 것 같았는데 도무지 수요가 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통계적으로도 완벽한 것인데 왜 적자만 쌓여가는지 알 수가 없더군요.

아무리 불경기라지만 하루에 채 20개도 안되는 매출로는 가게세를 낼 수도 없어서 나날이 늘어가는 은행 대출에 아내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제 판에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시장조사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입지도 완벽한 곳에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죠.

혼자서 고민 끝에 저희 매장 옆에서 치킨집을 해서 알게 된 형님과 술 한잔을 하면서 저의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형수님이 지나가는 말로 그러시더군요. 이 동네엔 전부 남잔데 남자가 누가 아침에 과일 도시락을 먹냐고. 차라리 밥이나 국을 배달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그렇습니다. 이 동네는 지역특성상 남자 직원이 많은데 저희 부부는 그걸 간과했던 것이지요. 20대~30대의 미혼직장인 이라고만 생각했지 거기에 성별에 대한 취향을 생각지 못한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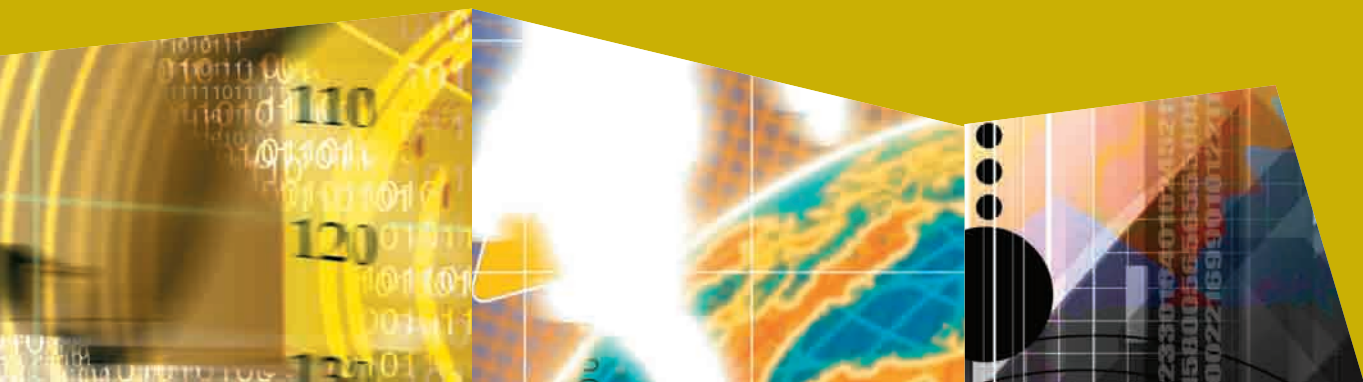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일 도시락을 유지하면서 밥과 국을 배달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것을 물어보니 은행빚이 늘어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아내도 그래 한 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더군요. 우선 기존의 과일도시락을 계속 하면서 낮에 시간이 날 때 아내와 밥과 국 배달 업체나 서비스들을 알아보면서 차라리 우리가 메뉴를 개발하고 해보자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두 달간 준비해서 밥과 국 배달을 시작했는데, 세 달만인 작년 11월에는 고정 배달 회원만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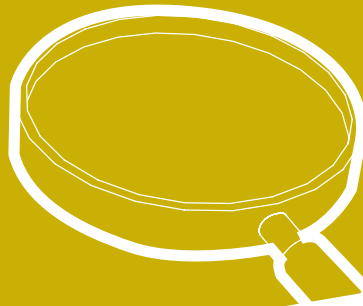
장은 아내가 밤에 도매시장에서 봐오고, 음식은 아내가 장을 봐오면 바로 저와 아내가 새벽에 준비하고, 배달은 저와 배달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매출이 불어나니 힘든 줄을 모르겠네요.

매일 120~13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고 배달하는 것이 힘은 들지만 새벽에 음식준비 3시간, 배달시간 2시간~3시간 등 하루에 총 6~7시간만 일하는 게 아까워서 현재는 하나의 업종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0대~30대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한 배달을 하는 중이니까 계속 타깃을 그쪽으로 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숫자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잘 해석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해석하면 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통계청홈페이지나 SGIS페이지등 통계를 충분히 쉽고 재밌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사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도 사업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Members Firms

회원사동정

보건복지가족정책의

네비게이션! 정책통계담당관

신준호 보건복지가족부 정책통계담당관

♣ 통계가족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복지수요의 급증, 질병구조의 다양화, 국민의 정책참여 욕구 증대 등 향후 보건복지통계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맞추어 2006. 2월 통계전담부서인 '조사통계팀'을 신설하였고, 2008년 8월 직제 변경에 따라 기획조정실 직속으로 '정책통계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현재 정책통계담당관을 포함해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책통계담당관이 하는 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생산하는 통계는 크게 조사통계와 보고통계 및 가공통계로 구분되며, 총 59종('09.6월기준)으로, 29종의 보고통계, 28종의 조사통계, 2종의 가공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다.

01

보건복지가족통계 총괄 조정

① 통계예산심의조정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각 부서의 통계관련 예산요구안을 취합하여 심의함으로써 유사·중복통계를 조정하고 부서별 상이하게 운영되는 통계조사 사례금 등의 기준을 표준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통계관련 자체 예산요구안 심의 : 총 35건 약 320억원

②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강화

정책과 제도의 기반이 되는 통계지표를 구비함으로써 통계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고, 새

로운 정책 및 제도 입안시 입안→점검→평가의 단계별로 통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 '08년 평가실적 138건, '09년 평가실적 33건('09.6.15일 현재)

③ 유사·중복통계 조정

「보건복지가족부 통계관리규정」('08.10.1)에 보건복지가족통계의 신규생산시 정책통계담당관에 사전심사를 받도록 제도화하여 부내 유사·중복통계의 생산을 방지하고 있다.

※ '08년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등 8종 완료, '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 등 14종 추진중

02 보건복지가족통계 인프라 확충

① 통계전문인력 확충

취약한 보건복지가족분야의 통계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정책통계담당관에 통계직렬 신설 검토, 통계청과 인적교류,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 등을 통해 통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② 통계지표의 DB 구축

'09.6.1일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2개 용역수탁사업자에 분산보관되어 있는 23종의 조사통계 원자료 관리를 위한 시스템, 통계정보공유시스템, 통계자료분석시스템 등의 통계종합DB를 구축하여 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 2010년 조사통계원자료 DB구축 예산요구 : 260백만원

③ 대외협력체계 강화

새로운 정책수요에 필요한 복지 맞춤형 통계 개발 등 양 기관의 통계발전에 필요한 업무 협의를 위해 통계청과 “통계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며, 보건복지통계위원회 및 외부전문가 그룹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03 보건복지가족통계 품질제고

① 새로운 통계 개발 및 개선

MB정부의 능동적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신규통계의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09년에도 “능동적 복지확충을 위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등 6종의 새로운 보건복지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 매년 보건복지정책에 필요한 신규통계 개발·개선 계획 : '09년 59종→'12년 70종

② 통계품질진단 강화

국가통계 품질진단기준에 따른 체계적 진단 및 지속적 품질개선을 위해 품질진단 매뉴얼 보급 및 개선사항을 정비하고, 보고통계의 품질제고를 위해 정책별 맞춤형 보고양식 개선, 작성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수기보고에서 전산보고방식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 '09년 우리부 자체 통계품질진단 39종, 통계청 품질진단 5종

③ 국제기준의 통계생산

OECD 등 국제기구의 통계요구에 부응하는 통계를 생산·제공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 제공과 '97년부터 OECD요구통계를 매년 생산·제공, 연차적으로 제출률을 높여가고 있다.

※ 보건통계 OECD제출률 : '02년 54.9% → '04년 60.1% → '08년 73.3%

※ 복지통계 OECD제출률 : '02년 71.2% → '04년 71.2% → '08년 71.2%

04

보건복지가족통계 서비스 제공 확대

① One-stop 통계서비스 제공

통계자료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계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외 주요통계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고, 내·외 통계고객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부 통계소식지 “통계알리미”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

② 통계생산 주기 단축

주요조사통계의 생산주기를 단축하여 시의성있는 통계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통계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다.

※ 환자조사(3년→1년), 영아모성사망조사(3년→1년), 장애인실태조사(5년→3년)

③ 가공통계 생산·확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건강보험 등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의료비, 한국의사회복지지출 등의 가공통계를 생산하여 통계이용자들이 필요한 사회거시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 뒷마당

정책통계담당관은 과장을 포함하여 9명의 작은 인력이지만「국민이 신뢰하는 보건복지가족 통계 생산·제공」이란 비전을 기치로 구성원 모두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수행하는 복지정책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는 네비게이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주축이 되어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각종 경제지표는 이미 일정한 수준에 도달되어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분야지표는 이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분야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임으로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빠른 시일내 OECD국가 등 통계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통계생산과 관리 및 이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글을 맺고자 한다.

Think!
Key
word

- 통계가 중요한 거 모두분들이 아시죠? 통계업무를 하고 있는 정책통계담당관실 직원은 당연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가까운 미래에 통계를 아는 사람이 인정 받는 사회를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통계를 사랑해야죠.(신)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업무의 초석을 다진다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며.....(최)
- 보건복지가족 통계의 영원한 멘토가 되는 그날까지~^^;(변)
- 추상적인 생각보다는 현실적인 생각으로 통계를 생산해야 하며 한 단계 한 단계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인생? “삶은 한순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다가 행복을 느끼면서 죽었으면....”(현)
- 통계 이용자를 위하여 쉽고,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가 서서히 본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상쾌함은 통계부서에 근무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희열이었습니다.(송)
- 보건복지가족부의 모든 통계가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정확한 길잡이 자료가 되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홍)
- 잘못된 통계의 생산은 정책의 실패로 직결될 수 있고, 더욱더 보건복지가족 통계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다. 내 스스로 통계 전문가가 되도록 항상 노력해야겠다.(공)
- 맛있는 맛집은 산골짜기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는다.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신선하고 맛있는 통계가 있다. 이제 남겨진 것은 다양한 메뉴, 친절한 서비스..(이)
- 우리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입맛에 맞는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과거에도 현재도 아마 미래에도 노력 중 일دت(이)

〈붙임〉

보건복지가족부 작성 통계 현황(2009.6.1현재)

□ 보고통계(29종)

일련 번호	통 계 명 칭	관 련 부 서	작성 주기
1	의료기관 실태보고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과	연간
2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현황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반기
3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보고	" 생활위생과	반기
4	암등록 통계	" 암정책과	연간
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현황	" 기초생활보장과	연간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	연간
7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현황	" "	반기
8	사회복지 자원봉사 현황	사회복지정책실 민간복지과	반기
9	노인복지사업 현황보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	연간
10	화장률 현황	" 노인지원과	연간
11	노인학대 현황	" "	월간
12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보고	장애인정책국 재활지원과	연간
1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현황	장애인정책국 "	반기
14	등록장애인 현황	" 장애인정책과	분기
15	장애수당수급자 현황	" 장애인소득보장과	반기
16	소년소녀가정 현황보고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복지과	반기
17	국내입양 현황보고	" "	반기
18	요보호아동 현황보고	" "	반기
19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및 종사자 현황보고	" "	반기
20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 "	반기
21	학대아동보호 현황	" 아동청소년권리과	연간
22	보육시설 및 이용자 통계	" 보육지원과	반기
23	청소년전화(1388) 운영현황	"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월간
24	청소년상담지원 현황	" "	연간
25	국제검역상황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팀	분기
26	법정전염병발생보고	" 전염병감시팀	연간
27	한센병관리사업실적	" 에이즈·결핵관리팀	분기
28	결핵관리 현황	" "	월간
29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출생현황	건강정책국 가족건강과	반기

□ 조사통계(28종)

일련 번호	통 계 명 칭	관 련 부 서		작성 주기
1	환자조사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3년
2	영아사망조사	"	"	3년
3	모성사망조사	"	"	3년
4	선천성이상아조사	"	"	2년
5	취약위기계층아동청소년보호자립지원육구실태 조사	"	"	1회한
6	빈곤층 복지실태 및 복지육구조사	"	"	1회한
7	저출산고령사회정책제감도우선순위조사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고령사회정책과	1회한
8	최저생계비계측조사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5년
9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수요 및 이용)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지원과	5년
10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5년
11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	구강생활위생과	3년
12	흡연실태조사	"	건강증진과	반기
13	가족실태조사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가족정책과	5년
14	노인실태조사	"	"	3년
15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	저출산인구정책과	4년
16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3년
17	장애인편의시설설치 현황보고	"	장애인권익증진과	5년
18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보호과	1년
19	가출청소년쉼터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자립과	1년
20	청소년가치관조사	"	아동청소년정책과	1년
21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아동청소년정책과	3년
22	보육실태조사	"	보육정책과	5년
23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	3년
2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	1년
25	퇴원손상심층조사	"	"	1년
26	전국장내기생충실태조사	"	말라리아·기생충팀	5년
27	인수공통전염병위험군의감염실태조사	"	역학조사팀	1년
28	지역사회건강조사	"	만성병조사팀	1년

□ 가공통계(2종)

일련 번호	통 계 명 칭	관 련 부 서		작성 주기
1	국민의료비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기획조정실	정책통계담당관	1년
2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	"	1년

한 국 통 계 진 흥 원 정보 컨 설 팅 사 업 소 개

알 림 창

◆ 제2회 국가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 안내

- 개최시기 : 2009년 9월 하순경
- 장 소 : 미정
- 발표 및 토론 주제
 - ① 국가통계를 통한 경제 알기
 - ② 인구구조를 통한 대한민국 미래 읽기
 - ③ 국가통계 활용 방법 및 사례
- 자세한 사항은 한국통계진흥원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할 예정임
 - 개별적으로 초청장을 받고 싶으신 분은 메일로 요청 바람(kspi@nso.go.kr)

◆ 제15「통계의 날」기념식 안내

- 개최시기 : 2009. 9. 1(화요일)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대강당
 - 통계작성기관, 유관기관, 학계 주요인사, 통계유공 수상자 등 참석
 - 한국통계진흥원장의 기념사, 한국통계학회장 및 통우회장의 축사, 통계청장의 격려사 등 인사말씀
 - 통계조사 응답자, 민간통계작성기관 관계자 등 통계발전유공자에 대한 표창, 어린이·중학생 통계활용대회 입상자, 대학원생 논문 현상공모 입상자에 대한 시상 등 진행

◆ OECD 세계포럼 개최 안내

- 개최시기 : 2009. 10. 27(화요일) ~ 10. 30(금요일)
- 장 소 : 부산 벡스코(BEXCO)
 - 제 분야별 세계적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 프랑스와 미국 등의 주요 선진통계 사례 소개
 -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

◆ 회원사 모집

- 지난호 통계의 창 참조

통 계 정 보 (전 산 자 료 , 간 행 물) 이 용 안 내

통 계 정 보 (전 산 자 료 , 간 행 물) 이 용 안 내

◆ 통계 정보(전산자료) 이용안내

이제 통계자료가 필요하실 때는 KMDSS(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http://kmdss.nso.go.kr>)에 접속하시거나 한국통계진흥원으로 문의하십시오.

1. 이용 영역

가. 국가통계포털 수록자료

분 야	계 열 수	주 요 수 록 내 용
국토면적, 기후, 행정단위	2,570	행정 구역별 면적, 농경지 면적, 기온, 강수량
인구, 가구, 주택	1,805,158	인구수, 인구이동, 생명표, 가구, 주택수
국민계정, 지역내총생산, 경기종합지수	9,490	국민총생산, 지역내총생산, 경기종합지수
노동, 임금, 경제활동(실업률)	234,054	경제활동인구, 임금, 노동생산성지수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9,152	경지이용, 양곡수급, 농가경제, 농업생산성
광업, 제조업, 산업활동동향	624,176	광공업사업체, 생산, 출하, 재고동향, 주요제품생산량
건설, 도로, 상수도, 항만, 주택현황	4,650	건설업사업체, 건축허가, 도로연장, 상하수도
에너지	857	전력, 무연탄, 석유, 에너지소비
운수, 통신, 관광	3,254	운수업사업체, 육상운송, 해운, 우편, 관광객
물가(소비자, 생산자, 수출입), 농가가격지수	51,398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수출입물가, 농촌물가
총사업체, 도소매업, 서비스업	157,214	행정 구역별 사업체수, 도소매업체수, 도소매판매액
도시가계(소득, 지출)	38,564	전가가계지출, 근로자가계수지, 부급자가계수지
금융, 통화, 증권, 보험	1,100	통화량, 예금 및 대출금, 증권거래, 보험사업
재정(조세, 지방세)	831	재정수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세입세출, 조세수입
보건, 사회보장, 환경	5,569	의료, 의약, 사회보장, 대기 및 수질오염, 의료보호
교육, 문화, 과학	4,041	학교, 도서관, 문화재, 과학기술연구활동
기업경영(자산, 자본, 비용)	28,165	자산, 자본비율, 수익 및 비용관계비율, 기업성장지표
무역, 외환, 국제수지	12,739	수출, 수입, 환율, 외채 · 해외투자, 외환보유
공공행정(공무원, 범죄, 사고, 호적, 등기)	4,790	공무원, 범죄, 사고, 호적 및 등기
기 타		각국별 인구, 수출입, 국민계정, 물가
계	2,997,774	

• 제공형태

- 자료량 : 최근공표 시점부터 최대 과거 30년간 자료
 (자료별로 수록 연도가 일정하지 않으며 특정자료는 시계열이 짧을 수도 있음)
- 자료 주기 : 자료 성질에 따라 월별, 분기별, 연별, 부정기 자료

통 계 정 보 (전 산 자 료 , 간 행 물) 이 용 안 내

나. 인구주택총조사 1%, 2%, 5% 표본 자료

- 인구에 관한 사항 :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만 나이, 출생지, 교육 정도, 통근 통학, 혼인 상태, 1년 전 거주지, 5년 전 거주지, 경제활동, 초혼 연령, 자녀수 등
- 가구에 관한 사항 : 총가구원수, 거처 종류, 사용 방수, 식수 종류, 취사 연료, 난방 시설, 문화 시설 등
- 주택에 관한 사항 : 연 건평, 대지 면적, 총방수, 거주 가구수, 건축 연도 등

다. 기타

공표 자료 이외에도 자료의 신뢰성, 이용목적, 이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미 공표자료, 원시 개별 자료, 명부 자료(사업체, 가구)에 대하여 제공가능 범위 내에서 가공 후 제공

2. 이용 방법

가. 직접이용

KMDSS(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http://kmdss.nso.go.kr>)에 접속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분야(자료 내용)와 연도를 선택하여 신청

나. 신청 및 문의처

- 연락처 : 재단법인「한국통계진흥원」
- 전화 : (02) 3443-7954~6, FAX : 3443-795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 서울지방통계청 103호 (우 135-010)
- E-mail : kspi@nso.go.kr

다. 제공 형태 : CD, E-mail

통 계 정 보 (전 산 자 료 , 간 행 물) 이 용 안 내

통 계 정 보 (전 산 자 료 , 간 행 물) 이 용 안 내

◆ 통계자료(간행물) 이용안내

「한국통계진흥원」은 국내외 통계기관에서 발간하는 각종 통계간행물에 대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위탁판매 및 복제간행승인을 받아 이를 통계이용자에게 적기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간행물(책자, CD 등) 복제발간
- 통계청 간행물(각종 통계조사 보고서 및 통계연감 등)
- 간행물 기획 및 제작
 - 일반인을 위한「통계조사작성총람」발간
 - 통계전문저널「통계의 창」발간
 - 「대한민국 정부수립 6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특집 발간
 - 각종 논문·통계관련 자료 등을 번역 출간
 - 타기관 통계연감 편집·발간 대행

● 이용 안내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 내지 통계정보를 정기적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업체 또는 개인은「한국통계진흥원」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밖에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한국통계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tat.or.kr>를 방문하여 주시거나「한국통계진흥원」으로 전화 또는 메일을 주십시오.

통계적 두뇌를 키워라!

스토쿠 퀴즈

스토쿠(Sudoku)는 가로*세로9×9의 박스 안에 1부터9까지 숫자를
가로,세로는 물론 작은3×3 박스 안에서도 서로 겹치지 않게
써넣는 게임입니다. 머리도 식힐겸 풀어 보세요!

제1회 응모기간

2009.07.01

~

2009.08.01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1만원상당)을 드립니다.

퀴즈 응모방법 ➡ 홈페이지로만 가능 (<http://www.stat.or.kr>)

당첨자 발표 ➡ 홈페이지와 통계의 창 다음호에 발표 됩니다.

6	가	9		5			4	
	4				3	6		1
		7	2	나	4		9	
	9		4					2
3		4			5		6	
	6			7	9	다		4
		1	3			4		
4		라		1	8		마	7
			5	4		1	8	

2009.06

통계의 창

통권 제3호

발행일 | 2009년 6월 30일

발행인 | 전신애

발행처 | (재) 한국통계진흥원

편집대표 | 김태현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

전 화 | 3443-7954~6

팩 스 | 3443-7957

이메일 | kspi@nso.go.kr

디자인 및 진행 | 예감 기획(02-337-3810)

ISSN | 2005-1379

값 12,000원

© 2008, 한국통계진흥원

* 『통계의창』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지의 공식적인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